



2010

##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김 경 혜 · 김 선 자 · 노 은 이

##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2010

## Ⅰ 연구진 Ⅰ

---

연구책임 김 경 혜 • 창의시정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김 선 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노 은 이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현 정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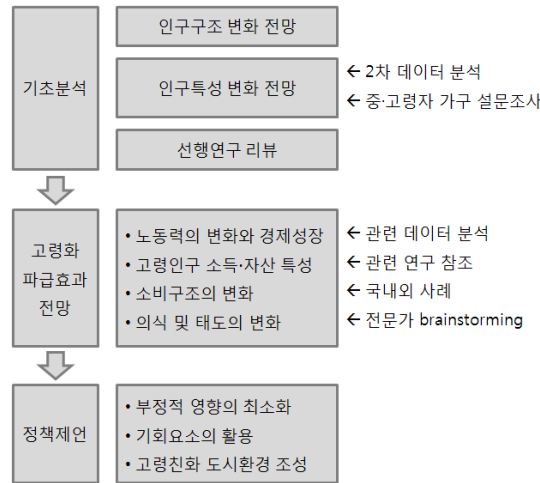
-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 2020년경에는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말 9% 수준에서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환경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령화의 영향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님.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 노인인구의 17%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30년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 고령화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2) 구성 체계와 연구방법

- 연구의 전반적 구성 체계는 <그림 1>과 같음.
  - 기초분석으로 서울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2030년의 인구구조와 인구특성 변화를 전망함. 또한 기초문헌연구로 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서울에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자가 경제, 사회활동의 주요 계층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로 정의하고, i) 노동력 변화와 경제성장, ii) 고령인구의 소득 및 자산특성, iii) 소비구조의 변화, iv) 의식 및 태도의 변화 등 4개 측면에서 초고령 사회를 전망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으로는 2차 데이터 분석과 함께, 서울시 중·고령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도출은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 분야별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진행됨.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및 연구방법

## 2.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1)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 서울은 노동력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됨.

— 서울의 고령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9.4%인 94만명에서 2030년 22.3%인 210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765만명(76.2%)에서 2030년 627만명(66.2%)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 그러나 인구가동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노동력 부족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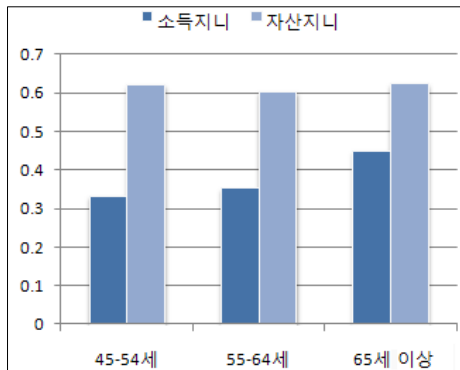
— 서울시 외곽에서 유입되는 출근통행량이 1일 120만건을 초과하고 서울거주 외국인 노동력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가동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함.

— 반면, 서울의 산업구조는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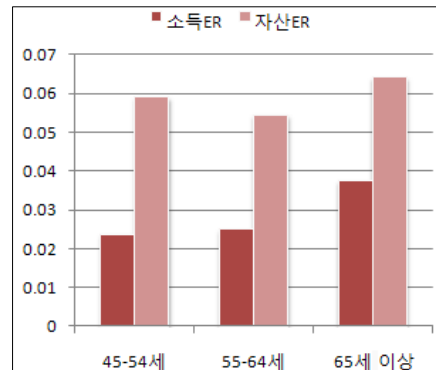
- 노동력 부족과 달리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서울도 예외가 아님.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10년 38.5세, 2030년 42.3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래노인은 현세대 노인보다 학력과 기술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새로운 기술습득능력 한계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 2)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 특성

- 고령자의 소득·자산은 당사자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지만,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자산 특성은 전체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침.
-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2008년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93천원으로 서울시 전 가구 평균소득의 66.9% 수준임.
  - 고령자 중 소득수준이 특히 낮은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구직자 등은 정책개입이 우선 필요한 고위험 집단으로 나타남.
-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함.
  - 그러나 서울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이전소득 의존도는 낮고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산구성에 있어서 현금화가 어렵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것은 위험요소임.
  - 미래노인인 베이비붐 세대도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현재 노인세대보다 노후준비도가 높고, 금융자산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그림 3〉 소득 및 자산 ER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집단의 불균등과 양극화, 노인빈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산부문에서 불균등과 양극화가 더 심각함.

### 3) 소비구조의 변화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주요 소비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소비행태는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은 감소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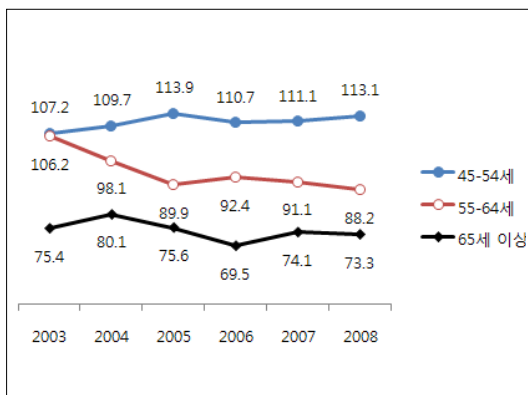
－2008년 고령자가구의 지출수준은 전 가구 평균의 73.3%에 불과하고, 설문조사에서 80.2%가 은퇴 후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함.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가구의 지출감소는 전체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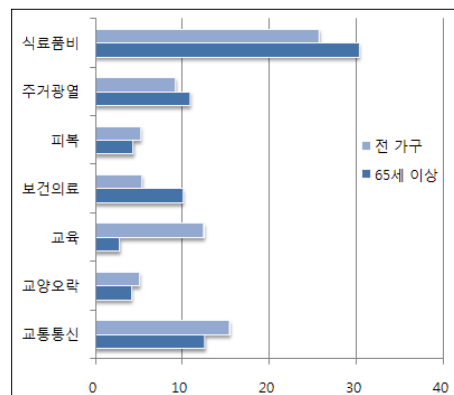
○소비주체로서 노인세대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노년기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체 소비시장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가계지출 구조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추이를 보임.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후 외식비 지출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미래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적극적 소비주체로서 문화, 여가, 레저, 교육 분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전 가구 평균대비 가구지출규모



〈그림 5〉 지출항목 구성

#### 4) 의식 및 태도의 변화

- 미래노인은 개인적 역량이 높는데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자본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대졸 이상이 65세 이상 현재 노인세대에서는 13.4%인데 반해, 45~54세 미래 노인세대에서는 30.7%로 증가함.
  - 미래 노인세대에는 노년기를 제3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신노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의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율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 노인세대의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활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고령화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세대의 등장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3. 서울시의 대응과제

- 초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 첫째,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둘째, 고령화로 인한 기회요소의 활용, 셋째,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구축

#### 1)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 (1) 노인빈곤 예방

-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는 초고령 사회에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노인빈곤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 빈곤노인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재정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소외, 노인자살 등 사회문제를 동반함.
- 따라서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고령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근로가능 고령자의 고용지원 정책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그 외에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이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임.

##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고령자가구의 소비지출 감소는 경기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지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가구의 소비력 유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안정적 소득유지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률 제고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함.
  - 둘째, 노인가구는 대체로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15.4%만이 역모기지 제도 활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은퇴 전부터 자산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노후설계교육이 필요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서울시의 노인복지예산을 추계한 결과는 <표 1>과 같음.
  -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를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 전체 노인복지 재정이 2010년 노인복지예산을 기준으로 2020년에 1.63~1.85배, 2030년에는 2.33~3.0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서울시 노인복지예산 추계 결과 종합

구분		2020	2030
수급률 고정 시	소요액(억원)	10,308	14,737
	2010예산 대비(배)	1.63	2.33
수급률 증가 시	소요액(억원)	11,747	19,603
	2010예산 대비(배)	1.85	3.09

○ 단순 고령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첫째, 재정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보장이므로 노인빈곤 예방이 일차적 과제임.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 연금가입률 제고, 부동산 유통화 등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두 번째로 공공재정에 부담이 큰 것이 노인의료비임. 보건·의료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 체육 분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 고령자는 주거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이웃(네이버후드)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작용할 수 있음.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 마련이 필요함.

## 2)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 미래의 노인은 높은 교육수준 및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구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음.

— 새로운 노인세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피부양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고령자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임.

—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우선 필요함.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교육과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자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사회적 자본으로서 고령자 활용방안은 다양함.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임. 자원봉사 영역에서 노인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의 다양화, 자발적 소모임 활성화, 리더 양성이 필요함.

-둘째, 노인들의 자산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이를 위해 기부문화 확산, 자산신탁제도 시행 등 여건조성이 과제임.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등 사회의 긍정적 롤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사회적 자산의 한 유형임.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와 세대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2)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음.

-서울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노인의 생활양식 변화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서울은 높은 산업기술 경쟁력과 자원의 밀집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큼.

○ 서울시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R&D개발과 서비스 분야임.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서울은 풍부한 공공·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R&D분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수요측면에서 수요창출과 공급측면에서 산업지원임.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실버산업 종합체험관 건립, 장기 rental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함.

-공급자 측면 지원방안으로는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업 인식 개선 등이 서울시의 역할임.

### 3)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고령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83.1%로 나타남.
-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고령친화적 환경은 노인에게 친화적인(Elder-friendly) 환경을 넘어 모든 연령층이 평생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지향하는 Aging-in-community 혹은 Lifelong community의 개념을 등장하게 함.
-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성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이웃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도록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 모델을 개발·지원해야 함. 또한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과 같이 커뮤니티를 파괴할 위험이 높은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함. 노인의 이동편리성을 고려한 교통환경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시환경 개선,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 옵션 개발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개요 .....	3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	4
3.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	6
4. 연구방법 .....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	8
1. 고령화와 경제성장 .....	9
2. 노후보장과 재정부담 .....	10
3. 소비구조의 변화 .....	11
4.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인빈곤 .....	12
5. 세대갈등 .....	12
<b>제2장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b> .....	<b>15</b>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	15
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	15
2. 고령인구 특성 변화 .....	18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설문조사 결과 .....	21
1. 조사개요 .....	21
2. 주요 조사결과 .....	25
<b>제3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b> .....	<b>41</b>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	41
1. 서울의 노동력 변화 .....	41
2. 노동력의 수요·공급 전망 .....	44
3. 소결 .....	48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	49
1. 소득 .....	49

2. 자산 .....	55
3. 불균등과 양극화 .....	58
4. 소결 .....	63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	66
1. 고령자 가계지출 특성 .....	66
2. 소비행태와 의식의 변화 .....	72
3. 소결 .....	75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	76
1. 미래노인의 특성변화 .....	77
2. 사회참여 특성 .....	80
3. 소결 .....	84
<b>제4장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b>	<b>87</b>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	87
1. 노인빈곤 예방 .....	87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	93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	96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	109
1. 사회적 자분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	109
2. 고령친화산업 육성 .....	112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117
1. 필요성 .....	117
2. 고령화 정책 동향 .....	118
3. 서울시의 과제 .....	119
<b>제5장 결론 및 제언 .....</b>	<b>127</b>
<b>참고문헌 .....</b>	<b>133</b>
<b>부    록 .....</b>	<b>139</b>
<b>영문요약 .....</b>	<b>157</b>

## 표 목 차

---

〈표 2-1〉 서울시 고령인구 현황 .....	15
〈표 2-2〉 후기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	17
〈표 2-3〉 서울시 베이비부머 현황 .....	18
〈표 2-4〉 노후준비도 .....	20
〈표 2-5〉 혼자 살기 어려울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 .....	21
〈표 2-6〉 문화·교육 행태 .....	21
〈표 2-7〉 최종 표본할당 .....	22
〈표 2-8〉 조사응답자 일반특성 .....	25
〈표 2-9〉 취업현황 .....	26
〈표 2-10〉 연령 및 소득별 재취업 비율 .....	27
〈표 2-11〉 퇴직 전후 취업직종 변화 .....	27
〈표 2-12〉 퇴직 전후 고용형태 변화 .....	27
〈표 2-1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	28
〈표 2-14〉 은퇴 및 희망은퇴 연령 .....	28
〈표 2-15〉 퇴직이유 .....	28
〈표 2-16〉 구직자 집단 개인특성 .....	29
〈표 2-17〉 퇴직 및 은퇴대비 준비 .....	30
〈표 2-18〉 노후 경제생활 대비 .....	30
〈표 2-19〉 건강생활 .....	31
〈표 2-20〉 걱정거리 .....	31
〈표 2-21〉 걱정거리 논의상대 .....	32
〈표 2-22〉 경제적 도움처 .....	32
〈표 2-23〉 생활만족도 점수 .....	33
〈표 2-24〉 부모부양 경험 및 형태 .....	34
〈표 2-25〉 노후 자녀부양 희망률 .....	34
〈표 2-26〉 세대 간 자원교환 .....	35
〈표 2-27〉 세대 간 자원교환 형태 .....	35
〈표 2-28〉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자 .....	35

〈표 2-29〉 노인복지 추가 세금 부담의사 .....	36
〈표 2-30〉 노인기준연령 .....	36
〈표 2-31〉 서울시 역점사업 우선순위 .....	37
〈표 3-1〉 서울 취업자 연령구성 .....	43
〈표 3-2〉 서울시 시·도 간 인구이동 .....	45
〈표 3-3〉 수도권 출근 통행량 .....	45
〈표 3-4〉 서울거주 외국인 실태 .....	46
〈표 3-5〉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	47
〈표 3-6〉 서울시 고령자가구 월평균 소득 .....	50
〈표 3-7〉 개인특성별 고령자가구 가구소득 .....	51
〈표 3-8〉 가구주 개인특성별 월평균 소득 .....	51
〈표 3-9〉 경제활동 상태별 월평균 가구소득 .....	52
〈표 3-10〉 가구수입 충분도 .....	52
〈표 3-11〉 고령자가구 소득원별 구성 .....	53
〈표 3-12〉 정기적인 수입원 .....	54
〈표 3-13〉 주수입원 .....	55
〈표 3-14〉 서울 고령자가구 총자산 분포 .....	56
〈표 3-15〉 가구주 연령별 자산구성 .....	57
〈표 3-16〉 서울 고령자가구 총부채 분포 .....	57
〈표 3-17〉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	58
〈표 3-18〉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	59
〈표 3-19〉 서울시 소득계층 구조 .....	60
〈표 3-20〉 가구주 연령별 자산 지니계수 .....	62
〈표 3-21〉 고령자가구 소득 ER지수 .....	62
〈표 3-22〉 총자산 ER지수 .....	63
〈표 3-23〉 연령·경제활동상태별 특성 .....	64
〈표 3-24〉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 .....	67
〈표 3-25〉 은퇴 후 가구생활비 지출액 변화 여부 .....	68



〈표 3-26〉 생활비 지출 감소의 주된 이유 .....	69
〈표 3-27〉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지출 구성 .....	70
〈표 3-28〉 은퇴 후 생활비 줄어든 지출항목 .....	71
〈표 3-29〉 은퇴 후 생활비 늘어난 지출항목 .....	72
〈표 3-30〉 현재 고령자와 예비 고령자의 특성 비교 .....	73
〈표 3-31〉 일본 단카이세대의 소비심리 .....	73
〈표 3-32〉 교육수준 .....	77
〈표 3-33〉 평생교육과 인터넷 이용 경험 .....	78
〈표 3-34〉 건강악화 시 희망 동거인 .....	78
〈표 3-35〉 노후 자녀도움 희망여부 .....	79
〈표 3-36〉 자산의 자녀상속 여부 .....	79
〈표 3-37〉 사회단체활동 참가율 .....	80
〈표 3-38〉 사회참여정도 .....	81
〈표 3-39〉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 .....	81
〈표 4-1〉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실적 .....	91
〈표 4-2〉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 교육프로그램 .....	92
〈표 4-3〉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	94
〈표 4-4〉 주택현황과 역모기지제도 이용의사 .....	95
〈표 4-5〉 퇴직 후 준비 시 도움 또는 정보원 .....	96
〈표 4-6〉 서울시 노인관련 사업예산 추이 .....	97
〈표 4-7〉 서울시 노인관련 예산 구조 변화 .....	98
〈표 4-8〉 기초노령연금 운영 현황 .....	99
〈표 4-9〉 수급노인 1인당 기초노령연금 예산 .....	100
〈표 4-10〉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추정 .....	101
〈표 4-11〉 장기요양보험 수급현황 .....	101
〈표 4-12〉 일본 개호보험 실적 .....	102
〈표 4-13〉 서울시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	103
〈표 4-14〉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소요예산 추정 .....	103

〈표 4-15〉 사회서비스 분야 노인 1인당 예산액 변화추이 .....	104
〈표 4-16〉 사회서비스 예산 소요추계 .....	104
〈표 4-17〉 노인복지예산 추계 결과 종합 .....	105
〈표 4-18〉 기초생활수급 노인 현황 .....	105
〈표 4-19〉 현재 동네 계속거주 희망여부 및 이유 .....	108
〈표 4-20〉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	111
〈표 4-21〉 고령친화산업 부문 및 전략품목 .....	113
〈표 4-22〉 현 거주 주택과 동네 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	117

# 그림목차

---

<그림 1-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범위 .....	5
<그림 1-2> 연구의 구성체계 .....	6
<그림 2-1>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전망 .....	16
<그림 2-2>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추이 .....	16
<그림 2-3> 서울시 부양비 변화 .....	16
<그림 2-4> 고령인구 연령별 구성 .....	17
<그림 2-5> 고령자가구구성 형태 변화 .....	19
<그림 2-6> 서울시 독거노인 추이 .....	19
<그림 2-7> 연령별 교육수준 .....	19
<그림 3-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	42
<그림 3-2>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	42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	43
<그림 3-4> 취업자 중 50대 이상 비중 .....	44
<그림 3-5> 고령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추이 .....	50
<그림 3-6> 연령별 소득구성 .....	54
<그림 3-7> 가구주 연령별 평균 자산총액 .....	56
<그림 3-8> 평균 부채총액 .....	58
<그림 3-9> 평균 순자산액 .....	58
<그림 3-10> 서울고령자가구의 소득계층 변화 추이 .....	59
<그림 3-11> 소득 지니계수 변화추이 .....	61
<그림 3-1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지니계수 .....	61
<그림 3-13>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 지니계수 .....	61
<그림 3-14> 가구주 연령별 소득 ER지수 .....	62
<그림 3-15>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	63
<그림 3-16> 소득 및 자산 ER지수 .....	63
<그림 3-17>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가계지출 비율 추이 .....	67
<그림 3-18> 연령별 1인당 소비지출현황 .....	68
<그림 3-19> 2008년 서울의 평균소비성향 .....	69

〈그림 3-20〉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참여율 .....	74
〈그림 3-21〉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형태 .....	74
〈그림 3-22〉 서울 노인의 사회참가율 추이 .....	80
〈그림 3-23〉 서울시 연령별 환경보호부담의향 비교 .....	82
〈그림 3-24〉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	82
〈그림 3-25〉 65세 이상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추이 .....	83
〈그림 3-26〉 교육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	83
〈그림 3-27〉 자녀에게 도움제공 .....	83
〈그림 4-1〉 연령 및 소득수준별 사회적 지지도 .....	88
〈그림 4-2〉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비율 .....	89
〈그림 4-3〉 서울시 복지예산 구성 변화추이 .....	97
〈그림 4-4〉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	106
〈그림 4-5〉 고령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18
〈그림 4-6〉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영역 .....	119
〈그림 4-7〉 대중교통 이동의 편리성 .....	121
〈그림 4-8〉 대중교통정보 획득의 용이성 .....	121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과급효과와 변화전망

## 제1절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OECD 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리고 또다시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이전하는 것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초고속의 고령화 추이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5년 늦은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0년경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 말 9% 수준에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계층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의료보장·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국민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담이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며, matching grant 방식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특히 전국 노인인구의 약 17%가 서울에 몰려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을 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는 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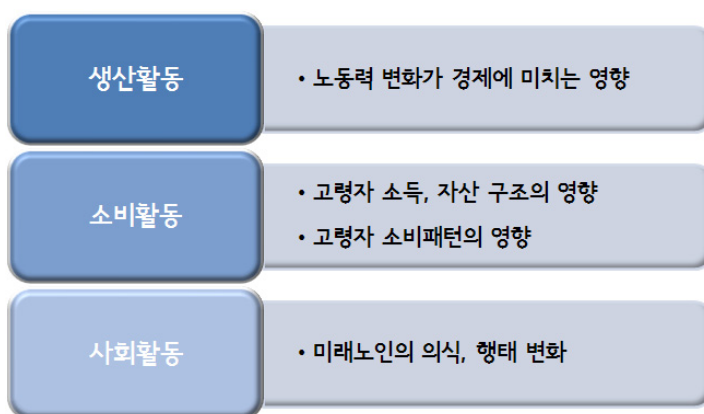
## 2. 연구범위

### 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파급효과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거시적인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자산시장의 문제, 조세제도의 문제 등 거시경제적 차원은 이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영역, 그리고 서울시가 전국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전국적인 양상과 다른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에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고령자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늘어나면서 고령자가 경제·사회 활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정의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고령인구가 경제활동, 즉 생산과 소비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검

토하였다. 생산활동 측면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생산활동에 투입할 인력이 감소하거나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비활동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득 및 자산구조가 전체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령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산업구조는 물론 복지재정 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초고령 사회 미래노인들의 의식 및 행태, 그리고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그림 1-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범위

## 2) 정책제언

정책과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둘째, 기회요인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가, 셋째,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응방안별 주요이슈와 정책과제 도출에 일차적 목적을 두어 개괄적 수준에서 논의하며, 개별 정책과제의 구체적 방법론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 3) 시간적 범위

서울시는 2027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30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를 상정하고 초고령 사회의 모습과 과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유는 20년 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



계층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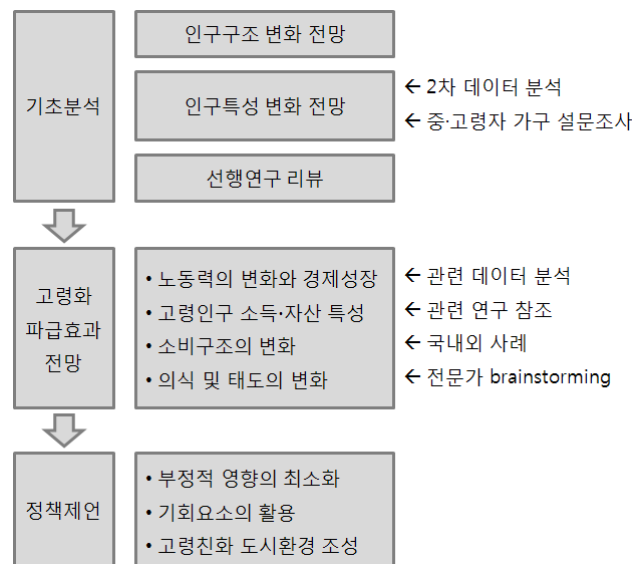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2010년에 55세가 되어 은퇴를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65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자 계층으로 편입된다. 또한 2030년 경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전체 고령인구의 중심계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5세 이상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재노인과 미래노인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초고령 사회 서울의 노인특성을 전망하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만 47~55세이지만, 여러 통계자료들이 대부분 5세 단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45~54세를 베이비붐 세대로서 미래의 노인계층으로 간주하였다.

### 3.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이 연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기초분석으로 초고령 사회에 서울시 인구변화 특성을 전망한 것이다. 우선 서울의 고령화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를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앞서 연구범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 노동력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



〈그림 1-2〉 연구의 구성체계

향, ii) 고령자 계층의 소득·자산 특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i) 고령자 계층의 소비특성 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iv) 미래노인의 의식 및 행태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앞서 논의된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의 대응과제는 i)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ii)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소를 활용하는 방안, iii)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내용의 구성 및 부문별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인구고령화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리뷰를 먼저 실시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영역을 설정하였다.

### 2) 2차 데이터 분석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를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부분을 분석하였고, 자산부분은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두 자료 모두 원자료를 확보해 서울시 표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2003~2008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를 이 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2003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이 근로자가구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가구로 변화되어 이전 연도와 비교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는 지역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03~2008년간을 비교하였다. 한편,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되었으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최근 연도가 2007년이어서 2007년 한 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노인들의 특성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2차 데이터로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 데이터, 수도권교통본부가 시행한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통계청의

인구이동 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자료, “사회통계조사”, 보건복지부와 계명대학교에서 실시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도 활용하였다. 각종 행정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고 일부는 복지국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 3) 설문조사

2차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노인과 미래노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가구주로 하였다. 조사표와 표본설계는 연구진에서 작성하고 실사작업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I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일대일 면접조사 방법으로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주의 경제활동, 퇴직과 은퇴, 가구경제상태, 주거상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경험과 의식, 일상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이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부록에 수록한 조사표를 참조할 수 있다.

### 4) 전문가 간담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고령화의 파급효과는 미래전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간담회는 연구진이 관련내용에 대한 기초통계 및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하여 전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은 1) 노동인구의 변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2)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및 양극화, 3) 초고령 사회와 시니어 파워의 등장, 4) 초고령 사회와 고령친화 산업, 5) 초고령 사회와 서울의 도시환경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고령화 연구는 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고령화의 파급효과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구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였으며, 제4장의 정책제언 부분에서도 참고하였다.

## 1.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노동력 부족 문제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력 자체가 고령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기호, 2005; 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이영성, 2008;). KDI의 추계에 따르면 노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25%에서 2050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적·물적 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문형표 외, 2006). IMF는 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0.08% 증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진수 외, 2005, 재인용). 또한 이영성(2008)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0.87% 하락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0.7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력의 문제와 함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최숙희 2007).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은퇴 후 그동안 축적한 저축과 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하는 노인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위해 소비를 제한하는 경향도 있다. 문형표 외(2006)가 은퇴 전후의 소비변화를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은퇴 후 소비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기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감소와 고령자의 낮은 임금 수준은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양희승, 2004).

## 2. 노후보장과 재정부담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재정부담의 증가이다(김미숙, 2003; 문형표 외, 2006; 박순일, 2005; 최숙희, 2007).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수요를 증가시키고, 공적의료나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하여 공공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들 스스로도 가족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보건, 요양서비스 등 공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 문제이다. 은퇴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에서 연금수급연령을 늦추고, 수급액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OECD의 연구보고서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1998)에서 조기은퇴와 연금재정 문제를 가장 주요 이슈로 논의하고, 경제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연금제도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의료비이다.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19.3%에서 2008년 30.8%로 증가하였다. OECD 선진국의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가 65세 미만 집단의 3~5배이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15~44세 집단의 4배 이상이다(김진수 외, 2005).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OECD 국가들도 과잉진료 억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의료체계의 재원조달 방식 개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를 위한 사회보험, 노인복지 프로그램,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등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에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12~13% 정도 커지는 요인이 있고, 결과적으로 2050년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문형표 외, 2006).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병근과 하종원(2007)이 경상남도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고령인구가 1% 증가함에 따라 사회개발비는 1.38%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분권화로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점차 matching grant 방식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3. 소비구조의 변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이들의 소비패턴이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입에 의한 소비액이 전 민간소비의 3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었다(문형표 외, 2006). 전통적인 노인보건·복지 분야를 넘어 고령층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버산업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술, 공학기술, 생명의료과학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 즉 Geron-technology 혹은 Elder-Tech의 성장이 기대된다(신승춘, 2004).

기존의 시장구조도 고령자의 선호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의 주택시장은 50대 이상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주거양식의 공급이 필요하고(김도희, 2003; 박신영, 2002; 윤주현 외, 2004), 금융시장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안정적 금융상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자산운용 상품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문형표 외, 2006; 최숙희, 2007).

이처럼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고령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요양, 정보, 여가, 금융, 주택, 의약품 등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약 6.4조원에서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 2002년 17만 명에서 2010년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아직은 노인의 구매력이 낮고 주로 복지수요이므로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진단된다(박순일, 2005).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 집단의 수요창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노인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금융자산의 75%를,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야 한다(조선일보, 2008. 5. 9).

#### 4.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인빈곤

고령인구의 증가는 성장 자체뿐 아니라, 성장의 분배효과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노인의 빈곤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박순일, 2005). 미래의 노인들은 현세대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면 빈곤한 노인 또한 함께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가운데 빈곤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경제성장 없이는 빈곤탈피나 분배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화와 세계화의 결과는 연령 및 계층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분배의 하위층에 노인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박순일, 20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석재은·김태완, 2000),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홍백의, 2005).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 공적연금의 보장률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연금은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류건식, 2009).

#### 5. 세대갈등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후세대의 기여를 통해 앞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출산율의 감소로 유소년부양비는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에서 2020년 21.7, 2030년에는 3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대 간 사회·심리적 측면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산업화로 가족 내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다시 노인부양이 가족에게 강요되면 가족갈등과 긴장을 증폭시킬 소지가 높다. 이러한 부담은 부양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심한 경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나 방치라는 사회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정치적으로도 과중한 노인복지 재정부담으로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복지국가의 정당성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김미숙 외, 2003).

# 제2장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 설문조사 결과



# 제 2 장

##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

###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 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 1) 고령화 추이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1/4분기 서울시 인구는 총 10,464천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6,414명으로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한다. 이는 1980년 이후 30년 만에 고령자 인구수는 4.6배, 구성비도 3.6배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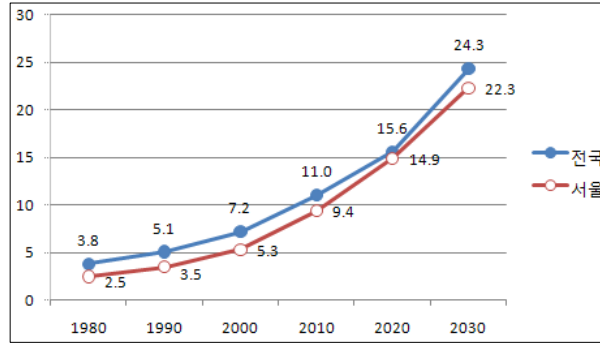
〈표 2-1〉 서울시 고령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4분기
총인구	인구수	8,364,379	9,639,110	10,612,577	10,595,943	10,373,234	10,297,004	10,464,171
	증가율	-	15.2	10.1	-0.2	-2.1	-0.7	1.6
65세 이상	인구수	207,953	211,283	362,653	460,144	560,446	735,902	956,414
	증가율	-	1.6	71.6	26.9	21.8	31.3	30.0
	구성비	2.5	2.2	3.4	4.3	5.4	7.1	9.1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4.9%, 2030년 2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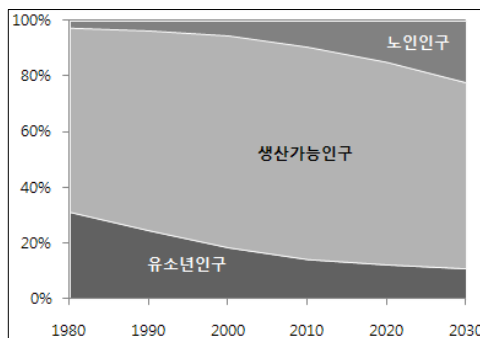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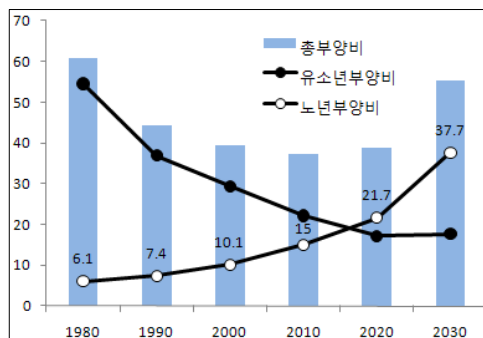
〈그림 2-1〉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전망(단위: %)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출산력의 저하가 주된 원인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대적인 것으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인구의 감소도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인구대치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다.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1.19명이지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더 낮아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1980~2030년 동안 유소년인구 구성비는 31.3%에서 11.1%로 급감하였지만,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는 66.2%에서 66.6%로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 제고를 기본으로 하는 인구정책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출산율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수명의 연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림 2-2〉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추이



〈그림 2-3〉 서울시 부양비 변화

## 2) 고령화의 특징

### (1) 후기고령인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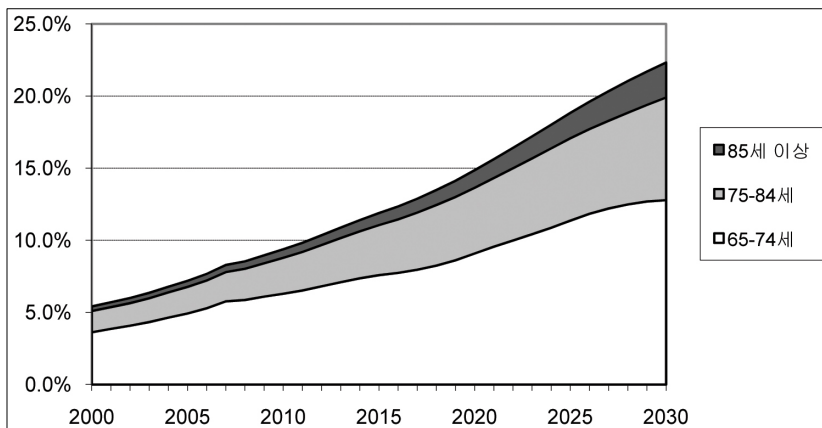
인구고령화의 또 다른 특징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후기고령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5.3%가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의 23.6%에 해당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및 신체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후기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노인수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2-2〉 후기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 중 65세 이상	2,5	3,5	5,3	9,4	14,9	22,3
총인구 중 80세 이상	0,2	0,5	0,8	1,5	3,0	5,3
65세 이상 중 80세 이상	9,5	12,8	14,3	15,6	19,9	23,6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4〉 고령인구 연령별 구성

### (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정책이 도입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만 47~55세 그룹을 말한다.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총인구의 14.6%인 약 900만 명에 달하고, 서울시민의 14.7%인 약 150만 명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한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인 96만 명의 1.5배에 달한다.

201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55세에 도달하면서 은퇴를 시작하고 있고, 이들은 2020년 65세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자 계층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2030년 경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어 전체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양적인 면에서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현재와는 또 다른 고령인구의 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근대화 시대를 살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의식이 현재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IMF 외환위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이 고령자 집단의 주류가 되는 2030년대에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서울시 베이비부머 현황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베이비부머(47~55세)	1,499,455	14.7
준고령자(56~64세)	928,941	9.1
고령자(65세 이상)	959,414	9.4

주: 2010년 1/4분기, 외국인 제외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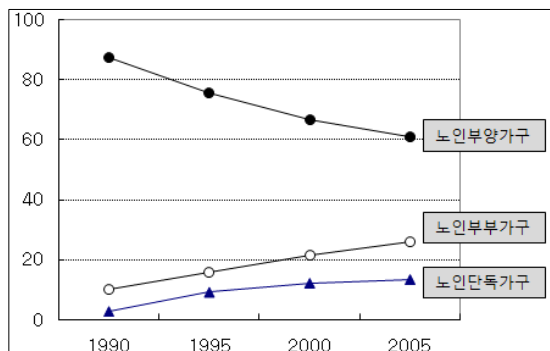
## 2. 고령인구 특성 변화

이 절에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시계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20년 후에 고령자가 될 연령집단, 즉, 현재 45~54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55~64세에 해당하는 예비고령자 집단의 특성을 현재 노인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미래노인의 프로파일을 전망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자료와도 비교를 시도하였다.

### 1) 가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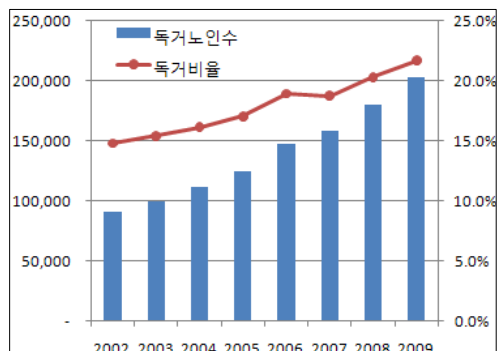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더욱 독립적인 가구형태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서울노인의 87.4%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였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60.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노인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10%에서 25.8%로 2.5배, 노인 단독가구는 2.6%에서 13.4%로 5배 증가하였다.

독립적 가구구성 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동거할 자녀수가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으나, 가족은 물론 노인 당사자들도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한 원인이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서울자료

〈그림 2-5〉 고령자가구구성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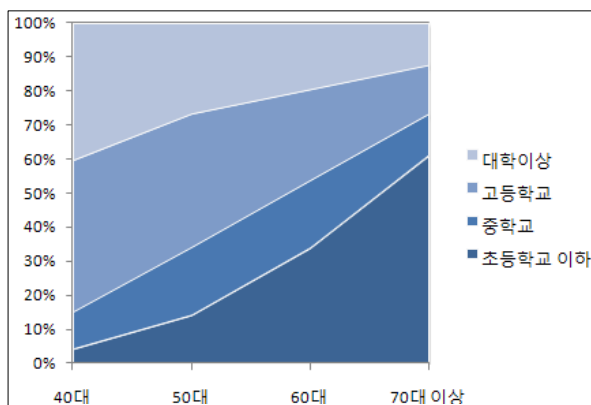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그림 2-6〉 서울시 독거노인 추이

## 2) 교육수준

〈그림 2-7〉은 2005년 서울시 연령별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현재 노인과 미래노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40대부터 자료를 제시하였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미래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세대 중 서울의 노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다. 2005년 현재 40대 서울시민은 40%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 교육을 받은 반면, 70대 이상은 60%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수준이다. 교육수준의 차이는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그림 2-7〉 연령별 교육수준(2005, 서울)

의식 및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의 노인들은 현재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3) 경제적 특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래의 노인들은 현재세대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가 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40~50대의 노후준비 행태를 통해서 미래노인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5~54세 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18> 참조). 2008년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든 노후준비를 한 비율은 45~54세 집단에서 77.6%로 높은 반면, 현재 노인세대는 39.8%만이 노후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준비 방법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현재 노인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이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현금성이 높은 연금이나 저축 등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비율도 45~54세 집단에서는 1.2%로 미미했다. 따라서 미래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안정적인 독립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노후준비도

(단위: 명, %)

가구주 연령대	노후 준비율	노후준비방법(다중응답)						
		공적연금	개인연금	은행저축	보험	부동산투자	주택활용	자녀의존
45~54세	77.6	55.5	33.6	65.2	71.1	14.0	4.1	1.2
65세 이상	39.8	32.1	15.8	52.5	41.5	16.8	14.4	11.2

자료: 2008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4) 의식 및 생활행태

미래의 노인들은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림 2-5>에서 본 바와 같이 단독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의식조사에서도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현재 노인세대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혼자 살기 어려울 때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낮고, 노인전용공간 선호도가 높았다.

〈표 2-5〉 혼자 살기 어려울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

(단위: %)

가구주연령대	자녀동거	노인전용 공간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	기타(친구 등)	전체
45~54세	13.6	31.7	51.0	3.7	100.0
65세 이상	27.9	21.0	49.0	2.1	100.0

자료: 2008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사회생활에서도 변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래 노인세대는 문화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고 평생교육이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더 높다. 이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앞으로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노인세대의 특성이 신노년 문화로 자리 잡을 것임을 보여준다.

〈표 2-6〉 문화·교육 행태

(단위: %)

가구주 연령대	문화활동 참여	평생교육 경험	평생교육 희망	수입을 위해 추가 일보다 여가시간 선호
45~54세	52.3	25.4	69.4	43.4
65세 이상	20.6	11.7	34.7	26.8

자료: 2008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및 방법

현재의 고령자 집단과 20년 후의 미래 고령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고, 은퇴 전후의 생활실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 서울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20년 후에 고령자 집단에 편입될 만 45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진에서 조사표 설계와 표본설계를 하였고, 실제 현장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RI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표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0개의 유효표본이 조사 완료되었다.

## 2) 표본추출

표본추출은 층화추출과 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25개 자치구로 층화한 후, 구별로 40개 표본을 할당하였다. 구별 인구 분포에 따라 표본을 할당할 경우 일부 구에는 매우 적은 표본이 배분되기 때문에 균등하게 40개 표본을 구별로 할당하였다. 각 구에 배분된 40개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2단계로 집락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자치구 내 행정구역상 동(洞)을 집락으로 간주하고 구별로 4개 동을 추출하여 각 동에 10개 표본을 배분하였다. 결과적으로 25개 자치구별 4개 동씩 총 100개 동으로 집락수를 설계하였다.

〈표 2-7〉 최종 표본할당

구	동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취업자	은퇴자	미취업자
	전체	(438)	(295)	(267)	(500)	(400)	(100)
종로구	무악동	4	3	3	5	4	1
종로구	이화동	4	3	3	5	4	1
종로구	창신제3동	4	3	3	5	4	1
종로구	사직동	4	3	3	5	4	1
중구	신당제3동	4	3	3	5	4	1
중구	신당제6동	4	3	3	5	4	1
중구	회현동	4	3	3	5	4	1
중구	신당제1동	4	3	3	5	4	1
용산구	한남동	4	3	3	5	4	1
용산구	후암동	4	3	3	5	4	1
용산구	원효로제1동	4	3	3	5	4	1
용산구	한강로동	4	3	3	5	4	1
성동구	마장동	4	3	3	5	4	1
성동구	응봉동	4	3	3	5	4	1
성동구	옥수동	4	3	3	5	4	1
성동구	성수2가제3동	5	3	2	5	4	1
광진구	자양제3동	5	3	2	5	4	1
광진구	구의제2동	4	3	3	5	4	1
광진구	중곡제2동	5	3	2	5	4	1
광진구	광장동	6	2	2	5	4	1
동대문구	회기동	4	3	3	5	4	1
동대문구	이문제2동	4	3	3	5	4	1
동대문구	전농제1동	4	3	3	5	4	1
동대문구	장안제1동	5	3	2	5	4	1
중랑구	망우제3동	5	3	2	5	4	1
중랑구	면목제4동	4	3	3	5	4	1
중랑구	면목제3,8동	5	3	2	5	4	1



〈표 계속〉 최종 표본할당

구	동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취업자	은퇴자	미취업자
중랑구	중화제2동	5	3	2	5	4	1
성북구	정릉제1동	4	3	3	5	4	1
성북구	길음제2동	4	3	3	5	4	1
성북구	장위제1동	4	3	3	5	4	1
성북구	삼선동	4	3	3	5	4	1
강북구	우이동	4	3	3	5	4	1
강북구	미아동	4	3	3	5	4	1
강북구	삼각산동	4	3	3	5	4	1
강북구	수유제1동	4	3	3	5	4	1
도봉구	창제1동	5	2	3	5	4	1
도봉구	창제4동	5	2	3	5	4	1
도봉구	도봉제2동	4	3	3	5	4	1
도봉구	방학제1동	5	3	2	5	4	1
노원구	상계5동	4	3	3	5	4	1
노원구	월계2동	4	3	3	5	4	1
노원구	하계1동	5	2	3	5	4	1
노원구	중계2,3동	4	3	3	5	4	1
은평구	응암제2동	4	3	3	5	4	1
은평구	신사제1동	4	3	3	5	4	1
은평구	녹번동	4	3	3	5	4	1
은평구	갈현제2동	4	3	3	5	4	1
서대문구	홍은제2동	4	3	3	5	4	1
서대문구	북가좌제2동	4	3	3	5	4	1
서대문구	충현동	4	3	3	5	4	1
서대문구	홍제제1동	4	3	3	5	4	1
마포구	합정동	4	3	3	5	4	1
마포구	성산제1동	4	3	3	5	4	1
마포구	공덕동	4	3	3	5	4	1
마포구	염리동	4	3	3	5	4	1
양천구	신정4동	5	3	2	5	4	1
양천구	목2동	5	3	2	5	4	1
양천구	목5동	6	2	2	5	4	1
양천구	신월7동	5	3	2	5	4	1
강서구	가양제3동	4	3	3	5	4	1
강서구	방학제2동	4	3	3	5	4	1
강서구	등촌제3동	5	2	3	5	4	1
강서구	화곡제4동	5	3	2	5	4	1
구로구	고척제1동	5	3	2	5	4	1
구로구	개봉제2동	4	4	2	5	4	1
구로구	수궁동	4	3	3	5	4	1

〈표 계속〉 최종 표본할당

구	동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취업자	은퇴자	미취업자
구로구	구로제3동	4	3	3	5	4	1
금천구	독산제2동	5	3	2	5	4	1
금천구	독산제4동	5	3	2	5	4	1
금천구	시흥제3동	4	3	3	5	4	1
금천구	시흥제5동	4	3	3	5	4	1
영등포구	신길제3동	4	3	3	5	4	1
영등포구	대림제1동	4	3	3	5	4	1
영등포구	영등포동	4	3	3	5	4	1
영등포구	도림동	4	3	3	5	4	1
동작구	흑석동	4	3	3	5	4	1
동작구	사당제4동	4	3	3	5	4	1
동작구	노량진제1동	4	3	3	5	4	1
동작구	상도제2동	4	3	3	5	4	1
관악구	청룡동	4	3	3	5	4	1
관악구	서원동	4	3	3	5	4	1
관악구	조원동	4	3	3	5	4	1
관악구	난곡동	4	3	3	5	4	1
서초구	서초4동	5	3	2	5	4	1
서초구	반포2동	5	3	2	5	4	1
서초구	방배2동	5	3	2	5	4	1
서초구	양재2동	5	3	2	5	4	1
강남구	삼성1동	5	3	2	5	4	1
강남구	역삼1동	5	3	2	5	4	1
강남구	개포2동	5	3	2	5	4	1
강남구	수서동	4	3	3	5	4	1
송파구	석촌동	5	3	2	5	4	1
송파구	장지동	5	3	2	5	4	1
송파구	잠실6동	5	3	2	5	4	1
송파구	방이1동	5	3	2	5	4	1
강동구	천호제2동	5	3	2	5	4	1
강동구	길동	5	3	2	5	4	1
강동구	상일동	5	3	2	5	4	1
강동구	암사제1동	5	3	2	5	4	1

행정동을 선정하는 과정은 우선 구별로 모든 동을 통계청 행정구역 코드로 정렬하고 45세 이상 누적인구수를 계산하여 1-누적인구수 사이의 난수를 추출한 뒤, 이 난수가 속한 집락을 1차 추출지점으로 선정하였고, 이후부터는 일정한 간격(등간: 누적인구수/추출집락수)에 따라 집락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가구는 각 가구의 가구주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할당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추출된 동에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연령대(45~54세, 55~64세, 65세 이상)와 취업현황(취업자, 은퇴자, 미취업자)을 기본 변수로 하였다. 연령 변수는 최신 주민등록 통계의 45세 이상 인구분포를 활용했으며 동 내의 연령 할당은 해당 동의 연령분포에 따랐다. 취업현황은 조사 목적에 따라 취업자 50%, 은퇴자 40%, 미취업 구직자(현재 일을 하지 않지만 취업희망) 10%로 할당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추출된 최종 표본은 <표 2-7>과 같다.

## 2. 주요 조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특성

전체 조사응답자 1,000명은 45~54세 집단이 43.8%, 55~64세가 29.5%, 65세 이상이 26.7%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이 가구주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94.4%가 남성이며, 학력은 고졸 이상이 75%를 넘는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대부분이며, 가구구성은 2세대 가구와 부부가구가 많은 편이다.

<표 2-8> 조사응답자 일반특성

(단위: %)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연령	45~54세	43.8	혼인상태	기혼	88.8
	55~64세	29.5		사별	6.8
	65세 이상	26.7		이혼/별거	3.2
		미혼		1.2	
학력	초등학교 이하	5.2	가구구성	단독	6.5
	중학교	16.5		부부	22.5
	고등학교	53.2		2세대	64.4
	전문대 이상	25.1		3세대	5.7

### 2) 경제활동

#### (1) 취업현황

경제활동 상태는 사전에 유의할당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취업 중인 응답자 50%,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직 중인 응답자 10%, 완전 은퇴한 응답자 4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표본

에서는 취업률이 의미가 없다.

현재 취업 중인 500개 사례를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많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능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블루칼라 직종 종사자는 증가하는 반면, 전문관리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직종 종사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월평균 수입은 평균 296.9만원이고,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월평균 수입 150만원 미만이 절반을 넘었다.

〈표 2-9〉 취업현황

(단위: %)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사례수)		(500)	(314)	(148)	(38)
취업직종	전문관리직	5.8	7.6	2.7	2.6
	일반사무직	14.6	20.4	6.1	-
	판매서비스직	53.0	51.3	56.8	52.6
	기능생산직	16.6	16.9	14.9	21.1
	단순노무직	10.0	3.8	19.6	23.7
고용형태	임금봉급근로자	49.4	51.3	48.6	36.8
	자영업	44.2	39.8	50.0	57.9
	사업주	6.4	8.9	1.4	5.3
근로시간	전일제	96.4	97.5	93.1	100.0
	시간제	3.6	2.5	6.9	-
월평균 수입	150만원 미만	10.0	1.9	16.2	52.6
	150~250만원 미만	26.2	21.7	35.8	26.3
	250~350만원 미만	34.2	38.2	31.8	10.5
	350~450만원 미만	14.4	17.8	8.8	7.9
	450만원 이상	15.2	20.4	7.4	2.6
	(평균: 만원)	(296.9)	(339.5)	(239.5)	(167.9)

## (2) 퇴직후 재취업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례 중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는 취업자의 14%, 전체 응답자의 7%이다. 재취업한 비율은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45~54세 집단이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취업한 비율이 높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표 2-10〉 연령 및 소득별 재취업 비율

(단위: %)

구분		재취업 비율
연령	45~54세	13.7
	55~64세	11.5
	65세 이상	26.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2.9
	100~200만원 미만	19.2
	200~300만원 미만	18.9
	300~400만원 미만	11.8
	400~500만원 미만	12.5
	500만원 이상	9.3

생애 주된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경우, 취업직종은 주로 판매·서비스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근로형태는 봉급자 형태로 전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퇴직 이전에 1인 자영업자이거나 고용원을 둔 고용주였던 경우에도 봉급근로자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았다.

〈표 2-11〉 퇴직 전후 취업직종 변화

(단위: %)

재취업 퇴직전	전문 관리직	일반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 생산직	단순 노무직	계
전문관리직	-	50.0	50.0	-	-	100.0
일반사무직	3.1	21.9	62.5	9.4	3.1	100.0
판매서비스	-	-	50.0	31.3	18.8	100.0
기능생산직	-	-	52.9	23.5	23.5	100.0
단순노무직	-	-	33.3	-	66.7	100.0
계	1.4	11.4	55.7	17.1	14.3	100.0

〈표 2-12〉 퇴직 전후 고용형태 변화

(단위: %)

재취업 퇴직전	임금봉급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계
임금봉급 근로자	50.0	46.4	3.6	100.0
자영업자	70.0	20.0	10.0	100.0
고용주	50.0	25.0	25.0	100.0
계	52.9	41.4	5.7	100.0

### (3) 퇴직 및 은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경제활동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45.2세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재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은퇴상태인 응답자 400명 가운데 15%는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재취업했다가 은퇴한 상태이다. 이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4.3세이고, 완전 은퇴한 연령은 평균 61.2세로 퇴직 후 약 6.9년간 더 일하고 은퇴한 것이다. 이들의 은퇴연령은 퇴직 후 바로 은퇴한 집단의 은퇴(퇴직)연령 57.4세보다 3.8세 높다.

〈표 2-13〉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

(단위: 세)

	(사례수)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재취업 중	(70)	45.2	40.5	50.3	56.6
재취업 후 은퇴	(60)	54.3	41.5	50.4	56.8
퇴직 후 바로 은퇴	(340)	57.4	49.2	56.4	61.4

한편, 조사대상자의 희망 은퇴연령은 실제 은퇴연령보다 높았다. 현재 은퇴상태인 조사대상자의 은퇴연령은 평균 58세인 반면, 경제활동에 참가 중인 집단의 희망 은퇴연령은 평균 66.7세로 8.7세 차이를 보인다. 희망 은퇴연령은 현재 미취업상태이지만 구직 중인 집단에서 68.2세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은퇴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4〉 은퇴 및 희망은퇴 연령

(단위: 세)

		(사례수)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자 희망 은퇴연령	계속 취업	(430)	66.1	64.6	67.8	73.6
	재취업 중	(70)	67.6	65.9	67.9	74.7
	미취업 구직 중	(100)	68.2	66.2	68.3	74.0
	계	(600)	66.7	64.9	67.9	74.0
은퇴자 은퇴연령	재취업 후 은퇴	(60)	61.2	47.6	56.2	64.1
	퇴직 후 바로 은퇴	(340)	57.4	49.2	56.4	61.4
	계	(400)	58.0	49.1	56.4	61.9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경우 대체로 직장의 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가 많다. 특히 미취업 상태로 구직 중인 집단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집단에서는 직장파산, 정리해고 이외에 일거리 감소로 퇴직한 경우가 많았다. 은퇴자 집단의 23.3%가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이다.

〈표 2-15〉 퇴직이유

(단위: %)

	재취업자	은퇴자	구직자
(사례수)	(70)	(400)	(100)
직장파산, 폐업	37.1	23.3	22.0
정리해고, 권고사직	17.1	15.0	22.0
사업을 하려고	12.9	3.3	1.0
일거리 감소	7.1	10.0	19.0
장래성 없음	5.7	6.7	3.0
보수가 적어서	4.3	1.7	2.0
정년퇴직	10.0	23.3	12.0

#### (4) 구직자

현재 미취업상태이지만 구직 중인 응답자는 총 100사례이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여성가구 주 10.0%, 단독가구 8%로, 조사대상 전체 평균보다 여성, 단독가구 비중이 높아, 여성 및 독거 노인이 주요 위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은 평균 55.3세로 전체 응답자 평균 57.9세보다 다소 낮다.

〈표 2-16〉 구직자 집단 개인특성

(단위: %, 만원)

		전체 조사대상	구직자 집단
성별	남자	94.4	90.0
	여자	5.6	10.0
연령	평균(세)	57.9	55.3
가구구성	단독	6.5	8.0
	부부	22.5	14.0
	2세대	64.4	72.0
	3세대	5.7	6.0
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276.1	193.4
	평균 자산	40,646	25,506
	자가거주율	69.7	43.0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이 276만원인데 비해 구직자 집단은 193만원으로 약 70%에 불과하다. 보유한 자산도 2억 5천만원으로 적으며 자가거주율도 전체 69.7%보다 낮은 43%이다. 이처럼 이들은 아직 은퇴하기에는 적은 나이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노후준비

퇴직 또는 은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31.9%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노후준비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별로 은퇴자 집단에서 준비가 없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준비를 한 경우에는 대체로 저축 등 경제적인 준비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구직자 집단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 집단에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다른 집단에서도 재취업 교육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연령별로는 55~64세 집단이 준비정도가 가장 떨어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거나 창업준비를 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해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 직업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지만 45~54세 베이비붐 세대에서 상대적 많은 편이다.

〈표 2-17〉 퇴직 및 은퇴대비 준비

(단위: %)

구분	(사례수)	준비 없음	경제적 준비	부동산 관리	다른 일자리 알아봄	창업 준비	재취업 직업 교육	건강 관리	여가생활 준비	
전체	(482)	30.5	67.5	22.1	50.4	12.8	1.5	14.9	2.4	
경제 활동	재취업자	(70)	24.3	31.4	1.4	54.3	15.7	5.7	5.7	1.4
	구직자	(12)	25.0	58.3	8.3	75.0	8.3	-	25.0	-
	은퇴자	(400)	31.8	49.3	18.0	30.5	7.8	0.3	10.8	1.8
연령	45~54세	(115)	30.4	53.8	7.5	60.0	25.0	5.0	11.3	2.5
	55~64세	(141)	28.4	67.3	23.8	49.5	11.9	1.0	13.9	2.0
	65세 이상	(226)	31.9	74.7	28.6	46.1	7.1	-	17.5	2.6

\* 중복응답으로 %는 해당항목을 준비한 비율임

한편, 노후 경제생활에 대비해서는 전체 84.4%가 어떤 형태로든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대비 형태는 모든 집단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다음으로 저축·보험 등 금융자산과 공적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경제활동 특성별로는 미취업 구직자 가구의 노후준비도가 가장 열악하여 31%가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연령별로 노후준비도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준비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연령이 낮을수록 저축·보험,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현금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준비한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미래세대 노인은 현세대 노인보다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8〉 노후 경제생활 대비

(단위: %)

구분	(사례수)	준비 없음	거주 주택	기타 부동산	저축 보험	주식 채권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전체	(1,000)	15.6	70.0	9.5	57.0	2.7	52.9	11.0	13.1	
경제 활동	취업자	(500)	11.6	72.8	8.6	63.6	3.2	60.4	15.2	13.0
	은퇴자	(400)	16.8	71.0	11.8	50.5	2.5	47.0	7.3	14.0
	구직자	(100)	31.0	52.0	5.0	50.0	1.0	39.0	5.0	10.0
연령	45~54세	(438)	14.2	69.2	7.8	62.3	3.2	55.9	16.0	14.4
	55~64세	(295)	16.9	70.2	10.2	57.6	3.1	53.2	7.8	12.5
	65세 이상	(267)	16.5	71.2	11.6	47.6	1.5	47.6	6.4	11.6

\* 중복응답으로 %는 해당항목을 준비한 비율임



#### 4) 일상생활

##### (1) 건강관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행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음주, 흡연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민간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아, 미래 노인세대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9〉 건강생활

(단위: %)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운동참여율(규칙적+가끔)	78.2	77.4	79.3	78.3
음주율(자주+가끔)	76.3	85.8	77.0	59.9
흡연률(자주+가끔)	48.6	55.0	51.1	35.2
민간의료보험 가입율	70.8	84.0	74.9	44.6

##### (2) 지원체계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자녀문제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집단에서 건강문제가 특히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구직자 집단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장 실직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표 2-20〉 걱정거리

(단위: %)

구분	경제적 어려움	가장 실직	건강 문제	나이들어 할 일이 없음	가족 불화	자녀 문제	없음	
전체	27.2	6.4	25.9	8.4	0.3	25.7	6.1	
연령	45~54세	28.8	8.7	10.5	4.6	0.2	41.3	5.9
	55~64세	24.7	6.4	28.5	10.5	0.3	22.0	7.5
	65세 이상	27.3	2.6	48.3	12.4	0.4	4.1	4.9
경제활동	취업자	21.4	3.0	16.2	6.6	0.2	43.4	9.2
	은퇴자	29.5	7.3	40.8	10.8	0.5	7.5	3.8
	구직자	47.0	20.0	15.0	8.0	0.0	10.0	0.0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논의상대는 배우자가 가장 많고, 그 외 부모나 자녀 등 가족과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구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단독가구와 기타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걱정거리가 있어도 논의할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각각 15.4%, 11.1%로 높아 노인소외 문제 발생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21〉 걱정거리 논의상대

(단위: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친인척	친구 동료	이웃	종교인	없음
전체	73.1	0.8	5.9	0.5	13.1	2.1	0.6	3.9
연령	45~54세	75.6	1.4	2.7	1.1	13.9	1.1	3.9
	55~64세	77.3	0.3	6.1	-	10.5	1.7	3.4
	65세 이상	64.4	0.4	10.9	-	14.6	4.1	4.5
가구 구성	단독	-	1.5	29.2	-	36.9	13.8	15.4
	부부	82.2	0.0	4.9	0.0	9.3	1.8	1.8
	2세대	77.0	0.9	4.0	0.8	12.0	1.1	3.6
	3세대	78.9	1.8	5.3	-	12.3	-	1.8
	기타친인척	55.6	-	-	0.0	22.2	11.1	11.1

사회적 지원체계에 비해 경제적 지원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고,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 구성 형태별로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마찬가지로 단독가구가 가장 열악하였고, 부부가구도 경제적 지원체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경제적 도움처

(단위: %)

구분	부모	자녀	기타 친인척	친구 이웃	사회 단체	정부	없음
전체	4.8	29.9	5.9	2.1	0.6	1.8	54.8
연령	45~54세	9.4	8.4	8.4	4.1	0.2	67.1
	55~64세	1.7	32.9	5.8	0.7	1.0	56.6
	65세 이상	0.7	61.8	1.9	0.4	0.8	32.6
가구구성	단독	3.1	43.1	9.2	1.5	1.5	38.5
	부부	0.4	57.3	2.2	0.4	-	38.7
	2세대	6.4	18.9	7.1	2.8	0.8	62.0
	3세대	7.0	29.8	1.8	1.8	-	56.1
	기타친인척	-	33.3	11.0	-	-	55.6

### (3) 생활만족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3점을 초과하여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생활영역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2.7점으로 가장 낮고, 사회활동과 여가생활도 3.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이다.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65세 이상 집단은 친구관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경제생활, 사회활동, 여가생활은 3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가구소득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영역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도 높아졌다. 가장 저소득층인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친구관계에서 3.2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경제수준에서는 1.8점으로 불만족 정도가 높다.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도 점수가 2.6점으로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표 2-23〉 생활만족도 점수

구분	경제적수준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활동	여가생활	건강	주거환경	전반적 생활
전체	2.7	3.7	3.7	3.0	3.0	3.4	3.4	3.3
연령	45~54세	2.7	3.7	3.7	3.1	3.0	3.6	3.4
	55~64세	2.8	3.7	3.7	3.0	3.0	3.4	3.3
	65세 이상	2.7	3.5	3.6	2.9	2.9	3.0	3.3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8	3.0	3.2	2.6	2.4	2.5	2.9
	100~200	2.5	3.5	3.5	2.8	2.8	3.0	3.2
	200~300	2.7	3.7	3.7	2.9	3.0	3.5	3.4
	300~400	2.8	3.9	3.9	3.1	3.1	3.6	3.5
	400~500	3.0	3.8	3.8	3.1	3.2	3.7	3.7
	500만원 이상	3.5	4.0	4.0	3.6	3.5	3.8	3.7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 5점-매우 불만족 1점의 5점 척도의 평균값임

## 5) 부양

### (1) 부모부양

부모를 부양한 경험은 나이가 적을수록 감소하였고, 부양의 형태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함께 살면서 전체 생활을 부양한 비율이 큰 반면, 나이가 적을수록 동거는 감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부양 경험은 이후 세대의 부양의식 및 행태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표 2-24〉 부모부양 경험 및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부모 부양경험		79,4	74,5	82,6	86,5
부양 형태	동거	35,7	27,8	37,6	48,9
	경제적 지원	59,5	68,3	56,4	46,1
	간병수발	2,7	1,4	4,4	2,8
	가사일 등 생활지원	2,2	2,5	1,7	2,1

주: 부모가 안 계신 경우를 제외한 759사례 분석결과

실제로 본인의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받기를 원하는 비율은 부모를 부양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낮았다. 45~54세와 55~64세 집단의 경우 부모부양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자녀부양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이다. 다만 현재 노인세대인 65세 이상 집단은 전체적으로 자녀부양 희망률이 높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던 경우에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25〉 노후 자녀부양 희망률

(단위: %)

구분		(사례수)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사례		(1,000)	17,8	11,0	18,6	28,1
부모부양 경험 <sup>1)</sup>	있음	(587)	18,4	13,0	19,6	27,5
	없음	(152)	10,5	6,5	7,9	31,8

주1: 부모가 안 계신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739사례 분석결과

## (2) 세대 간 자원교환

은퇴한 가구주 가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54%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그중 28.6%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체 35.2%가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지원형태는 가사나 육아, 경제적 지원 순으로 많다. 연령별로 45~54세 집단은 경제적 지원이, 그 이상 연령층은 가사나 육아지원이 많았다.

〈표 2-26〉 세대 간 자원교환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자녀의 경제적 도움 수혜	받음	54,0	27,7	53,4	62,7
	정기적	28,6	13,8	28,4	33,3
	비정기적	25,5	13,8	25,0	29,4
자녀에게 도움제공	도움줌	35,2	36,4	41,4	31,4
	경제적	14,5	25,8	15,5	10,3
	가사·육아	23,1	7,6	26,7	26,0
	사업 도움	2,3	3,0	4,3	1,0

주: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사례 분석결과

부모와 자녀 간 자원의 교환관계를 보면, 우선 자녀가 있는 은퇴자 가구 중 16.6%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있는 상부상조 형태이다. 또한 18.7%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반대로 37.4%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만 자녀에게 아무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형태이다.

〈표 2-27〉 세대 간 자원교환 형태

(단위: %)

구분		자녀에게 도움 제공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자녀의 경제적 도움	받음	16,6	37,4
	안받음	18,7	27,3

## 6) 의식

고령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고, 반대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즉, 미래세대로 갈수록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

〈표 2-28〉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자

(단위: %)

구분	본인 스스로	국가	자녀	가족+국가	본인+국가	
전체	46,3	22,3	2,0	29,1	0,3	
연령	45~54세	50,2	21,2	1,6	26,9	0,0
	55~64세	44,4	22,0	2,0	31,2	0,3
	65세 이상	41,9	24,3	2,6	30,3	0,7

그러나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조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다. 특히 65세 이상 집단은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반면, 그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45~54세 미래 노인세대는 노후생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많아 세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29〉 노인복지 추가 세금 부담의사

(단위: %)

구분	긍정			보통	부정			
	계	매우 긍정	약간 긍정		계	약간 부정	매우 부정	
전체	27.6	0.9	26.7	38.1	34.3	26.5	7.8	
연령	45~54세	29.3	1.4	27.9	37.0	33.8	26.3	7.5
	55~64세	29.5	0.7	28.8	38.6	31.8	23.7	8.1
	65세 이상	22.9	0.4	22.5	39.3	37.9	30.0	7.9

한편, 조사대상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연령은 평균 69.4세로, 노인복지법상 기준인 65세보다 4.4세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연령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표 2-30〉 노인기준연령

(단위: 세)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노인 기준연령	69.4	69.0	69.1	70.2

마지막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취업지원, 소득지원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요양보호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등 건강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미취업상태로 구직 중인 집단에서 소득과 고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컸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집단에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표 2-31〉 서울시 역점사업 우선순위

(단위: %)

구분	노후소득 지원	취업 지원	요양보호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교통·주거 환경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	
전체	30,6	36,2	12,8	5,7	8,0	1,6	4,1	1,2	
경제 활동	취업자	30,6	35,9	13,0	5,8	8,2	1,3	4,3	0,9
	은퇴자	29,8	34,9	13,8	5,8	8,1	2,1	4,0	1,6
	구직자	34,0	42,5	8,0	5,0	6,0	1,0	3,0	0,5
연령	45~54세	29,8	36,8	12,0	6,5	8,1	1,1	4,6	1,1
	55~64세	32,4	37,3	12,9	3,9	8,0	1,5	3,1	1,0
	65세 이상	30,0	33,9	14,0	6,4	7,7	2,4	4,3	1,3

주: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선택 중복응답

## 7) 요약 및 시사점

45세 이상 중·고령자 집단의 실태와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서울노인의 태도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대체로 미래 노인세대로 갈수록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준비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노인세대보다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다. 부모·자녀 간 부양문제에 있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부양 경험이 적고 동시에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도 줄어든다. 이는 노인부양이 점차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증가하는 공공의 역할을 위해 늘어나는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경제활동상태, 성별, 가구구성 등 개인특성에 따라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계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대의 미취업 가구주,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도 미약하여 앞으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앞으로 독거노인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세대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고령자들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계층은 내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 고령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 제 3 장

##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활동에 참여할 노동인력의 절대적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연령이 높아져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생산인력의 고령화는 인건비 증가, 생산활동 지연, 생산능력 저하, 안전사고 증가, 품질저하, 불량률 상승 등을 야기시켜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인구 및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전망이 서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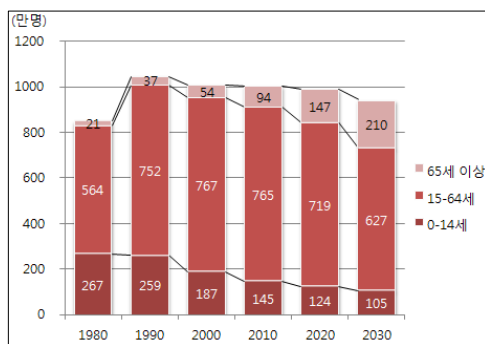
#### 1. 서울의 노동력 변화

##### 1) 생산가능인구 규모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상주인구 기준으로 1988년 천만 명대를 넘어섰고 1990년 1천 47만 여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2010년 1천 39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6년에 1천만 명 미만인 999만 명으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941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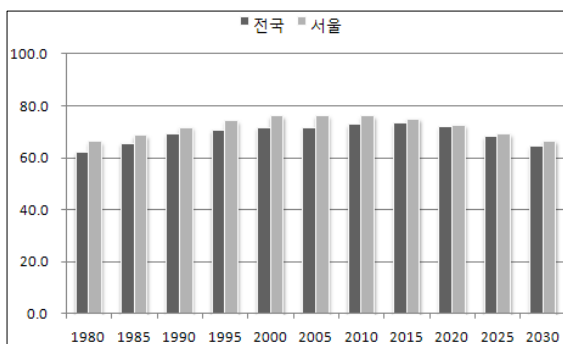
절대인구수와 함께 생산가능한 젊은 계층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가 주원인이

된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768만 명으로 최대 규모를 보인 이후 2009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761~765만 명 사이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2009년 76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30년 627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생산가능인구 중 학령기로 볼 수 있는 15~24세를 제외하면 실제 노동시장에 투입이 가능한 25~64세 인구는 2010년 636만 명에서 2030년 54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80년 20만 명에서 2010년 94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21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그림 3-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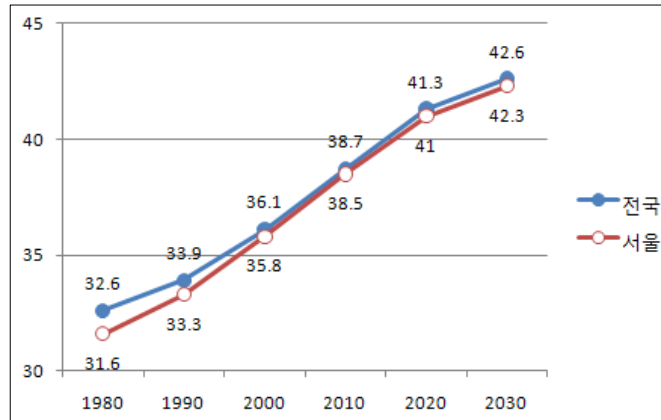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그림 3-2〉 생산가능인구 구성비(단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절대 규모뿐 아니라 구성비에서도 1980년 66.2%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 76.3%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66.6%로 약 10%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 2) 노동력의 고령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을 계산한 결과 1980년 31.6세에서 2030년 42.3세로 10세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그 격차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이후 0.2~0.3세 차이로 좁혀질 것이다.



〈그림 3-3〉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실제로 취업자의 연령구성도 고령화되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연령구성이 점차 중고령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이래 전체 취업자 중 20~30대 젊은 계층 비율은 감소하고, 40대 이상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15~29세 비율은 1990년 34.8%에서 2009년 20%로 73.8%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990년 3.1%에서 2009년 8.5%로 64% 증가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년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1999년 35.5세에서 2004년 37.5세로 2.0세 상승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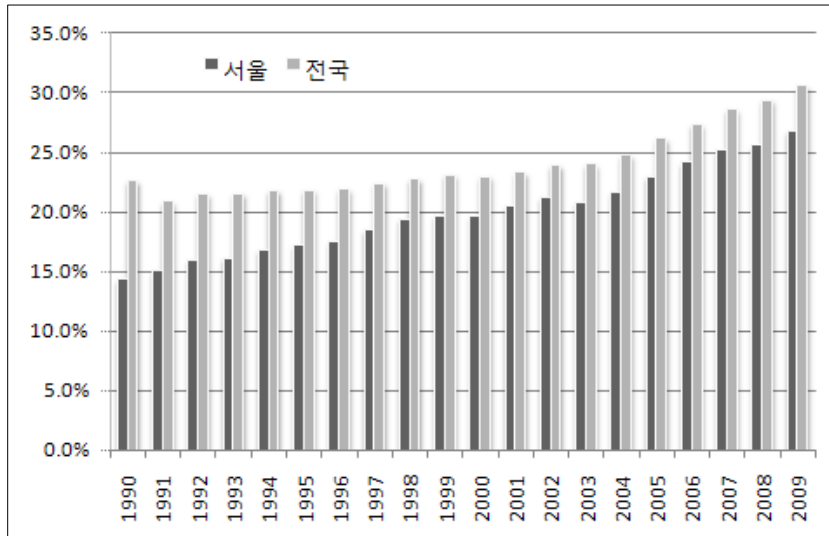
〈표 3-1〉 서울 취업자 연령구성

(단위: %)

	구성비					증가율 (1990~2009)
	1990	1995	2000	2005	2009	
15~29세	34.8	31.8	27.7	23.0	20.0	-73.
30~39세	28.9	29.4	28.1	27.5	26.0	-11.0
40~49세	22.0	21.6	24.5	26.5	27.2	19.1
50~59세	11.3	12.9	13.8	15.6	18.3	38.3
60세 이상	3.1	4.3	5.8	7.4	8.5	6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나 전국의 취업 연령구조와 비교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2009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6.8%로 전국평균인 30.6%에 비해 노동력의 고령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4〉 취업자 중 50대 이상 비중

## 2. 노동력의 수요 · 공급 전망

### 1) 인구이동의 영향

인구구조 특성만 고려하면 노동력의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고령화된다는 것은 서울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노동력 공급은 인구의 자연증감뿐 아니라 인구이동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서울은 일자리나 교육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구를 유인하는 요소가 많은 지역이다.

우선, 국내 시도 간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다. 2009년 638천여 명이 서울로부터 빠져나간 반면, 586천여 명이 서울시로 들어왔다. 다만 15~24세 집단에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데 이는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이 졸업 후 서울에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인구 순이동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통한 노동력 확보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전출인구 규모도 5만 2천여 명으로 많지 않아 서울시 전체인구 변화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3-2) 서울시 시·도 간 인구이동

(단위: 명)

구분	1995	2000	2005	2009
시·도 간 전입	561,492	636,978	593,036	586,333
시·도 간 전출	883,390	683,917	644,043	638,597
순시·도 간 이동	-321,898	-46,939	-51,007	-52,264
0~14세	-89,956	-16,328	-10,995	-12,364
15~64세	-216,481	-24,686	-34,264	-32,308
(15~24세)	(-10,652)	(19,134)	(21,366)	(18,741)
65세 이상	-15,461	-5,925	-5,748	-7,592

주: 순시·도 간 이동=시·도 간 전입-시·도 간 전출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

서울의 노동력 공급은 주거지를 기준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는 서울시 행정권역 밖에서 거주하면서 서울로 일을 하러 오는 인구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출근을 목적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통행량이 하루 1,215,702건이다. 이는 출근을 목적으로 서울안에서 이동하는 총 통행량 451만여 건의 27%에 달한다. 반면 서울에서 출근을 목적으로 서울시 밖 수도권으로 이동한 통행은 501,312건으로 서울시민의 전체 출근통행의 13.2%이다.

(표 3-3) 수도권 출근 통행량(2006)

(단위: 통행/일, %)

기점 \ 종점	서울		서울 외				총계
	통행량	구성비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외곽	소계	
총계	4,510,850	(100.0)	902,164	3,645,708	59,099	4,606,971	9,117,821
서울	3,295,148	(73.0) (86.9)	64,008	414,842	22,462	501,312 (13.2)	3,796,460 (100.0)
서울 외(소계)	1,215,702	(27.0)					
인천시	117,130		741,533	121,115	2,887	865,535	982,665
경기도	1,057,066		87,358	3,039,152	33,750	3,160,260	4,217,326
수도권 외곽	41,506		9,265	70,599	-	79,864	121,370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2007, 「2006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방안으로 외국인 인력활용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외국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5,501명으로 전체 서울시민의 2.4%이다. 이는 1998년 등록외국인 51천명에서 5배 증가한 것이다. 2008년 기준 서울거주 외국인의

연령구성을 보면 40대가 25.7%로 가장 많으며, 체류자격별로 보면 단순노무인력 58.5%, 전문인력 4.1%로 62.6%가 노동을 목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표 3-4〉 서울거주 외국인 실태(2008)

(단위: %)

연령별		체류자격별	
10세 미만	3.1	단순노무인력	58.5
10대	3.0	전문인력	4.1
20대	16.7	결혼이민자	11.6
30대	20.7	유학생	7.8
40대	25.7	방문동거	7.6
50대	20.9	기타	10.4
50대	10.0		
계	100.0	계	100.0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서울의 노동력은 서울인구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시 권역 밖의 노동력과 외국인 노동력까지 고려한다면,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서울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그리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 서울시 산업구조 특성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력의 공급측면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노동력의 수요측면의 변화 즉,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도 주요 관건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력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을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은 그 특성상 수출이 늘어나도 노동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더 심화될 전망이고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서울의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는 <표 3-5>와 같다. 1998년 서울의 산업구조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컸지만 10년 후인 2008년에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 사업체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건설업 종사자수도 20% 감소하였다.

〈표 3-5〉 서울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단위: 개소, 명, %)

산업별	1998		2008		증감률		비중 증감률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임·어업	59	1,631	10	274	-83.1	-83.2	-84.4	-86.1
광업	60	1,044	33	735	-45.0	-29.6	-49.3	-41.7
제조업	66,368	579,421	56,254	294,649	-15.2	-49.1	-21.9	-57.9
전기·가스·수도사업	153	9,901	493	19,384	222.2	95.8	197.0	62.2
건설업	15,064	291,209	19,691	232,612	30.7	-20.1	20.5	-33.8
도·소매업	229,466	739,794	209,131	768,012	-8.9	3.8	-16.0	-14.0
숙박·음식업	110,671	302,548	114,115	393,802	3.1	30.2	-5.0	7.8
운수업	67,847	218,472	90,617	249,225	33.6	14.1	23.1	-5.5
통신업	1,249	34,907	12,045	255,087	864.4	630.8	788.8	505.2
금융·보험업	8,584	223,974	9,055	241,494	5.5	7.8	-2.8	-10.7
부동산 및 임대업	27,134	106,859	35,950	142,052	32.5	32.9	22.1	10.1
사업서비스업	20,872	254,548	34,020	647,477	63.0	154.4	50.2	110.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86	115,503	1,267	113,579	-14.7	-1.7	-21.4	-18.6
교육서비스업	18,617	162,290	28,873	270,794	55.1	66.9	42.9	38.2
보건·사회복지사업	13,068	112,451	20,240	205,599	54.9	82.8	42.7	51.4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23,513	74,308	21,183	70,624	-9.9	-5.0	-17.0	-21.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59,082	149,755	66,710	173,878	12.9	16.1	4.1	-3.8
전체	663,293	3,378,615	719,687	4,079,277	8.5	20.7	0.0	0.0

자료: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각년도

반면에 정보기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업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특이한 것은 통신업 사업체 증가율(864.4%)에 비해 종사자 증가율(630.8%)이 낮다는 것이다. 즉, 정보기술 사업은 기술집약적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 대비 고용창출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에 가장 기여한 산업분야는 사업서비스업, 교육·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로, 사업체수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 증가율이 더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어서 고용창출 총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 3. 소결

#### 1)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서울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의 감소,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구구조 특성만 고려할 때 노동인력의 부족문제는 서울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노동력이 부족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많은 반면, 노동력의 수요측면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래의 노인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고령화 자체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 환경적인 이유가 서울의 경제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할 필요는 있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고령자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참여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2010년 60.6%로 OECD 국가 평균 54%보다 높다. 이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실제로 2008년 현재 65세 이상 서울노인의 36.7%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생계목적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노동력의 고령화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는 서울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 중 중·고령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노인들은 현세대 노인보다 학력이 높고 건강도 좋은 세대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현재 노인세대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작업능력은 떨어지지만, 인간관계기술, 전략적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신규 노동력은 전문가의식, 의사소통능력, 분석기술, 기업전



문지식 등이 부족하고, 50대 이상 근로자가 경험, 헌신, 집중, 안정성, 전문지식 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lin,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능력이나 신체적인 한계 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직업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고 평생직장개념은 사라지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전업, 재취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베이비부머의 66.7%가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고, 특히 컴퓨터 관련교육(30.3%), 기술·직업교육(11.0%)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고령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자산 특성은 사회전반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고령자 당사자의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현재 고령자 집단의 소득·자산 현황과 미래 고령자 집단의 소득·자산 특성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2003~2008)를, 자산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패널데이터(2007)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보완하였다.

### 1.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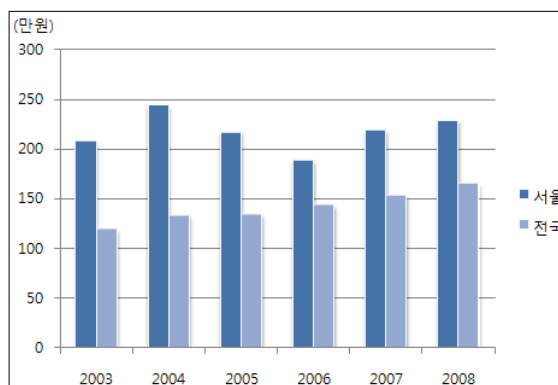
#### 1) 가구소득

##### (1)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소득수준은 전국 평균보다는 양호하지만, 서울시 전체 가구소득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 65세 이상 고령자가구(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293천원으로 서울시 전 가구 평균소득의 66.9%이며, 2006년 이후 고령자가구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2005년까지 1인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1인 가구

를 포함하여 분석하면 고령자가구의 소득수준은 더욱 열악하다. 전 가구 평균소득 대비 고령자 가구 소득은 2006년 52.8%, 2008년 60.3%이다.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5〉 고령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변화추이

〈표 3-6〉 서울시 고령자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

구분	2인 이상 가구						1인가구 포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고령자가구(A)	2,080	2,440	2,169	1,878	2,190	2,293	1,491	1,749	1,891
전가구(B)	2,906	3,031	3,053	3,104	3,291	3,429	2,825	2,992	3,135
A/B	71,6	80,5	71,0	60,5	66,5	66,9	52,8	58,5	60,3

주: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1인 가구를 포함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고령자가구 중 22.9%는 월소득 50만원 미만이고 19%가 50~100만원 미만으로, 고령자가구의 41.9%가 월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도 10.3%여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가구주의 개인특성별로 보면 특히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 1인 가구의 83%, 여성노인 가구의 67.2%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64천원과 958천원이다. 가구주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인 고령자가구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3-7〉 개인특성별 고령자가구 가구소득(서울, 2008)

(단위: %, 천원)

구분	사례수	구성비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전체 <sup>1)</sup>	1,496	22.9	19.0	23.3	15.4	9.1	10.3	1,891
1인 가구	348	54.6	29.3	16.1	0.0	0.0	0.0	564
여성가구주	397	41.8	25.4	18.9	6.8	4.0	3.0	958
중졸 이하	783	28.1	24.1	20.3	14.4	6.1	6.9	1,493

주1: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2) 설문조사 결과

한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68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구주 연령 45~54세 가구소득(3,423천원)의 49.3%, 55~64세 가구소득(2,752천원)의 61.3% 수준이다. 본 조사에서도 가계동향조사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 여성노인, 저학력집단에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혼인상태별로 사별인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는데, 이는 사별인 경우 대부분 여성노인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3-8〉 가구주 개인특성별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구분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
성별	남자	2,831	학력	초졸 이하	1,286
	여자	1,595		중졸	1,885
연령	45~54세	3,423		고졸	2,643
	55~64세	2,752		전문대 이상	3,899
	65세 이상	1,688	가구구성	단독가구	1,035
혼인상태	기혼	2,904		부부가구	1,704
	사별	1,495		2세대 가구	3,276
	이혼·별거	1,816		3세대 가구	3,115

한편,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연령집단 내에서도 현재 일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일을 희망하는 집단(이하 ‘구직자’로 정의)의 가구소득이 은퇴자 소득보다도 더 낮다.

〈표 3-9〉 경제활동 상태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연령 \ 경제활동	취업자	구직자	은퇴자	전체
45~54세	3,914	2,119	2,174	3,423
55~64세	3,261	1,815	2,329	2,752
65세 이상	2,171	1,578	1,611	1,688
전체	3,588	1,934	1,922	2,761

또한 현재의 수입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입에 대한 충분 정도 역시 연령보다는 가구주의 경제활동 여부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가구주가 은퇴한 집단보다도 근로를 희망하지만 미취업상태인 가구의 어려움이 더 크다. 이는 미취업 가구주의 경우 경제적으로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취업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0〉 가구수입 충분도

(단위: %)

구분	매우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부족	(부족+매우부족)	평균점수	
가구주 연령	45~54세	0.9	12.8	35.4	40.6	10.3	(50.9)	2.5
	55~64세	0.3	11.2	38.0	39.3	11.2	(50.5)	2.5
	65세 이상	0.7	11.6	32.6	41.6	13.5	(55.1)	2.4
가구주 경제활동	취업	1.0	16.4	43.4	32.8	6.4	(40.2)	2.7
	구직	0	4.0	12.0	56.0	28.0	(84.0)	1.9
	은퇴	0.5	8.5	31.3	46.3	13.5	(59.8)	2.4
전체	0.7	12.0	35.4	40.5	11.4	(51.9)	2.5	

\* 평균점수는 5점 만점 기준 (매우 충분=5, 매우 부족=1)

## 2) 소득구성

### (1) 가계동향조사 분석결과

2008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서울 고령자가구의 소득원별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이 40.8%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이전소득(24.3%), 재산소득(18.9%), 사업소득(16.1%) 순이다. 2003년도와 비교하면 근로소득 비중이 29.2%에서 40.8%로 급증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감소하였다. 전국노인 평균과 비교해도 서울노인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 전국노인은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 2008년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고령자가

구 소득의 40% 이상이 이전소득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고령자가구가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서울노인의 근로소득 비중이 40.8%로 급증한 것은 근로소득 금액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서울노인의 근로소득 금액은 2003년 대비 1.54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 노인의 근로소득 금액이 평균 1.41배 증가한 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전국노인은 평균적으로 나머지 소득액이 모두 증가한 반면, 서울노인은 사업소득, 이전소득의 절대액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재산소득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득총액의 증가율은 서울노인이 오히려 더 낮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노인의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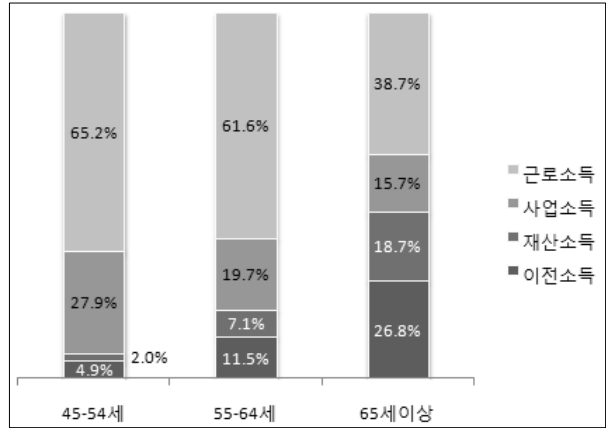
<표 3-11> 고령자가구 소득원별 구성

(단위: 천원, %)

		2003		2008		B/A
		소득(A)	구성비	소득(B)	구성비	
서울	근로소득	607	29.2	935	40.8	1.54
	사업소득	428	20.6	368	16.1	0.86
	재산소득	410	19.7	432	18.9	1.05
	이전소득	635	30.5	558	24.3	0.88
	계	2,080	100.0	2,293	100.0	1.10
전국	근로소득	381	32.0	539	32.7	1.41
	사업소득	170	14.3	241	14.6	1.42
	재산소득	133	11.1	193	11.7	1.45
	이전소득	508	42.6	676	41.0	1.33
	계	1,192	100.0	1,649	100.0	1.38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고령자가구의 소득구성은 40~50대 미래 노인가구와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비중은 증가한다. 특히 65세 이상 가구는 45~54세 가구에 비해 재산소득 비중은 9.3배, 이전소득 비중은 5.5배 높다.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6〉 연령별 소득구성

(2)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였다. <표 3-12>는 소득원별로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다. 45~54세 집단에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5.4%만이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 반면에 자산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3-12〉 정기적인 수입원

(단위: %)

구분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자산	공적	개인	다른 가족	정부	사회단체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	소득	연금	연금	도움	보조금	지원금
가구주 연령	45~54세	73.1	41.1	7.8	10.7	3.7	0.5	3.7	1.6	0.2
	55~64세	51.2	33.6	26.1	19.7	19.7	6.1	8.5	1.7	0.3
	65세 이상	15.4	13.5	13.5	36.0	53.2	19.5	35.6	12.4	0.7
가구주 경제 활동	취업	100.0	26.2	10.2	4.6	3.4	0.4	2.8	0.6	0.0
	구직	1.0	58.0	17.0	24.0	21.0	5.0	19.0	4.0	1.0
	은퇴	2.8	31.5	19.8	38.5	44.5	16.3	25.8	9.5	0.8
전체		51.2	31.5	14.7	20.1	21.6	7.2	13.6	4.5	0.4

주: %는 해당 항목의 수입이 있는 비율임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로는 미취업상태로 구직 중인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자산소득이 5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자산소득(24%), 공적연금(21%), 다른 가족의 도움(19%) 순이다. 반면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 공적연금, 자산소득 수입이 있는 가구가 많고,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도 많은 편이다.

45~54세 가구, 가구주가 취업 중인 가구는 가구주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반면, 55~64세 집단은 기타 가구원소득, 자산소득이 주수입원인 경우가 다소 증가하고, 65세 이상 집단으로 가면 자산소득, 공적연금이 가장 주요한 수입원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경제활동별로 보면 구직 중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주수입원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은퇴가구는 자산소득과 배우자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다. 즉, 은퇴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산소득, 공적연금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반면, 은퇴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취업상태인 가구는 은퇴가구에 비해 자산소득과 공적연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주수입원

(단위: %)

구분		가구주 근로·사업소득	배우자 근로·사업소득	기타가구원 근로·사업소득	자산 소득	공적 연금	개인 연금	다른 가족 도움	정부 보조금	계
가구주 연령	45~54세	72.2	17.9	2.5	3.2	1.1	0	2.3	0.7	100.0
	55~64세	47.4	16.0	14.0	10.6	6.8	0.7	3.4	1.0	100.0
	65세 이상	13.9	8.6	9.4	23.2	20.6	4.9	14.6	4.9	100.0
가구주 경제 활동	취업	95.8	1.0	2.8	0.2	0.2	0	0	0	100.0
	구직	1.0	50.5	14.4	10.3	9.3	1.0	10.3	3.1	100.0
	은퇴	2.5	23.6	12.3	24.1	17.6	3.5	12.3	4.0	100.0
전체		49.2	14.9	7.7	10.8	8.0	1.5	5.9	1.9	100.0

## 2. 자산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노인의 자산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노인과 미래노인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5년부터 2년 단위로 실시되었다. 2009년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2007년도 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분석하였다.

## 1) 자산

국민연금 패널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자산총액은 평균 2억 3천만원 정도로 45~64세 가구주 자산총액의 약 55% 수준이다. 고령자가구의 자산규모는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였고, 1억원 미만이 46.5%로 가장 많은 반면, 10억원 이상은 3.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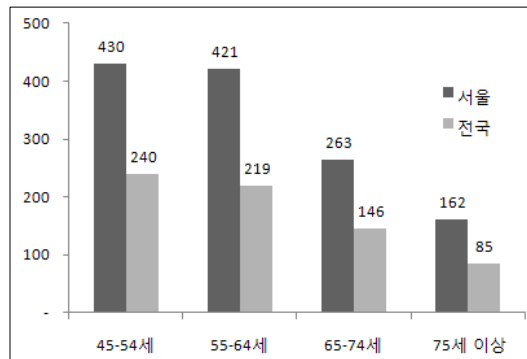
〈표 3-14〉 서울 고령자가구 총자산 분포

(단위: %)

구분	평균액	구성비					
		없음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45~54세	4,3억원	0,0	33,2	25,6	14,3	11,7	15,0
55~64세	4,2억원	0,8	30,9	30,0	13,1	10,4	14,8
65세 이상	2,3억원	2,4	46,5	24,6	13,8	9,2	3,6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전국과 서울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서울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산수준을 보이지만, 전국과 서울 모두 가구주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산총액은 감소한다. 특히 75세 이상 가구주는 평균 자산총액이 1억 6천만원으로 45~54세 가구주 총자산의 37.6%, 65~74세 가구주 총자산의 61.5%이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그림 3-7〉 가구주 연령별 평균 자산총액(단위:백만원)

65세 이상 현재 고령자 및 미래 고령자인 45세 이상 가구의 자산구성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부동산 의존도가 80%를 넘는다. 부동산 자산총액은 45~64세 미래 고령자층에서 평균 3억원



을 초과하여 현재 고령자가구보다 부동산 자산총액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고 경기변동에 따라 자산가치의 변화가 심하다는 점에서 노후대비책으로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자산은 모든 연령층에서 10% 내외로 낮은 편이다. 특히 55~64세 집단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은 89.9%이고 금융자산 비중은 9.3%로 부동산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계층이다. 이들의 금융자산액은 평균 3천 9백만원으로 현재 고령자와 큰 차이가 없어 55~64세 집단의 노후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5〉 가구주 연령별 자산구성

(단위: 백만원, %)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평균액	구성비	평균액	구성비	평균액	구성비	평균액	구성비
부동산	374	87.0	378	89.9	226	85.9	129	80.1
금융자산	49	11.5	39	9.3	32	11.9	29	17.7
기타자산	6	1.5	4	0.8	6	2.3	4	2.2
계	430	100.0	421	100.0	263	100.1	162	10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 2) 부채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007년 국민연금 패널데이터에서는 2천 6백만원 정도이다. 자산액과 반대로 부채액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다. 따라서 65세 이상 가구 중 63.4%는 부채가 전혀 없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액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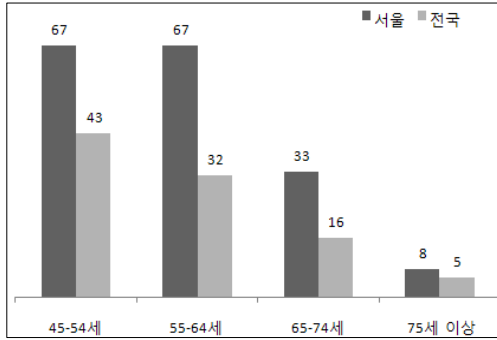
〈표 3-16〉 서울 고령자가구 총부채 분포

(단위: 백만원, %)

구분	평균액	구성비				
		없음	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10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
45~54세	67	24.9	21.2	13.1	20.5	20.3
55~64세	67	34.2	19.3	12.7	13.2	20.7
65세 이상	26	63.4	15.8	5.2	6.2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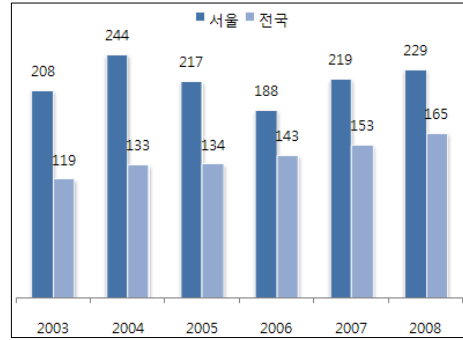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국민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데이터로 전국과 서울의 가구주 연령별 부채액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서울의 가구주 부채액이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액은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노인들은 자산총액이 전국 평균보다 많기 때문에 부채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그림 3-8> 평균 부채총액(단위: 백만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그림 3-9> 평균 순자산액(단위: 백만원)

자산과 부채액 조사를 토대로 순자산액을 산출하면 <표 3-17>과 같다. 서울의 65세 이상 가구의 총자산 234백만원에서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 평균은 208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적자가계 가구로 65세 이상 가구의 1.6%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45~54세 가구 중에서는 14.8%, 55~64세 가구 중에서는 6.8%가 부채가 더 많았다.

<표 3-17>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단위: 백만원, %)

	평균액		순자산액 구성							
	총자산	순자산	-5천만원 미만	-5천~0 미만	0~5천만원 미만	5천~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45~54세	430	363	5,6	9,2	15,1	10,4	24,6	13,4	16,1	5,5
55~64세	421	354	2,6	4,2	15,0	15,6	29,4	10,3	12,7	10,2
65세 이상	234	208	0,3	1,3	36,0	14,3	26,6	11,1	8,0	2,6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 3. 불균등과 양극화

#### 1) 빈곤율

##### (1) 절대적 빈곤율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빈곤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서울노인은 2008년 51,307명으로 전체 수

급자 중 26.5%이며, 전체 수급자 중 노인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전체 노인 중 수급자 비율은 5.8%이며 2002년 이후 5.7~5.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더 높다. 서울시 독거노인은 2008년 183,818명으로 이 중 17.3%인 31,863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다. 앞서 소득부분에서도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독거노인은 소득보장 측면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18〉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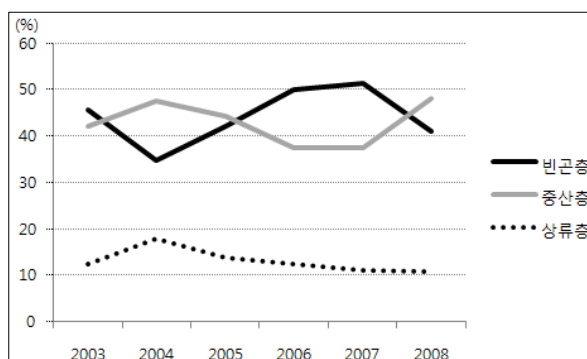
(단위: 명, %)

	총수급자	노인수급자	수급자 중 노인비율	노인 수급률	독거노인 수급자	독거노인 수급률
2002	147,214	34,761	23.6	5.7	20,536	22.6
2003	150,341	36,703	24.4	5.7	20,881	20.9
2004	160,100	39,531	24.7	5.7	23,901	21.4
2005	175,601	43,061	24.5	5.9	25,699	20.6
2006	185,934	46,283	24.9	5.9	29,268	19.8
2007	191,893	49,996	26.1	5.9	30,969	19.5
2008	193,260	51,307	26.5	5.8	31,863	17.3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 (2) 상대적 빈곤율

서울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50~150%를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고령자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가구 중 빈곤층 비율은 2008년 41.1%이다. 이는 전 가구 중 빈곤층 비율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0〉 서울고령자가구의 소득계층 변화 추이

16.7%의 2.5배에 달한다. 반면에 중산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비율(48.2%)은 전 가구 중 중산층 비율(59.6%)의 80%에 불과하다.

한편, 고령자 중에는 독거노인이 많고, 독거노인의 경제수준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아진다. 1인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빈곤율은 50.9%로 증가하였다.

〈표 3-19〉 서울시 소득계층 구조

	연도	전 가구			노인가구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2인 가구 이상	2003	15.1	61.5	23.4	45.5	42.1	12.4
	2004	15.3	62.4	22.3	34.8	47.4	17.8
	2005	16.0	62.2	21.9	42.1	44.3	13.7
	2006	16.6	59.4	24.0	50.1	37.5	12.3
	2007	17.4	59.0	23.7	51.3	37.5	11.2
	2008	16.7	59.6	23.8	41.1	48.2	10.7
1인 가구 포함	2006	21.2	52.5	26.3	59.5	29.6	10.8
	2007	22.1	51.1	26.8	59.7	29.7	10.7
	2008	21.4	51.1	27.5	50.9	38.8	10.3

주: 경상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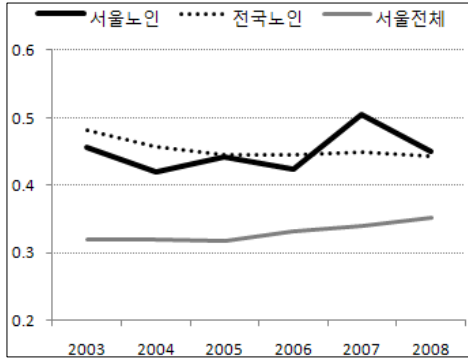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 2) 불균등 정도

### (1) 소득불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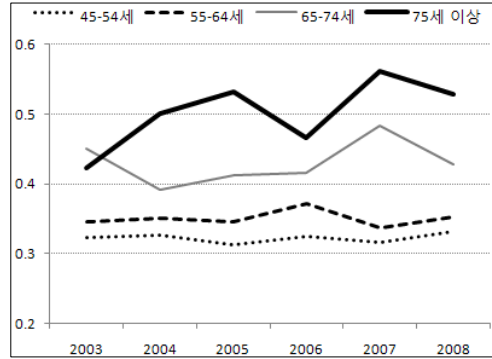
소득불균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대체로 서울의 고령자가구는 서울 전체가구 평균보다 지니계수값이 높아 소득불균등도가 높다.

2003~2008년간 변화를 보면 서울의 고령자가구의 지니계수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8년 현재 0.4502를 보였다. 전국 고령자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2006년까지는 서울 고령자가구의 지니계수가 낮았으나 2007년부터는 서울 고령자가구의 불평등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참조). 한편,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2007~2008년도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된다(<그림 3-12> 참조).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1〉 소득 지니계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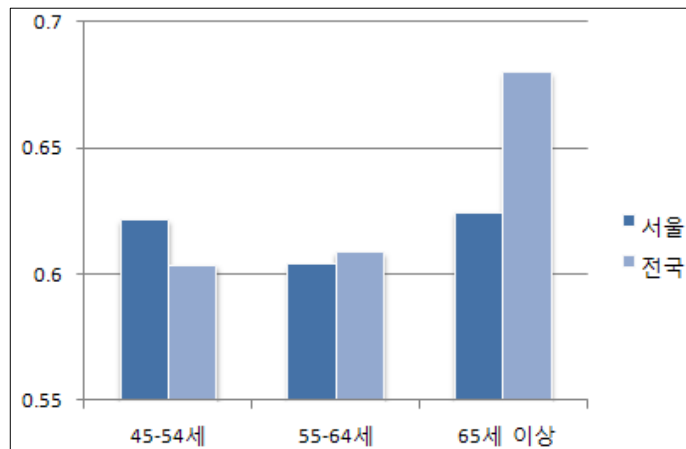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2〉 가구주 연령별 소득 지니계수(서울)

## (2) 자산불균등

고령자가구의 자산특성은 국민연금공단의 2007년도 국민연금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 지니계수도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소득보다 자산에서의 불균등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전국의 총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가구주 연령 45~54세 집단에서 서울의 불균등 정도가 더 높은 반면,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서울의 자산 불균등도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그림 3-13〉 가구주 연령별 총자산 지니계수

서울표본의 가구주 연령별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55~64세 집단에서 자산불평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유형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하는 기타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했다. 한편, 65세 이상 현재 노인은 부동산자산의 불평등도가 금융자산 불평등도보다 높은 반면, 55~64세 집단은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다. 앞서 이 집단은 금융자산의 보유액 및 구성비도 모두 낮아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시사한다.

〈표 3-20〉 가구주 연령별 자산 지니계수(서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총자산		0.6217	0.6039	0.6246
자산 유형	부동산자산	0.6414	0.6350	0.6861
	금융자산	0.6408	0.7058	0.6677
	기타자산	0.7325	0.7245	0.8914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 3) 양극화

#### (1) 소득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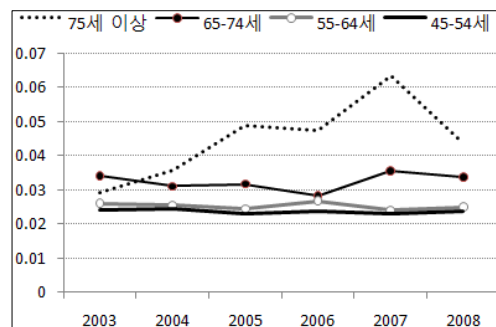
소득분포 실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소득양극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소득양극화 지수 중 ER지수 값을 산출한 결과 고령자가구의 소득양극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 가구 평균값은 물론 전국노인의 평균값과 비교해도 서울 고령자가구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다.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ER지수 값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45~54세와 55~64세 집단은 소득양극화 정도가 유사한데 비해 65세 이상 집단은 ER지수가 상승하였고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크게 상승하였다.

〈표 3-21〉 고령자가구 소득 ER지수

	서울 전 가구	서울노인	전국노인
2003	0,02325	0,03370	0,03842
2004	0,02309	0,03225	0,03481
2005	0,02321	0,03560	0,03435
2006	0,02436	0,03000	0,03343
2007	0,02548	0,04068	0,03452
2008	0,02599	0,03757	0,03390

주: 2인 이상 가구 경상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4〉 가구주 연령별 소득 ER지수(서울)

## (2) 자산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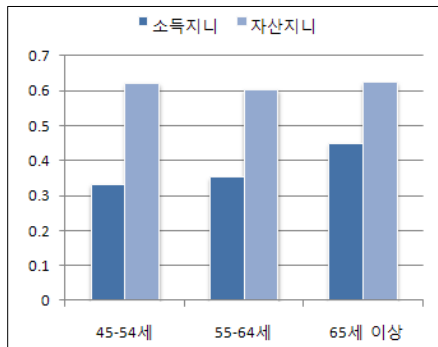
자산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ER지수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세부 자산종류별로는 “0”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ER지수의 산술식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극화 지수 값이 커지고 있다. 전국과 비교하면, 자산불균등 정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서울의 고령자가구의 자산양극화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45~54세 집단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3-22〉 총자산 ER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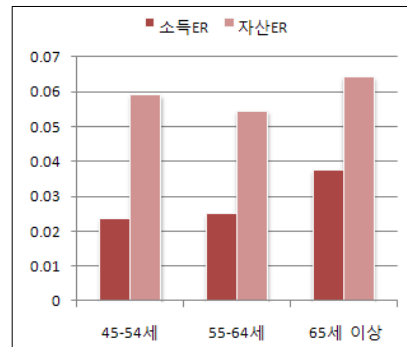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서울	0,05906	0,05451	0,06422
전국	0,05348	0,05670	0,0864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2007) 원자료 분석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 정도가 심하며, 특히 고령자가구의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5〉 소득 및 자산 지니계수



〈그림 3-16〉 소득 및 자산 ER지수

## 4. 소결

이상에서 고령자가구의 소득과 자산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자산규모는 감소하지만, 서울의 고령자가구는 소득 및 자산 모두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서울의 현재 고령자 및 미래 고령자의 소득·자산 분석결과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령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은 일반적인 추이이지만, 서울가구 평균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액 비중이 점차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특히 낮은 집단은 독거노인, 여성노인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독거노인 중 17.3%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독거노인의 70.9%가 여성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정도도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 더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적소득보장의 주요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준고령자 가운데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집단도 고위험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소득수준은 물론 자산축적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자가보유율,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았다. 특히 55~64세의 미취업자 집단이 가장 열악하였다. 1인 가구나 여성노인가구가 기초소득보장 대상이라면 이들은 고용지원을 통한 소득보장이 필요한 집단이다.

(표 3-23) 연령·경제활동상태별 특성

구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사례수)		(438)	(295)	(267)	(1,000)
평균 자산액 (억원)	취업자	4.6	3.7	3.5	4.3
	은퇴자	3.3	5.3	3.9	4.2
	구직자	2.6	2.6	2.4	2.6
자가거주율 (%)	취업자	70.7	80.4	76.3	73.2
	은퇴자	57.7	77.1	78.2	72.0
	구직자	45.3	37.9	55.6	43.0
공적연금 가입 (%)	취업자	62.1	59.5	50.0	60.4
	은퇴자	39.4	49.2	48.3	47.0
	구직자	41.5	37.9	33.3	39.0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다. 고령자가 되면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결국 은퇴 전에 부동산 자산이나 공적·사적 연금, 저축 등의 소득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노인들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45~54세 집단은 자산규모가 현재 노인들에 비해 크고, 금융자산도 많은 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55세 집단은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도 높고 특히 금융자산,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55~64세 준고령자는 현재 65세 이상보다는 낮지만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준비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45~54세 집단의 14.2%가 전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고 44.1%는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55~64세 집단도 16.9%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고, 46.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



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노후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가구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8> 참조).

셋째, 소득구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사점은 근로소득 비중은 증가하고 이전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비해 2008년도 서울노인은 이전소득의 상대적 구성비뿐 아니라 절대금액도 감소하였다.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가운데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한 것은 2007년, 2008년 2개년도 데이터이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 비해 2008년도에 사적이전소득액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가구가 가족들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점차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전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넷째, 자산구성에 있어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노후를 위해 저축이나 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노인들도 부동산 자산이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에 따라 재산가치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편중의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현재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중심의 미래노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금융자산과 연금자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65세 이상 고령자가구로 갈수록 불균등과 양극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자산 부문에서 불균등과 양극화가 더 심하였다. 이는 미래노인이 전반적으로 현재 노인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균등과 양극화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빈곤노인도 함께 증가할 수 있고, 이들은 결국 공공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남는다. 빈곤노인의 문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지원이 이루어지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노인들에게 적절한 노후대책을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교육하는 일도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가구는 비고령자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지만, 현재의 고령자에 비해 미래의 고령자 집단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2030년에 노년기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가입 등 노후준비도가 높고 자산축적도 많이 해서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현재 40~50대 계층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장년층이고 특히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금융계를 중심으로 중산층 붕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들의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장년층이 고령화되었을 때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는 서울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결과, 45~54세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고령자뿐 아니라 55~64세 준고령자 집단보다 현재 수준은 물론 노후준비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55.9%에 불과하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노인계층에서도 불균등과 양극화, 노인빈곤 문제는 존재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고용지원 또는 소득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대상은 55~64세 준고령자 집단이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소득 자산 수준이 열악하고, 노후준비도도 낮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5~64세 미취업가구의 경제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은퇴자보다도 더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영향이 주로 당시 30대였던 베이비붐세대보다 40대였던 현재 준고령자 계층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인 규모 증가는 노인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규모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후연금이 보편화되고 노후준비율이 높아지면서 미래노인의 소득과 자산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이들의 소비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에서 잠재적인 소비력이 향상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절에서는 향후 고령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소비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고령자의 지출특성과 소비행태 및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령자 가계지출 특성

##### 1) 지출규모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계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2인 이상 고령자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175만원이며 이는 전체가구 평균지출의 73%에 해당된다. 반면 45~54세 중년층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전체 가구 평균지출의 113.1%, 55~64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지출의 88.2%에 해당한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계지출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표 3-24〉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가계지출<sup>1)</sup> 추이

(단위 :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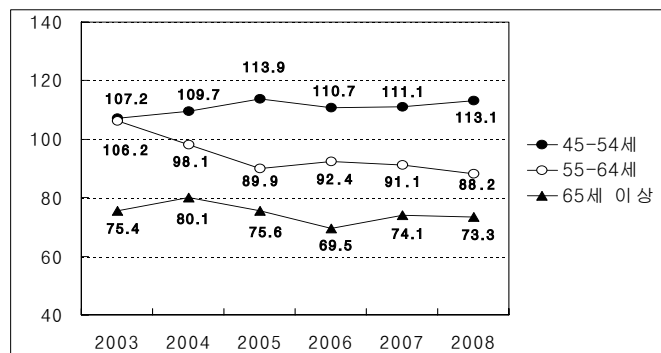
구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전체 대비 비율 <sup>2)</sup>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2003	2,295	2,273	1,613	2,140	107	106	75
2004	2,394	2,141	1,748	2,183	109	98	80
2005	2,533	2,000	1,682	2,224	113	89	75
2006	2,492	2,080	1,563	2,250	110	92	69
2007	2,569	2,105	1,713	2,312	111	91	74
2008	2,700	2,107	1,751	2,388	113	88	73

주 1: 전 가구(2인 이상 비농가)의 소비지출임.

2: 전체대비비율 = (연령별 월평균 가계지출 ÷ 전체 월평균 가계지출) × 1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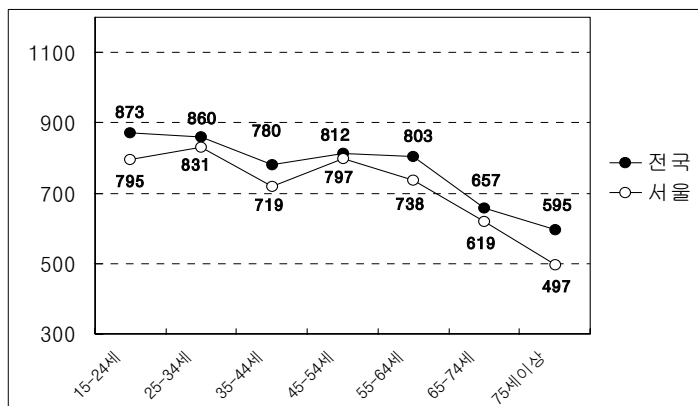
2003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령대별 가계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 3-17>에서 살펴보면 고령자가구의 상대적인 지출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54세 가구 가계지출의 전체가구 가계지출 대비 비율이 2003년 107.2%에서 2008년 113.1%로 증가한 반면, 고령자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75.4%에서 73.3%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령자가구의 상대적인 가계지출 수준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7〉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가계지출 비율 추이(2인 이상 가구)

한편, 고령자가구는 가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구의 가계지출 수준이 개인의 지출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가구의 1인당 지출액을 산출하여 개인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령집단별로 <그림 3-18>과 같이 1인당 평균소비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소비지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2008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8> 연령별 1인당 소비지출현황

은퇴 후 노인들의 소비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먼저 은퇴 전후의 소비수준을 비교한 KDI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고령자의 은퇴 전후 소비수준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조기은퇴는 오히려 은퇴 전 소비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형표 외, 2006). 양희승(2004)도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감소와 고령자의 낮은 임금 수준은 고령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후 가구의 소비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경우 78.7%가 은퇴 후 가구생활비 지출액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45~54세 중년층의 경우 지출감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5> 은퇴 후 가구생활비 지출액 변화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줄었다	78.3	73.2	80.5	78.7
늘었다	4.3	5.6	4.2	3.8
변화없음	17.5	21.1	15.3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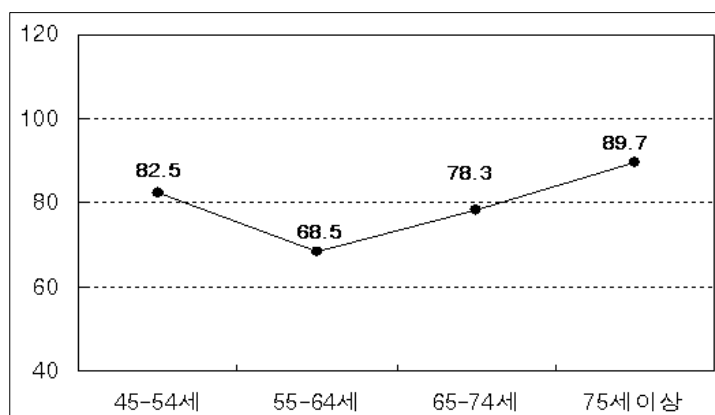
은퇴 후 지출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은퇴 이후 감소한 수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인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구의 경우 77.1%가 은퇴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생활비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55세~64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은퇴’라는 사건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미래노인층인 45~54세 집단은 은퇴 후 의도적인 절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생활비 지출 감소의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수입이 줄어서 의도적으로 절약	80.2	78.8	86.3	77.1
돈 쓸 곳이 자연적으로 줄음	14.7	17.3	9.5	16.9
지출할 필요없는 것이 많아짐	5.1	3.8	4.2	6.0

은퇴 후 생활비 지출은 감소하나 소득대비 지출수준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지출의 비율로 산출한 평균소비성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65~74세 가구는 소득의 78.3%, 75세 이상 가구는 소득의 89.7%를 지출한 반면 55~64세 가구는 소득의 68.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출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노년기 소득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100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9〉 2008년 서울의 평균소비성향(1인 이상 가구)

## 2) 지출항목 구성

가계지출의 구조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08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표 3-27>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비가 증가하고 교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가구의 보건의료비는 전체 가계지출의 10.0%였으며 45~54세 가구의 보건의료비는 전체 가계 지출의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비지출의 경우 45~54세 가구는 전체 지출의 18.7%, 65세 이상 가구는 2.8%를 지출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지출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3-27> 서울시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지출<sup>1)</sup>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2003				2008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전체
총소비지출	2,295.8 (100.0)	2,273.6 (100.0)	1,613.7 (100.0)	2,140.9 (100.0)	2,700.9 (100.0)	2,107.4 (100.0)	1,751.7 (100.0)	2,189.4 (100.0)
식료품	583.3 (25.4)	588.4 (25.9)	481.0 (29.8)	553.0 (25.8)	658.8 (24.4)	604.4 (28.7)	529.7 (30.2)	562.1 (25.7)
주거	78.6 (3.4)	59.9 (2.6)	73.0 (4.5)	72.1 (3.4)	94.1 (3.5)	91.5 (4.3)	75.7 (4.3)	89.5 (4.1)
광열수도	105.1 (4.6)	113.6 (5.0)	108.2 (6.7)	101.3 (4.7)	128.5 (4.8)	125.2 (5.9)	114.2 (6.5)	111.3 (5.1)
가구집기가사용품	65.2 (2.8)	78.2 (3.4)	60.3 (3.7)	78.4 (3.7)	85.2 (3.2)	63.6 (3.0)	73.1 (4.2)	87.9 (4.0)
피복 및 신발	126.3 (5.5)	134.5 (5.9)	79.7 (4.9)	120.3 (5.6)	140.5 (5.2)	106.8 (5.1)	76.1 (4.3)	113.3 (5.2)
보건의료	99.5 (4.3)	118.7 (5.2)	133.8 (8.3)	100.1 (4.7)	117.8 (4.4)	130.3 (6.2)	176.0 (10.0)	116.8 (5.3)
교육	364.8 (15.9)	79.6 (3.5)	57.6 (3.6)	258.2 (12.1)	505.1 (18.7)	49.7 (2.4)	48.5 (2.8)	272.7 (12.5)
교양오락	109.6 (4.8)	130.6 (5.7)	84.8 (5.3)	116.3 (5.4)	120.6 (4.5)	109.3 (5.2)	72.4 (4.1)	110.4 (5.0)
교통통신	367.9 (16.0)	397.9 (17.5)	197.5 (12.2)	350.1 (16.4)	412.3 (15.3)	324.1 (15.4)	219.9 (12.6)	337.2 (15.4)
기타소비지출 <sup>2)</sup>	395.4 (17.2)	572.3 (25.2)	337.9 (20.9)	391.2 (18.3)	438.0 (16.2)	502.4 (23.8)	366.1 (20.9)	388.3 (17.7)

주 1: 전 가구(2인 이상 비농가)의 소비지출임.

2: 기타소비지출은 담배, 이미용, 장신구, 잡비 등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분석, 2003, 2008

그 외에도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광열비, 수도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과 2008년 가계지출구성을 비교해보면 2003년 8.3%였던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2008년 10.0%로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가구가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를 전후하여 가계지출의 규모가 변화할 뿐 만 아니라 가계지출의 구조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든 지출항목은 외식비(25.5%)와 식료품비(21.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45~54세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외식비가,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든 지출항목(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식료품비	21.8	14.1	25.4	22.3
외식비	25.5	40.8	20.3	23.2
피복비	10.0	5.6	15.3	8.5
주거비	0.5	0.0	0.8	0.5
교육비	11.8	9.9	12.7	11.8
의료비	0.8	0.0	0.8	0.9
여가문화비	7.8	5.6	9.3	7.6
교통비	6.3	4.2	5.9	7.1
통신비	2.8	4.2	1.7	2.8
내구재구입비	2.3	0.0	0.8	3.8
가족용돈생활비	2.1	1.4	1.7	2.4
공과금/연금	3.8	1.4	2.5	5.2
경조사/기부금	2.5	4.2	1.7	2.4
없다	2.5	8.5	0.8	1.4

은퇴 후 생활비 지출이 가장 늘어난 항목에서는 연령집단 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45~54세 집단의 경우 식료품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4%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의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4%에 달하였다.

〈표 3-29〉 은퇴 후 생활비가 늘어난 지출항목(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식료품비	14,8	33,8	12,7	9,5
외식비	1,3	1,4	1,7	0,9
피복비	0,3	1,4	0,0	0,0
주거비	2,8	4,2	4,2	1,4
교육비	5,0	18,3	3,4	1,4
의료비	31,5	11,3	22,0	43,6
여가문화비	4,0	0,0	2,5	6,2
교통비	1,3	2,8	1,7	0,5
통신비	5,0	7,0	3,4	5,2
가족용돈생활비	1,3	1,4	0,0	0,5
공과금/연금	13,0	5,6	20,3	11,4
부채상환	1,0	0,0	2,5	0,5
경조사/기부금	14,3	7,0	20,3	13,3
없다	4,8	5,6	5,1	4,3

## 2. 소비행태와 의식의 변화

노인의 실제적인 소비활동은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특성 이외에도 가구구성이나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특성의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가구구성의 변화는 개인이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과 관련한 요구나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노인세대 가구구성의 특징적인 변화는 노인부양가구의 감소와 노인부부가구, 노인단독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2-5 참조>). 이러한 변화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전통적인 부양기능의 약화와 함께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노부모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소하는 가족 내 부양자원을 대체,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적)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인과 비교했을 때 미래노인의 생활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주체로서 노인의 인식과 태도, 가치의 변화는 노년기의 소비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의 노인층은 노년기를 자기실현의 기회, 그리고 제3의 인생으로 인식하여 노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 및 여가와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2005). 이러한 생활방식과 욕구의 변화는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주거대안,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여가 및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0〉 현재 고령자와 예비 고령자의 특성 비교

구분	현재 고령자	예비 고령자
인식	인생의 황혼기	자기실현의 기회, 제3의 인생
태도	검약, 소박, 무취미	여유, 즐길, 다양한 취미
노후설계	자녀세대에 의존	계획적인 준비, 독립성 유지
레저생활	여가는 수단	여가 자체에 의미 부여
자산처분	자손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사용
생활	한국전통식 생활	타 문화 교류적 생활

\* 자료 :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2005

일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니어부유층인 단카이 세대의 소비심리를 “Fun” “Family”, “Future”의 세 개의 키워드 “3F”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행, 골프, 자동차, 홈시어터, 레저, 식도락, 패션 등 생활의 즐거움(Fun)을 추구하고, 가족(Family)생활을 중시하여 재건축, 인테리어, 전원주택, 별장,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며, 미래(Future)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웰빙, 자산운용, 컴퓨터와 어학 등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정호성,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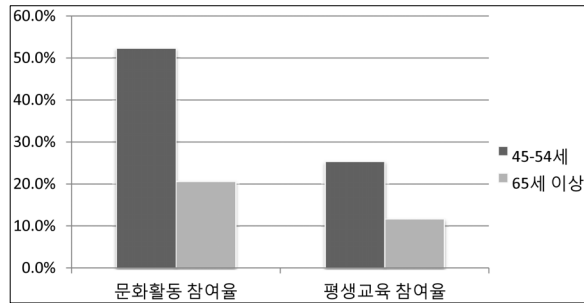
〈표 3-31〉 일본 단카이세대의 소비심리

Fun	여행, 골프, 자동차, 홈시어터, 레저, 식도락, 패션
Family	재건축, 인테리어, 전원주택, 별장, 애완동물
Future	웰빙, 자산운용, 컴퓨터와 어학 등 평생학습

\* 자료 : 정호성, 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미래노인층의 소비행동 특성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45~54세 중년층 성인들의 현재 소비특성이나 생활양식을 통해 전망해볼 수 있다. 특히 미래노인층은 현재 노인에 비해 은퇴 후 일에 집중하던 시간을 자신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노후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08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을 위한 추가 근로보다 여가시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6.8%인데 반해 45~54세 중년층의 경우 4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의 차이는 현재 중년층의 문화,여가,교육 등과 관련한 생활양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문화활동참여율은 20.6%에 그치고 있는데 비해 45~54세의 문화활동참여율은 52.3%로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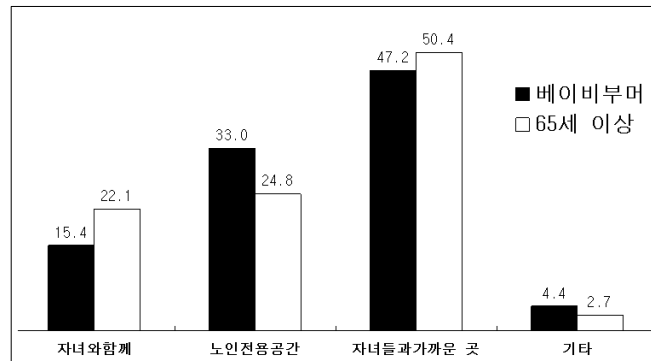


자료: 2008 서울서베이

〈그림 3-20〉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노인층은 11.7%만이 평생교육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34.7%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반면 45세~54세 중년층의 경우 25.4%가 평생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 69.4%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문화, 여가, 레저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년층은 노년기 진입 후에도 이들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욕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미래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은 노후의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붐 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주거에 대한 선호를 비교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세대에 비해 ‘자녀와 가까운 독립된 공간(47.2%)’ 혹



자료: 2009 서울서베이

〈그림 3-21〉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형태

은 ‘노인전용공간(33.2%)’을 노후 주거유형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에 불과하여 미래노인층을 위한 새로운 거주유형, 다양한 주거관련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3. 소결

노인의 소득과 자산수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노인에 비해 미래노인층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노인층의 소비력은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년기의 평균소비성향은 중장년층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의 주체로서 노인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기구의 소비특성은 소득수준, 소비성향과 같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노년기의 가구구성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노화에 따른 심리·사회·신체적인 특성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노인층에 비해 미래노인층은 보다 나은 경제력을 갖추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래 노인세대의 소비행태 변화는 노인소비자의 양적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민간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문형표 외, 2006). 즉, 증가하는 소비계층인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고령층의 수요가 많은 보건·의료·건강·레저·주택산업 등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령친화산업의 실제적인 성장은 미흡하며 여전히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특성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수요를 파악하고 고령화하고 있는 시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미래의 노인은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퇴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으로 노인의 개인적인 소득수준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오히려 안정과 검약을 지향하는 소비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고령자기구의 소비지출 제한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출감소가 경제침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소비력을 가진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인 과제이다. 예를 들어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혹은 노년기 진입 후 개인이 살아가게 될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를 활동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노년기는 모든 활동으로부터 물러나 개인의 일생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을 제 1덕목으로 여기는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생애발달단계 중의 하나, 혹은 ‘중년의 끝없는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즉, 노화과정을 완만한 쇠퇴가 아닌 활력있는 성장의 기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화과정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노년기의 ‘삶의 질’, 혹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혹은 활력있는 노화(Vital Aging)는 노년기의 ‘삶의 질’과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활동적인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이전 시기의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International Council on Active Aging에 따르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는 개인이 가능한 한 충분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에 참여하는 것(engaged in life)으로 정의된다. 신체적, 종교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인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성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이 노화해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ICAA 홈페이지 자료, “Active Aging Philosophy”). 또한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상태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함께 미래노인이 살아가게 될 사회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교육수준과 정보 및 지식 습득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문화여가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래노인층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은 현재노인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즉, 미래노

인의 특징은 자기계발과 자기관리,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재취업 등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로 정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배움, 자원봉사, 일에 대한 열정,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와 사회공헌이 미래의 새로운 노인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정경희 외, 2006). 미래노인층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화,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전망은 현재 중장년층의 경험과 인식, 태도 등이 현재 노인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봄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 1. 미래노인의 특성변화

### 1) 역량

교육수준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미래노인층은 양적, 질적인 교육경험에 있어서 현재노인과는 다른 역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5세 이상 성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층에 비해 미래노인층의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5~54세 미래노인층은 대졸 이상도 30.7%에 달하여 학력에 있어서 현재노인과 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을 보여준다.

<표 3-32> 교육수준

(단위: %)

구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무학/초졸 미만	0.9	4.0	21.6
초졸 이하	7.6	19.9	31.7
중졸 이하	16.2	21.2	14.2
고졸 이하	44.6	34.1	19.0
대졸 이상	30.7	20.7	13.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미래노인은 평생학습이나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현재 노인에게 비해 경험률이 높아서 사회적 학습의 접근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5세 이상 성인의 평생교육 경험 여부를 연령집단 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 11.3%만이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54세 중년층의 경우 25.2%가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행태를 비교해보면 45~54세 중년층의 경우 40.4%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78.2%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표 3-33〉 평생교육과 인터넷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평생교육 경험 <sup>1)</sup>	25.2	21.1	11.3
인터넷 사용 경험 <sup>2)</sup>	82.6	57.1	21.8

자료 1: 서울서베이, 2008

2: 이 연구 설문조사

## 2) 가치관

전통적인 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노인집단은 점차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형태나 가족가치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구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노인가구, 즉 노인부모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노인부양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2-5> 참조). 이러한 노인가구구성의 변화는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뜻하며 동시에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됨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노인의 의존도도 약화되고 있다. 건강악화 시 희망동거인에 대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도 52.1%가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살겠다고 응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현재 노인층은 20.6%가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반면 45~54세인 미래 노인층은 8.4%만이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대답해 연령이 상승할수록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건강악화 시 희망 동거인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혼자 또는 배우자와	55.5	57.3	55.9	52.1
자녀와 함께	13.3	8.4	13.9	20.6
형제나 친척과 함께	1.5	1.6	2.0	0.7
요양시설이나 병원	21.0	21.7	19.7	21.3
모르겠다	8.7	10.8	8.5	5.2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도움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8.1%에 달하였으나 45~54세 중년층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노인층은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5〉 노후 자녀도움 희망여부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예	17.8	11.0	18.6	28.1
아니오	79.7	85.2	80.3	70.0
자녀 없음	2.5	3.9	1.0	1.9

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자녀에게서 받는 도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자산상속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현재 노인층(65세 이상)에 비해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자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자산의 자녀상속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모두 자녀에게 상속	59.9	58.2	59.0	63.7
일부 자녀에게 & 일부 사회기부	12.7	14.6	12.9	9.4
생전에 모두 써버릴 것	27.1	27.2	27.8	26.2
상속할 재산 없음	0.3	0.0	0.3	0.7

노후생활에 대한 독립적인 태도는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45~54세 중년층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노후생활에 대한 책임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태도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노후준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2-28> 참조).

## 2. 사회참여 특성

### 1) 사회활동

2009년 사회통계조사에 나타난 연령별 사회단체 참가율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층에 비해 45~54세 중년층의 사회단체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중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 미래노인층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3-37〉 사회단체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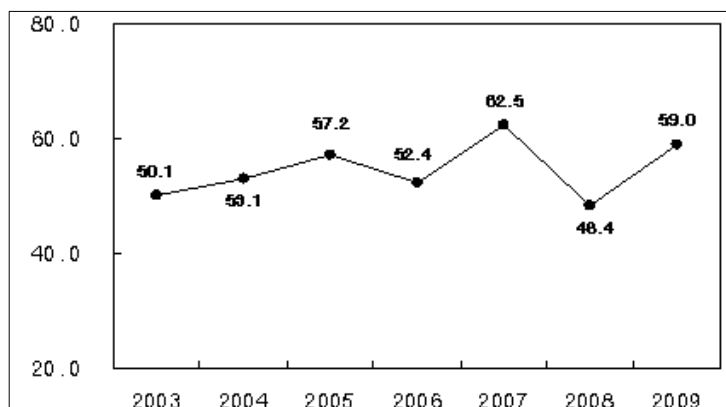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사회단체활동 참가율	42.7	42.4	23.5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시 표본 2009

노년기는 생애단계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미래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관련한 또 다른 행태는 지역사회활동과 투표에의 참여에서 살펴볼 수 있다. 4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자료: 2009 서울서베이

〈그림 3-22〉 서울 노인의 사회참가율 추이(단위 : %)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은 반상회나 주민회의, 지역방범이나 청소년 선도 등 생활에 밀접한 특성을 가진 지역활동에서 45~54세 중년층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율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 노인들이 중장년층에 비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사회참여정도<sup>1)</sup>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지역활동모임 (반상회/주민회의/방범/청소년선도 등)	12,5	9,8	10,8	18,7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10,5	10,0	9,1	12,7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 참여	79,4	76,3	79,7	84,2

주1: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노인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서 노인층들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1회용품 사용을 감소하려는 실천노력에 있어서 중장년층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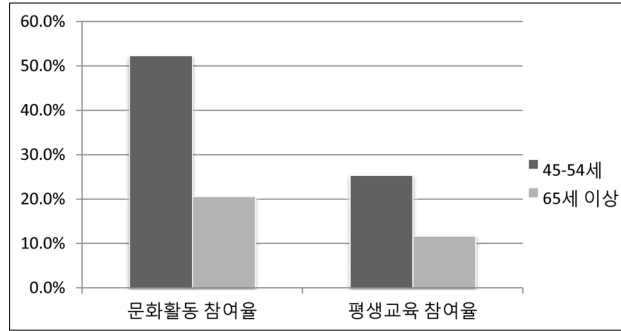
〈표 3-39〉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sup>1)</sup>

(단위: %)

구분	전체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20,6	18,5	20,3	24,3
1회용품 사용 감소 노력	11,8	10,5	12,2	13,5

주1: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책임의식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과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부담을 질 의향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 비해 45~54세와 55~64세의 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노인층이 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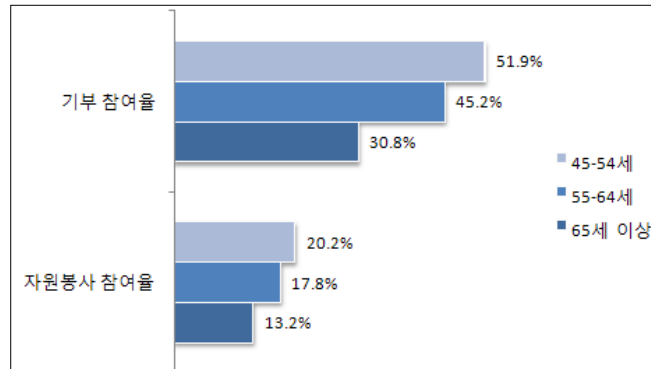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서울시 표본 분석 각년도

〈그림 3-23〉 서울시 연령별 환경보호부담의향 비교

## 2) 사회공헌

초고령사회의 미래노인들은 단순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날 뿐 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사회참여활동인 사회공헌활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래노인층의 자원봉사참여율과 기부참여율은 각각 51.9%와 30.8%로 현재 노인층의 참여율(각각 20.3%와 13.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의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은 노년기 진입 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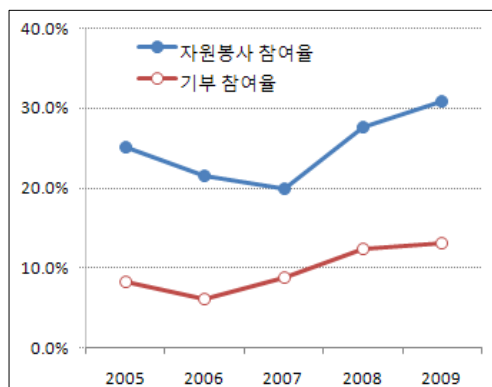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그림 3-24〉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특히 2005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층의 기부와 자원봉사참여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그림 3-24〉 참조). 이러한 추세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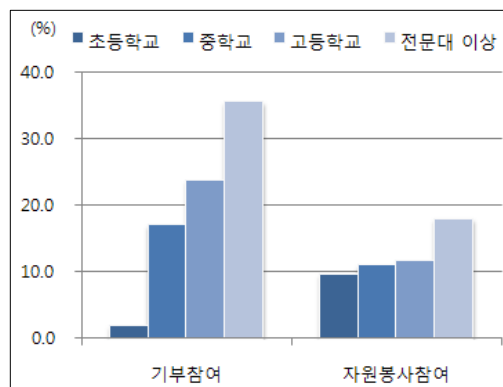
려할 때 현재 노인층의 사회공헌활동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지만 미래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초고령사회 서울노인의 사회공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25> 참조).



자료: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

<그림 3-25> 65세 이상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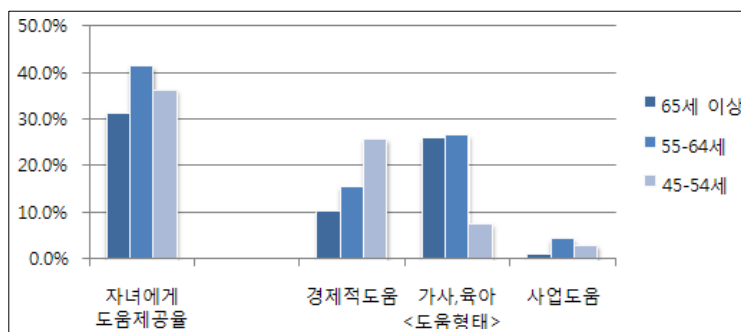


자료: 이 연구 설문조사

<그림 3-26> 교육수준별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율

### 3) 세대 간 자원교환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기여가 증가할 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은 가족 내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층의 경우에도 36%가 경제적 지원과 집안일, 손자녀 돌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이 연구 설문조사

<그림 3-27> 자녀에게 도움제공

### 3. 소결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인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활동적 노화’를 바람직한 노인상으로 인식하는 추세이며 국내외 고령화 정책도 활동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정책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활동적인 노화 패러다임은 의존적으로 비취졌던 노년층을 활동적인 인구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즉, 노년층이 더 이상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생애단계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미래노인층인 중장년층은 현재노인층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나 기부와 같은 사회공헌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경험도 많고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크다. 또한 자녀로부터의 부양, 지원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노후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미래노인층의 노후생활에서는 현재노인과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욕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고 있는 노인층의 의식, 태도 및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할 때 미래의 노인은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미래노인들이 가진 잠재적인 발전요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과 선호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와 사회서비스 등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4장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제 4 장

#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제3장에서 고령인구가 경제·사회활동의 중심적인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논의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부정적인 문제도 나타나지만, 긍정적인 기회요소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반대로 기회요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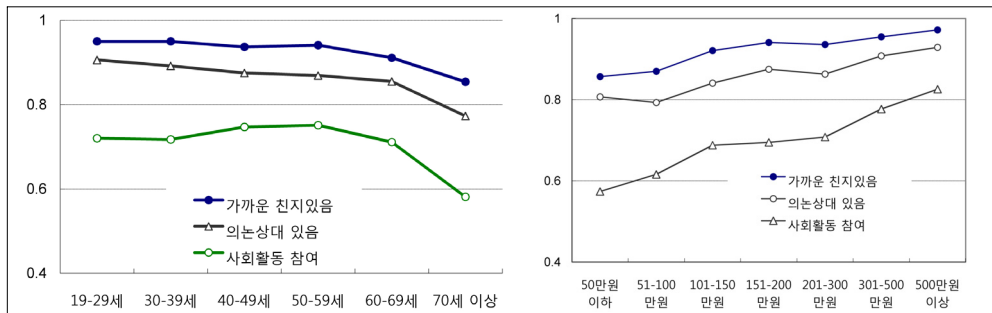
#### 1. 노인빈곤 예방

##### 1) 문제제기

앞서 소득과 자산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과 자산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빈곤과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비록 미래 노인세대인 40~50대는 현재 노인보다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준비가 부족한 계층도 존재한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타 시도 노인들보다 소득·자산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울노인의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과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서울의 노인도 결코 안전할 수는 없으며,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빈곤 문제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분석결과 특히 1인 가구, 여성노인, 저학력 노인 등이 주요 사각지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50대 준고령자로서 미취업상태인

계층도 주요 사각지대로 확인되었다.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면 공공재정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여러 가지 공적서비스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동반한다. 지금은 대부분 중년층인 노숙인이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노년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무료급식을 위해 줄을 서는 노인들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인 빈곤문제는 노인소외, 노인자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감소하고,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시도율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서울대보건대학원, 2006).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이 고령화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된다.



자료: 서울시·서울대 보건대학원, 제3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2006

〈그림 4-1〉 연령 및 소득수준별 사회적 지지도

## 2) 고용지원 필요성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보장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집단을 모두 공적 소득보장체계 내로 흡수하면 복지재정 부담이 과중해진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은 소득 이전 방식에서 노동·교육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공적부조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 또는 지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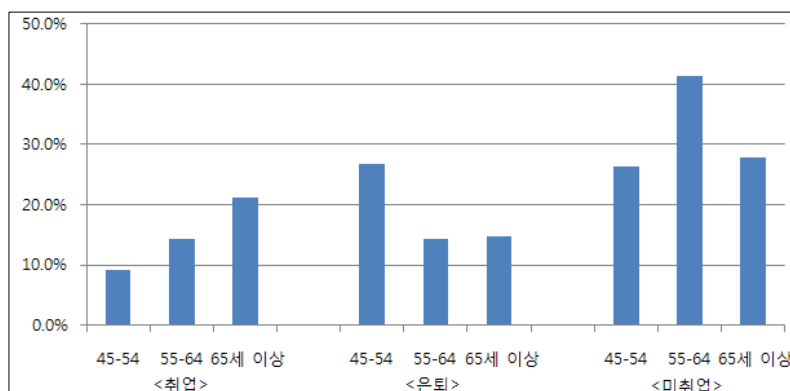
미래의 노인은 이전 세대 노인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도 좋기 때문에 소득이전방식의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자 집단의 근로욕구 또한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취업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희망률이 2004년 17.5%에서 2008년 37.1%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2008). 더구나 국민연금 등 노후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고용률은 상당기간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서울의 경우 노동력의 이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령자의 소득보장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적 차원에서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소득원을 제공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고 은퇴 후 더 이상의 근로활동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노인집단의 개인특성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고령자 고용지원의 주요 대상은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 노인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현재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집단이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였다. 특히 55~64세 준고령자 집단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가구주가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처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취업 구직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득 및 자산규모가 작고, 부채규모는 은퇴자 집단보다도 더 크다. 또한 자가 거주율도 43%로 낮아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를 보인다(<표 3-23> 참조). 노후준비도 면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이 집단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로 93.5%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



〈그림 4-2〉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비율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4.4년이고, 취업하려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88%로 가장 많았다.

### 3) 정책과제

고령자의 고용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령 연장,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은 54세 정도이지만,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한 연령은 58세이고, 은퇴희망 나이는 66.7세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4세에 퇴직하여 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공적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주로 중앙정부의 담당업무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업기술훈련 제공 등이다.

#### (1)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서울시의 노인고용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노인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등도 하고 있다. 고령자 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010년 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4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금년도 1, 2차 심사를 통해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일자리에는 대체로 단순노동형이 많아 일자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아니지만 전국 희망근로 참여자의 46.4%, 서울 희망근로 참여자의 43.5%가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그러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의 중도포기율은 11%가 넘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일자리가 허드렛일에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전체 선발인원의 11.4%가 중도 포기하였다. 중도포기율은 경기도 16.5%, 서울 12% 순으로 특히 높다(세계일보, 2009. 6. 18). 따라서 생산적이고 참여자들에 계도 보람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 과제의 하나이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술발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저학력, 저기술

의 고령자들이 고용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는 시장을 통한 고용보다 사회적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용시장에서 청년층과 경쟁하기보다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돌봄서비스와 같이 서비스 수혜자가 고령자가 되는 분야를 발굴한다면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중·고령자들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공공주도보다는 민간부문 또는 제3섹터 형태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 (2) 고용지원서비스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적응교육 등을 실시하고, 매년 실버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년 동안 총 188,330건(전화상담 153,297건, 방문상담 35,033건)을 상담하였고, 6,613명이 센터를 통해 취업하였다.

(표 4-1)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업실적(2009)

(단위: 건, %)

구분	구직(A)	알선(B)	취업(C)	알선률(B/A)	취업률(C/A)	
계	11,226	22,532	6,613	200.7	58.9	
성별	남성	6,953	15,747	4,376	226.5	62.9
	여성	4,273	6,785	2,237	158.8	52.4
직종	상용	11,116	21,176	5,751	-	-
	일용	110	1,356	863	-	-

자료: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그러나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모두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만 고용관련 업무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 (3)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서울시의 과제이다. 지식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산업구조도 지식기반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술·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노동력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자들의 취업능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 차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 퇴직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저축 등 경제적인 대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비율은 높은 반면,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1.5%에 불과하였다(<표 2-17> 참조).

서울시는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50~65세의 준고령자 직업훈련 과정이 있고, 2004년에는 노인취업훈련 전문기관인 노인취업훈련센터가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노인취업훈련센터는 고령자들이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적응훈련, 자기개발훈련, 직종별 훈련과 맞춤형 취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표 4-2>와 같다. 그러나 고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노인 직업훈련도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한계이다.

<표 4-2>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 교육프로그램(2010)

과정명	훈련대상	취업분야	계획횟수	계획인원
취업아카데미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	연 6회	회기별 20명 총 120명
창업설명회	55세 이상	공동창업 및 가족창업 등	연 3회	회기별 25명 총 75명
경비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학교도서관경비원, 빌딩경비원, 건설현장 및 공장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연 4회	회기별 35명 총 140명
주차관리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주차관리원, 운전직, 어린이집 차량 등	연 2회	회기별 35명 총 70명
건물환경관리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건물관리인, 목욕탕, 숙박시설, 미술관, 아파트 등 청소 관리인	연 2회	회기별 35명 총 70명
배달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5세)	서류배달원, 의치배달원, 물품배달원 등	연 4회	회기별 35명 총 140명
정보화훈련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사우나관리, 매장관리,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기계식 주차관리 등	연 5회	회기별 15명 총 75명
광고모델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록자(만 60세)	광고모델, 영화보조출연	연 2회	회기별 40명 총 80명

자료: 서울시 노인취업훈련센터 홈페이지

세계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평생직장개념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계층에서 전업과 재취업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노인이 된 이후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직업훈련은 양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복지, 노동, 교육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행정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졌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취미·여가교실과 같은 사회교육이 중심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시 차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과 일, 그리고 생활이 연속성 있게 순환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2.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

### 1) 문제제기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자가구의 소비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소득·자산 특성 분석에서 보면 고령자가 되면서 근로소득은 감소하고 자산 및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산의 구성은 주로 부동산 중심이고 금융자산은 적은 편이다.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래노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미래노인 세대에서 금융자산이나 공적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구의 소득, 자산구조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구의 소비력 감소는 경제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가 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은퇴자 가구의 78.3%가 은퇴 후 생활비 지출액이 감소하였고, 그 중 80.2%가 수입이 줄어들어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령인구가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출이 감소한다면 전체 경제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고령자가 전체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소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정책과제

### (1) 안정적 소득유지

고령자의 소비력 유지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고용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 수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는 두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인 연금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인세대보다 미래 노인세대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45~54세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률은 55.9%, 개인연금 가입률은 16%에 불과하다(<표 2-18> 참조).

현재 사회보험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4.3%, 건강보험 가입률은 65.6%, 고용보험 가입률은 56.8%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60% 전후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40% 전후의 수준이다.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표 4-3)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

(단위: %)

	2007. 8			2008. 8		
	국민연금 <sup>1)2)</sup>	건강보험 <sup>2)</sup>	고용보험	국민연금 <sup>1)2)</sup>	건강보험 <sup>2)</sup>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전체	63.2	64.4	55.3	64.3	65.6	56.8
정규직	76.3	76.7	64.3	77.3	78.0	65.8
비정규직	40.0	42.5	39.2	39.0	41.5	39.2
한시적	57.2	60.0	55.5	56.4	59.8	56.0
기간제	59.3	62.7	57.6	62.6	66.5	62.3
비기간제	51.8	53.4	50.2	40.3	42.5	39.9
시간제	3.3	4.0	3.7	6.4	6.1	6.3
비전형	23.0	27.7	23.9	23.6	28.2	25.8

주 1: 특수직 연금 포함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및 수급권자는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2008. 10.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는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저소득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부동산 자산 활용 -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두 번째 과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정도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노후준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구의 정기적 수입원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내 소유의 주택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9.7%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택 시세는 평균 4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5.4%만이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65세 이상 현재 고령자 세대는 역모기지제도 이용의사가 10.7%로 낮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이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표 4-4〉 주택현황과 역모기지제도 이용의사

	부부명의 자가 거주율(%)	평균 주택가격(억원)	역모기지 제도 이용의사(%)
45~54세	64.4	4.2	18.1
55~64세	74.2	4.1	16.0
65세 이상	73.4	3.8	10.7
전체	69.7	4.0	15.4

### (3) 노후준비 교육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금자산 구성이 늘어나도록 노후설계를 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산형성 및 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도 노후준비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 노후준비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고령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퇴직에 대비한 준비를 할 때, 대부분 혼자 또는 가족친지의 도움을 통해 정보 등을 얻었고, 회사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었다.

〈표 4-5〉 퇴직 후 준비 시 도움 또는 정보원

(단위: %)

	혼자 스스로	가족, 친지	회사	공공기관	사회단체	계
45~54세	42.5	50.0	-	5.0	2.5	100.0
55~64세	56.4	36.6	4.0	2.0	1.0	100.0
65세 이상	51.9	39.6	1.9	6.5	-	100.0
전체	51.0	41.2	2.1	4.8	0.9	100.0

### 3. 노인복지 재정수요 최소화

#### 1) 서울시 노인복지 예산 추이

복지국 노인복지과와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정책과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노인관련 사업 예산 추이를 검토하였다. 그 외에 체육진흥과는 어르신생활체육사업을 하고 있고 일자리 정책담당관실은 준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사업단위가 크지 않다. 또한 주택국의 서민주거지원사업이나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등도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노인층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저소득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2~2010년 사이 전체 복지분야 예산과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추이는 <표 4-6>, <그림 4-3>과 같다. 사회복지 예산은 양적으로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서울시 전체 예산의 24.6%를 차지한다. 노인복지 예산도 2003년과 2004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2003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감소한 것은 2002년도 경로연금이 다른 해에 비해 2배 이상인 508억원이 계획되었기 때문인데, 최종 추경예산에서 1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2003년도 실제 노인복지예산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이다. 노인복지예산은 2008년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영향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대체로 증가추이를 보이지만,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은 차이를 보인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2008년 급증하였고 이후 다시 약간 감소하여 2010년 현재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15.5%이다. 노인복지예산은 특히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서울시 분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4-6〉 서울시 노인관련 사업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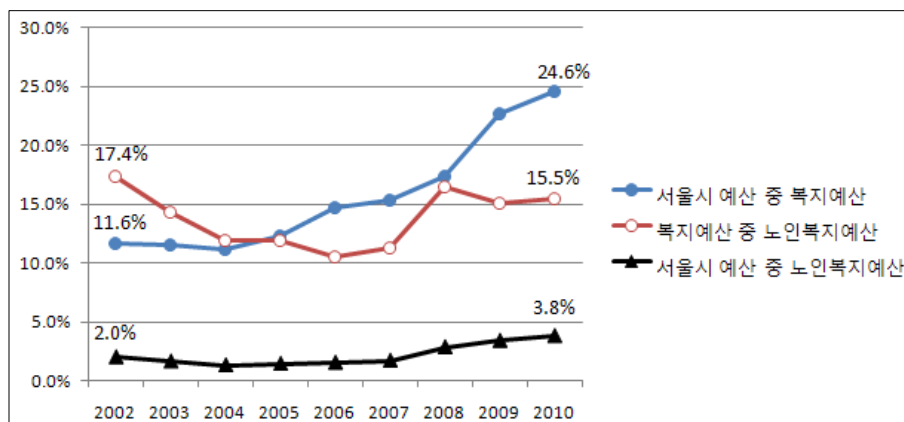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시		106,419	114,913	128,625	130,259	133,033	152,232	176,243	164,636	166,011
사회복지		12,390	13,284	14,429	16,063	19,614	23,338	30,644	37,334	40,835
노인복지예산		2,150	1,903	1,713	1,907	2,063	2,561	5,064	5,622	6,338
사회보험	소계	508	217	217	210	196	199	2,552	3,886	4,654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	-	-	-	-	-	180	420	694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508 <sup>1)</sup>	217	217	210	196	199	2,372	3,466	3,960
사회 서비스	소계	1,641	1,686	1,496	1,697	1,867	2,362	2,511	1,736	1,684
	복지	1,455	1,553	1,276	1,341	1,466	1,903	1,853	1,120	1,012
	보건	175	120	202	274	266	278	469 <sup>2)</sup>	369	359
	고용	11	13	18	82	135	182	190	247	314

주1: 최종 추경예산은 196억원으로 감소

주2: 최종 추경예산은 218억원으로 감소

자료: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예산개요」 각년도



〈그림 4-3〉 서울시 복지예산 구성 변화추이



그동안 서울시의 노인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인 사회서비스 분야가 중심이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 <표 4-7>에 따르면 2002년 노인관련 예산의 89.3%가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었고 이는 2007년 92.2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47%로 감소하였다. 2010년 현재 노인복지예산 중 사회서비스 예산은 26.6%인 반면, 사회보험 관련 예산이 73.4%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예산은 2008년 이후 구성비뿐 아니라 절대액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 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서울시 노인관련 예산 구조 변화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인복지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보험	10.7 <sup>1)</sup>	11.4	12.7	11.0	9.5	7.8	53.0	69.1	73.4
	사회서비스	89.3	88.6	87.3	89.0	90.5	92.2	47.0	30.9	26.6
사회서비스	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복지	88.6	92.1	85.3	79.0	78.5	80.6	82.0	64.5	60.1
	보건	10.7	7.1	13.5	16.1	14.3	11.8	9.6 <sup>1)</sup>	21.2	21.3
	고용	0.7	0.7	1.2	4.9	7.2	7.7	8.4	14.2	18.6

주1: 2002년 경로연금과 2008년 보건예산은 당초예산과 최종추경예산 차이가 커서 최종예산액을 적용

그러나 2009년부터 복지서비스부문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노인복지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변화 때문이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노인복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노인교통수당이 2007년 607억원에서 2008년 321억원으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가 2009년부터는 완전 삭감되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요양 및 재가복지 사업이 보험제도 내로 흡수되면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가 감소하였고 서울가정도우미 사업과 노인위생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고용분야의 경우 예산 총액은 적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다. 고령자 고용분야 예산은 2002년 11억원으로 노인복지 예산 중 0.7%에 불과했지만, 2010년 18.6%(314억원)로 증가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2004년 30만원에서 2005년 656만원으로 22배 증가하였고, 2010년 2,792만원으로 급증하였다.

## 2) 재정수요 변화 전망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적의료나 노인복지수

요도 증가하여 공공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장 큰 요인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중앙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이 없지만, 2008년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가 60:20: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의 일종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늘어나면 보건·복지수요가 늘어나는데 보건·복지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울시의 부담이다.

이 절에서는 앞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났을 때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노인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기본적으로 다른 외부 요인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를 확인하였다. 다른 조건은 현재와 동일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만으로 나타나는 증가분을 확인함으로써, 순수하게 노인증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조건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1) 기초노령연금 분담금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에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제한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으로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은 이 제도에 흡수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2010년 52.6%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표 4-8) 기초노령연금 운영 현황

		2008 1단계	2008 2단계	2009	2010
자격기준(소득)	노인단독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자격기준(연령)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지급액	노인단독, 노인부부 1인	20~84천원	20~84천원	20~84천원	20~90천원
	노인부부 2인	40~134천원	40~134천원	40~134천원	40~144천원
수급률	목표(전국기준)	60%	60%	70%	70%
	전국수급률	61.0%	57.3%	68.5%	-
	서울수급률	-	-	52.8%	52.6%

장래재정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급률과 1인당 소요예산 추정이 필요하다. 우선 수급률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의 기본취지가 국민연금 지급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령자에게 최소한의 기초소득보장을 해주는데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노인들이 수급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및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100% 수급률을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면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였고,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의 수급률과 지급액도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없어지거나 수급률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재정수요를 추정하였다. 첫째, 2009년말 서울노인의 수급률 52.8%를 장래에도 적용하였다. 2010년 수급률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연간자료인 2009년 수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2030년까지 현재의 목표수급률인 70%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2009년말 52.6%를 기준으로 2020년 60%, 2030년 70% 수급률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다.

한편 1인당 지급액은 개인특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액과 수급자수를 고려한 1인당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4-9>에 따르면 200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인당 소요된 예산은 772천원이다. 2010년 약간 상승하였지만, 이는 지급혜택을 늘렸기보다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인당 지급액은 최종지급을 완료한 2009년을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 772천원을 적용하였다.

<표 4-9> 수급노인 1인당 기초노령연금 예산

(단위: 천원)

	노인수	수급률	수급노인수	예산	1인당 예산	비고
2009	942,946	52.8%	497,875	384,511,345	772	추경예산 기준
2010	956,414	52.6%	503,074	396,000,000	787	당초예산 기준

이상의 기본가정에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적용하여 2020년, 2030년도에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재정을 추정하면 <표 4-10>과 같다. 수급률과 지급액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는 경우, 2020년 5,994억원, 2030년 8,569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책정액 3,960억원의 각각 1.51배, 2.16배이다. 한편,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2020년과 2030년에는 2010년보다 각각 1.72배, 2.87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표 4-10〉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추정

기본가정		2020	2030
65세 이상 노인수		1,470,507	2,102,329
수급률 고정	수급률(%)	52.8%	52.8%
	수급노인수	776,428	1,110,030
	총예산(억원)	5,994	8,569
	2010예산 대비(배)	1.51	2.16
수급률 증가	수급률(%)	60%	70%
	수급노인수	1,471,630	772
	총예산(억원)	6,811	11,361
	2010예산 대비(배)	1.72	2.87

## (2)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도 2008년부터 새로 시작한 제도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요구도에 따라 보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기준이 제한적이고 보험재정도 열악하여 실제 서비스 수급률이 높지 않다. 서울의 경우 전체 노인 중 인정률은 2008년 3.6%에서 2010년 5월 현재 5.3%로 증가하였다.

〈표 4-11〉 장기요양보험 수급현황

(단위: 명, %)

		2008. 12	2009.12	2010.5
전국	인정자수	214,480	283,907	308,126
	인정률	4.2	5.4	5.7
서울	인정자수	31,755	46,881	50,917
	인정률	3.6	5.0	5.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 수급률(인정률)과 1인당 소요액을 산정해야 한다. 수급률은 기초노령연금 재정수요 추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가정하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기준은 2009년말 서울시 인정률 5.0%를 적용하였다. 2010년 실적은 2010년 5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가변적이어서 완료된 실적인 2009년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08년 이후 실제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신체적으로 허약한 후기고령인구가 늘어나므로 장기요양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인정률)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참고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본 개호보험 실적을 참조하였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은 중증대상자인 요개호와 예방서비스 대상인 요지원으로 구분한다.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정률은 요개호와 요지원을 포함하여 11.4%이고 이는 2005년 16.7%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호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인정률은 2008년 현재 16.5%로 감소하였다. 특히 중증보호대상인 요개호 대상자의 인정률은 2000년 10%에서 2008년 12.2%로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은 5등급 가운데 중증도가 심한 3등급까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본 개호보험 전체 인정률보다 요개호 대상자 인정률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4.9%, 2030년 22.3%이다. 한편 <표 4-12>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 고령인구 비율이 22.1%로 2030년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 22.3%에 근접한다. 따라서 2008년 일본 개호보험 중 요개호 대상 인정률 12.2%를 2030년 서울의 목표율로 상정하였다. 즉, 2030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12%를 목표로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12> 일본 개호보험 실적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피보험 노인	22,422	23,168	23,934	24,494	25,111	25,878	26,763	27,512	28,380	
인정자	요개호	2,240	2,593	2,946	3,246	3,417	3,605	3,366	3,352	3,454
	요지원	322	390	499	593	669	718	1,035	1,177	1,237
	계	2,562	2,983	3,445	3,839	4,086	4,323	4,401	4,529	4,691
인정률	요개호	10.0	11.2	12.3	13.3	13.6	13.9	12.6	12.2	12.2
	전체	11.4	12.9	14.4	15.7	16.3	16.7	16.4	16.5	16.5
고령인구 비율	17.4	18.0	18.5	19.0	19.5	20.2	20.8	21.5	22.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08년도 개호보험 사업상황보고(연보), 2010

서울시의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예산은 2008년 180억원, 2009년 660억원(추경예산 기준)이고, 2010년에는 694억원으로 잡혀 있다.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420억원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66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당초 계획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실제 집행액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도별 수급자 1인당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다. 2008년 1인당 567천원이 소요되었고, 2009년에는 약 2.5배 증가한 1인당 1,409천원이 소요되

었다. 2010년에는 1인당 소요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0년 인정자수는 5월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9년도 연간 1인당 소요액을 기준으로 장래 서울시의 장기요양분담금 소요액을 추정하였다.

〈표 4-13〉 서울시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단위: 천원)

	총 인정자수	총예산	1인당 예산	비고
2008	31,755	18,006,000	567	추경예산
2009	46,881	66,070,000	1,409	추경예산
2010	50,917*	69,373,500	1,362	당초예산

\* 2010년 인정자수는 5월 현재 자료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과 1인당 소요액을 기준으로 2020년과 2030년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예산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수급률을 2009년말 수준으로 고정한 경우 소요예산은 2020년 1,036억원, 2030년에는 1,481억원이 필요해지고 이는 2010년 예산책정액 694억원 대비 각각 1.49배와 2.14배에 해당된다.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해 2020년 1,658억원(2.39배), 2030년 3,555억원(5.13배)로 증가한다.

〈표 4-14〉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소요예산 추정

		2020	2030
수급률 고정	수급률	5%	5%
	수급자수	73,525	105,116
	소요예산(억원)	1,036	1,481
	2010예산 대비(배)	1.49	2.14
수급률 증가	수급률	8%	12%
	수급자수	117,641	252,279
	소요예산(억원)	1,658	3,555
	2010예산 대비(배)	2.39	5.13

### (3) 사회서비스 예산

2002~2010년 사이 보건과 고용분야는 예산총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노인인구 1인당 예산액도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의 경우, 노인인구 1인당 예산액이 증가와 감소의 반복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2년 대비 2010년에 31.2% 증가하였다. 고용분야 1인당 예산은 더 급증하여 2002년 2천원에서 2010년 33천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 제도와 관련된 예산이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복지예산은 감소 추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노인인구 1인당 복지서비스 예산은 2002년 237천원에서 점차 감소하였고, 2007년 223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0년 106천원이다. 결과적으로 보건, 복지, 고용을 포함한 전체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인인구 1인당 예산액도 감소하였다.

〈표 4-15〉 사회서비스 분야 노인 1인당 예산액 변화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2~2010
예산액 (억원)	복지	1,455	1,553	1,276	1,341	1,466	1,903	1,853	1,120	1,012	
	보건	175	120	202	274	266	278	469	369	359	
	고용	11	13	18	82	135	182	190	247	314	
	계	1,641	1,686	1,496	1,697	1,867	2,362	2,260	1,736	1,684	
1인당 예산 (천원)	복지	237	239	184	182	186	223	206	119	106	
	보건	29	19	29	37	34	33	52	39	38	
	고용	2	2	3	11	17	21	21	26	33	
	계	268	260	216	231	237	277	251	184	176	
1인당 예산 증가율 (%)	복지	-	0.7	-23.0	-1.0	2.3	19.8	-7.%	-42.4	-10.9	-55.5
	보건	-	-35.2	57.2	27.7	-9.0	-3.8	60.3	-25.2	-4.0	31.2
	고용	-	6.7	31.5	340.3	52.9	24.6	-1.1	24.2	25.2	1711.1
	계	-	-3.1	-16.9	6.9	2.9	16.8	-9.3	-26.8	-4.3	-34.3

\* 당초 예산액 기준임.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인인구 1인당 예산은 최근 연도에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완료한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고령인구 1인당 소요예산을 계산하고 이를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적용하였다. 2009년도 추경예산액은 2,102억원이고, 고령인구는 942,946명이므로 고령인구 1인당 소요예산은 223천원이다. 이를 장래추계인구 자료에 적용하면, 2020년 사회서비스 예산은 3,278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2010년 예산책정액 1,684억원의 1.95배에 해당된다. 2030년에는 2010년보다 2.78배 많은 4,68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16〉 사회서비스 예산 소요추계

	2020	2030
65세 이상 노인수(명)	1,470,507	2,102,329
소요예산(억원)	3,278	4,687
2010예산 대비(배)	1.95	2.78

#### (4) 종합

이상에서 추계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사회서비스 예산 소요액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는 경우, 노인복지 예산은 2020년 10,308억원, 2030년 14,737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2010년 노인복지 예산의 각각 1.63배와 2.33배가 된다. 반면,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예산소요는 2020년 11,747억원, 2030년 19,6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1.85배, 3.09배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4-17〉 노인복지예산 추계 결과 종합

구분			2020	2030
1) 기초노령 연금	수급률 고정	소요액(억원)	5,994	8,569
		2010예산 대비(배)	1.51	2.16
	수급률 증가	소요액(억원)	6,811	11,361
		2010예산 대비(배)	1.72	2.87
2) 장기요양 보험	수급률 고정	소요액(억원)	1,036	1,481
		2010예산 대비(배)	1.49	2.14
	수급률 증가	소요액(억원)	1,658	3,555
		2010예산 대비(배)	2.39	5.13
3) 사회서비스		소요액(억원)	3,278	4,687
		2010예산 대비(배)	1.95	2.78
종합	수급률 고정 시	소요액(억원)	10,308	14,737
		2010예산 대비(배)	1.63	2.33
	수급률 증가 시	소요액(억원)	11,747	19,603
		2010예산 대비(배)	1.85	3.09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령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복지 재정변화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의 상당수가 노인인구이고, 노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8〉 기초생활수급 노인 현황

(단위: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수급자수	147,214	150,341	160,100	175,601	185,934	191,893	193,260
노인 수급자수	34,761	36,703	39,531	43,061	46,283	49,996	51,307
수급자 중 노인비율	23.6	24.4	24.7	24.5	24.9	26.1	26.5
노인중 수급률	5.7	5.7	5.7	5.9	5.9	5.9	5.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3) 재정수요 발생 예방을 위한 과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단순히 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예산부담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분담금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다. 실제 노인복지예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부담이 되는 소득지원과 보건의료 관련 재정수요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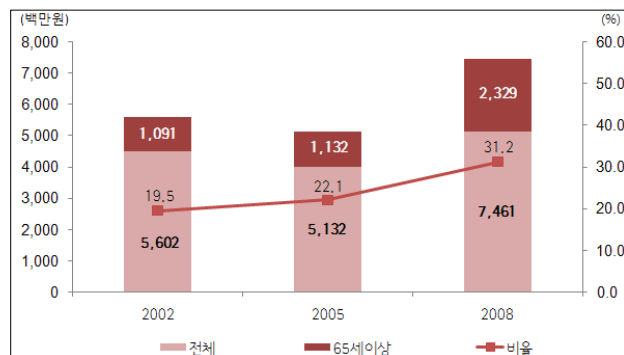
#### (1) 소득원 확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소득보장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노인이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기초생계 보장은 물론, 각종 공적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공적 소득보장 대상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과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용지원, 연금가입률 제고, 부동산 유동화 등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 (2)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고령인구 증가로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노인의료비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건강이 나쁜 후기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요양수요 등 노인건강과 관련된 비용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부자료

〈그림 4-4〉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서울)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노인의료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로 지급된 액수는 약 232억원으로 전체의료비의 31.2%를 차지한다. 전체의료비 중 노인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2년 19.5%에서 6년 사이에 1.6배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병약한 노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건서비스 재정수요도 증가한다. <표 4-8>에서도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후처리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예방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복지재정 수요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노인건강, 생활체육 관련 예산 및 프로그램 확대가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노인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 체육 분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는 물론, 금연사업, 비만관리 사업,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등 전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인 보건·환경사업도 고령사회에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면서 환경오염이 악화되고, 교통 혼잡이나 불규칙한 생활행태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87년 유럽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 2천여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03년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즉, 고령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전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의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 환경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복지, 문화, 경제, 교육 등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3) 사회적 자원으로써 커뮤니티 활용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현 거주지 평균 거주기간이 14.4년이고, 20년 넘게 살아온 경우도 21%에 달한다.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 산 기간은 더욱 길어 평균 20년이 넘는다.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지역 및 이웃에 익숙해지고 소속감이 생기며 상호작용 기회도 늘어난

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이유로 동네와 이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반상회, 주민회의, 지역방범활동 등 지역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45~54세 집단은 9.8%만이 지역활동 모임에 참여하는 반면, 65세 이상 집단은 18.7%가 지역활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표 4-19〉 현재 동네 계속거주 희망여부 및 이유

(단위: %)

	계속거주 희망	계속 거주희망 이유							
		동네에 익숙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친인척이 가까워서	직장이 가까워서	교통 편리	편의시설 많아서	새환경에 적응 어려움	기타
45~54세	71.5	34.5	23.0	4.5	12.9	15.3	4.6	4.8	0.4
55~64세	82.0	39.9	26.7	5.8	6.0	12.6	3.5	5.4	0.2
65세 이상	83.1	41.3	30.9	6.8	0.9	8.8	3.2	8.1	-

주: 계속 거주희망 이유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한 내용을 가중치를 주어 구한 것임.

이러한 노인들의 특성과 선호도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커뮤니티)와 이웃(네이버후드)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미국의 Beacon Hill Village 를 참조할 수 있다. Beacon Hill Village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 공동체로 식료품 쇼핑 등의 단순한 서비스 지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Thomas & Blanchard, 2009). 반드시 고령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은 지역사회에 있는 상점, 학원, 기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격려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나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거점기관으로부터 쿠폰을 받고 이를 이용해 기부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부기관은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학원 등 교육기관, 극장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을 강화한다면 금전적 재정수요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도시개발 방식은 오래된 커뮤니티를 오히려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 거주민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났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개발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강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노인세대의 등장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절에서는 고령화로 야기되는 기회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고령인력 활용

#### 1) 가능성

앞서 미래의 노인은 높은 교육수준, 정보접근의 용이성, 사회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인구집단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일, 배움 등의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충실하며 생산적 활동에 동참하는 노인세대의 특성이 신노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정경희 외, 2006). 이들 새로운 노인세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피부양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활동적인 고령자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금전적인 공공재정 투입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병약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세대갈등 요인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나 노인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요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노년층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서양에 비해 오히려 우리 문화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향약 등 관계형성과 참여를 통한 상부상조 문화가 많았다. 현재도 많은 노인들은 자녀와 상부상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부모의 52%가 은퇴한 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은퇴한 부모의 34%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에게 주는 도움의 형태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경제적 지원이 많은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집안일을 돕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등의 비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표 2-26> 참조).

## 2) 과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개개인의 인적 자원(human capital)을 어떻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사회적 기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기부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노년기 이전부터 교육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참여나 봉사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젊었을 때부터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생교육, 여가프로그램, 학교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자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human capital)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지칭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이다. 상호관계 속에서 신뢰도 형성되고 제도나 규범도 만들어지며 사회적 기여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자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들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은퇴 이전에 관계를 맺어온 기존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노인 간의 관계형성뿐 아니라 다른 집단, 다른 세대와의 관계형성도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 3) 활용방안

고령자들이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은 자원봉사이다. 앞서 노인들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고용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은 비경제적

이유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로 대다수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건강유지(16.1%), 무료해서(14.3%) 등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빈곤층을 위한 생계형 고용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을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고 인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인적 자원을 사회적 자본화 하는데 교육과 경험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활동도 젊은 시절부터 교육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층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에서 노력봉사를 하는 등의 단순노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노인의 지적 수준에 부응하고 이들의 경륜과 취향에 맞는 전문 자원봉사활동까지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력을 활용해 노인문제를 해결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가중되는 복지재정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고령자 고용지원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노인들이 노인을 도울 수 있는 老老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 등 자발적 소규모 모임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모임을 이끌어갈 리더의 양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의 노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서울의 노인들은 교통비와 식비 제공, 사회적 인정과 동기부여, 정보제공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서울노인은 전국노인 평균에 비해 사회적 인정과 동기부여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4-20〉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

	교통비· 식비 제공	사회인정 동기부여	자원봉사 정보제공	다양한 혜택	자원봉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사고보험 가입	지원 필요없음
서울	20.8	17.6	14.0	9.9	9.1	8.5	3.5	15.0
전국	22.1	9.0	18.4	10.6	7.7	11.5	2.6	16.6

주: 60세 이상 응답내용  
자료: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고령인구를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 노인들의 자산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래의 노인은 현재 노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점차 사회적 기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자산의 사회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자산신탁제도(trust)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노인들의 자산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식개선이 우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은 봉사활동이나 물질적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생활 자체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사회적 기여에 해당한다. 노인들이 건전한 소비활동을 한다거나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함으로써 정신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을 긍정적 주체로 인식하고, 세대갈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고령친화산업 육성

### 1) 발전 가능성

앞서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이들의 소비패턴은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50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에 의한 소비액이 전 민간소비의 3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었다(문형표 외, 2006). 고령층의 수요가 많은 의료·건강, 여가·레저, 사회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학교교육 분야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의 선호에 따라 상품구조가 바뀌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실버주택 수요가 주택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처럼 고령자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자들의 수요가 많은 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05년 고령친화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요양, 정보, 여가, 금융, 주택, 의약품 등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표 4-21〉 고령친화산업 부문 및 전략품목

부문	주요 품목	
1차 (8대 산업 19개 품목)	요양	재가요양서비스
	기기	재택·원격 진단, 진료,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 개발
	여가	고령친화 휴양단지
	금융	역모기지 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	고령자용 주택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	한방보건관광, 향노화 한방 기능성 식품, 노인용 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 한약재 개발
	농업	고령친화 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2차 (6대 산업 15개 품목)	교통	저상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	화장 및 납골용품, 웰다잉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서비스
	의류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용 이너웨어
	교육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III),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2006)에서도 고령사회 대비 3대 추진과제의 하나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약 6.4조원에서 2010년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 2002년 17만 명에서 2010년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고령친화 제조업 발전전략(2006)” 연구를 토대로 위의 1차 8대 산업부문 중 기기산업, 정보산업, 한방산업 등 3대 부문을 시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1) 고령친화용품산업 리서치파크 조성(고령친화용품산업 관련 기업, 연구센터, 지원기관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2) 고령친화용품산업 기술개발, 3) 기술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4) 부산고령친화용품산업육성 포럼 조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충청남도도 고령친화산업의 지역발전모델로 “건강도시”, “Silver Tour”, “Silver Wellbeing”, “Silver Care”의 4개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이 적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기초연구를 완료하였다(장윤승·성태규, 2009).



지방도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례도 있다. 충청남도는 고령친화 기능성 식품 및 노인 복지기기 개발을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 클러스터(2004~2020)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시도 IT융합 전동복지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IT 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과 한방실버웰니스 건강기기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지역클러스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 서울의 노인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래의 노인세대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생활양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측면에서도 서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은 세계최고의 IT기반 기술을 포함하여 우수한 산업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학교와 연구소 등 우수한 인적자원과 민간자원이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이 발전 가능한지,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서울시의 과제

### (1) 서울의 성장가능 산업분야

고령친화산업 또는 상품의 공급은 필요에 비해 아직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요양서비스 및 실비용품, 건강관련 제품 정도가 제공되고 있는 수준이다. 서울은 제조업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의 특성상 제품의 개발·생산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풍부한 공공·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R&D분야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R&D개발과 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Geron-technology(GT), Elder-technology(ET) 등 복지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GT는 1989년 네델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Graafmans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고령화된 인구의 욕구, 이해관계, 보전에 부응하도록 제품, 서비스, 환경을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학기술의 적용을 의미하며, 노인일상용품뿐 아니라, 서비스, 시설 및 장비, 건축구조물, 교통 등 환경시스템의 연구개발, 제조 및 시장화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를 포함한다(심상완, 2002).

복지과학기술은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을 통해 노령기의 질병과 기능장애 경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

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과학기술에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기술, 신체기능의 저하나 손상부분을 대체·보완하는 보조기술(assistive tech), 노화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능향상을 돕는 지원기술(supportive tech), 교통, 통신, 건축 환경 등 공공기술(Public-tech) 등 시스템과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분야가 포함된다(신승춘, 2004).

각종 사회서비스 분야도 서울시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특히 문화, 여가, 교육, 금융 분야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2020 고령사회 서울 마스터플랜”에서도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건강, 교육, 여가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어르신 998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령자들의 이용이 많은 종로일대를 노인문화거리로 만드는 “실버문화벨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고령자 이용이 많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탐골공원, 종묘공원으로 이어지는 종로 일대에 노인전용 극장을 비롯해 공연장, 노래방, 북카페, 노인전문용품점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문화, 여가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고령자들의 노후설계와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상품, 재취업이나 취미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사업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전망된다.

## (2) 서울시의 역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노인들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금융자산의 75%를, 미국의 경우 50세 이상이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노인층이 늘어나야 한다(조선일보, 2008. 5. 9).

산업측면에서도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분류가 불명확하다. 하나의 산업분야가 되려면 독립된 영역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령친화산업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마치 녹색산업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산업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아직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쪽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고령친화산업을 아직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복지”, “봉사”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아직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요 및 공급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수요측면에서의 수요창출과 공급측면에서의 산업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직 고령자 집단에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잠재적인 수요가 실수요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부산, 광주, 성남에는 고령친화산업 체험관이 있으나 서울에는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고령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실버산업 종합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수요 발굴 방법으로 서울시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도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 rental 사업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거점으로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홍보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자 측면에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한 R&D 투자, 사업 아이템 발굴, 그리고 기업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초보적이고 기업도 영세하여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고령친화관련 제품시장의 70% 이상을 외국 수입품이 점유하고 있다.

한편, 고령친화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하는 산업분야인데, 현재 정부조직 내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종합·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8개 부처가 관계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나마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관련 조직이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서울시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 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과제이다.

###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 1.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노년기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활동적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신체적 활동성이나 노동시장에의 참여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참여를 의미한다(WHO, 2002).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는 노년기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시민들이 노년기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성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인 취약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거주환경에서 가능한 한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화로 인한 장애나 불편함이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시설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주해 오던 곳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이 14.4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의 거주기간은 20.8년에 달하였다. 20년 이상 같은 동네에 거주해온 경우는 37.8%에 달하였으며 83.1%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표 4-22〉 현 거주 주택과 동네 거주기간 및 향후 거주의향

(단위: 년, %)

	현 거주 주택 거주기간	현 거주 동네 거주기간	현 동네 계속거주 의향
45~54세	7.7	13.3	71.5
55~64세	11.0	18.1	82.0
65세 이상	14.4	20.8	83.1

그러나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설계된 도시환경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시민들의 평균수명이 짧고 노인인구가 적을 때 계획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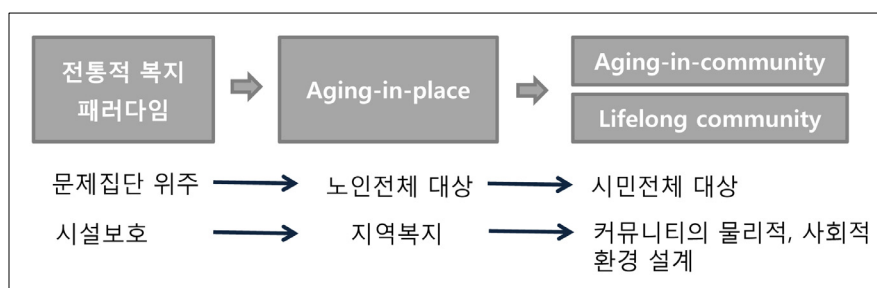
환경은 젊고 건강한 시민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기 때문이다(Scharlack, 2009). 따라서 고령화 되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환경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 2. 고령화 정책 동향

최근 국내의 고령화 정책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in-community)’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에 기초한 초기의 고령화 정책은 문제를 가진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Aging-in-place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보호로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취약노인의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Aging-in-place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지(home)에서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택개조와 지역서비스 연계를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Aging-in-place의 개념을 ‘거주지(place)’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Aging-in-community, 혹은 Lifelong community가 고령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다(Thomas & Blanchard, 2009). 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시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throughout the life cycle)’ 살기 좋은 지역사회, 즉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Aging-Friendly Community) 조성을 정책의 목표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charlack, 2009).

고령친화적(Aging-Friendly) 지역사회는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친화적(Elder-friendly) 사회가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생을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평생에 걸쳐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민들의 욕구와 선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시개발과 계획의 과정 속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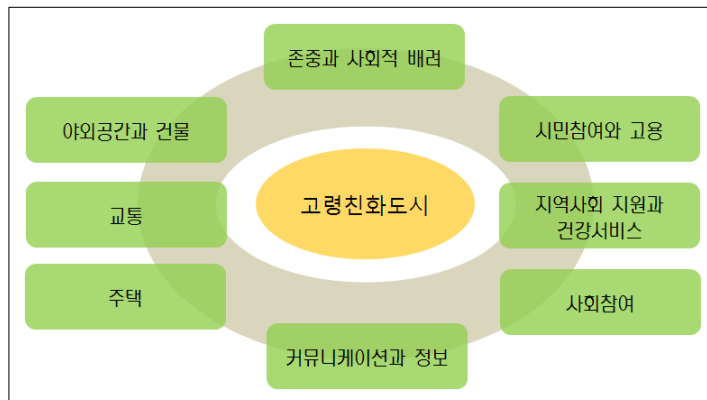


〈그림 4-5〉 고령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3. 서울시의 과제

#### 1) 고령친화도 진단 및 계획

서울시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욕시에서는 2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통해 시공무원,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뉴욕시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세밀하고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영역별 계획을 수립하였다(The Council of the City of New York, 2009). 고령친화성에 대한 진단과 논의는 <그림 4-6>과 같이 WHO 고령친화도시의 기본영역인 8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준화된 조사보다는 커뮤니티 포럼과 포커스그룹, 심층면접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맵핑(Data Mapping)을 통해 뉴욕시의 노인과 이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은 물론 노인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층이 참여한 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평가는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4-6> 고령친화도시의 기본 영역(WHO 글로벌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책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복지, 보건정책은 물론 산업, 도시계획(재개발 등), 교통, 주택 분야의 정책 및 주요사업의 내용과 정책결정, 추진과정에서 고령화하고 있는 시민의 요구와 특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 애틀랜타시에서는 Lifelong

Commun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ging-in-Place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침서를 발간하였다(Atlanta Regional Commission, 2009). 이 지침서에서는 건강과 환경, 도시계획의 3개 핵심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와 점검표,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전략도출에 필요한 세부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고령친화 지역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 2) 고령친화적 커뮤니티 개발

지역사회(커뮤니티)는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원을 창출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지역사회와 이웃(네이버후드)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친화적 커뮤니티는 노인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노인이 역동적인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세대통합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시공간을 구성하거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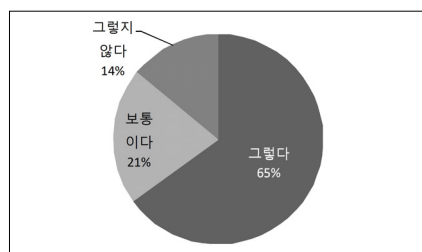
또한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정책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과 같은 일부 도시개발 방식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오히려 영구적으로 파괴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우리시의 주요한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커뮤니티와 네이버후드를 살리는 도시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인 ‘서울휴먼타운’은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주거지 조성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획일적인 계획이나 개발방식 보다는 거주민과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과 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개발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고령친화적 공간 조성

### (1) 이동성과 접근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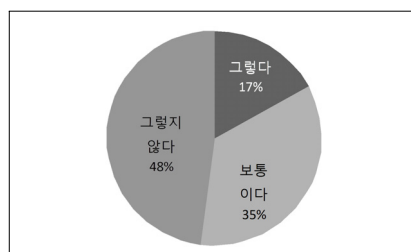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수직 이동’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노인의 이동성을 고려한다면 지하철(예: 지하철이나 지하보도)보다는 노면교통(예: 노면전차, 횡단보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노인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다. 2008년 서울시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한 설문조사(김선자 외, 2008)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5%에 달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정보 획득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가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점차 복잡해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노인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인 취약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특수이동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료: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08

〈그림 4-7〉 대중교통 이동의 편리성



자료: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2008

〈그림 4-8〉 대중교통정보 획득의 용이성

미래노인층에서는 노인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와 표지판 재정비는 물론 노인운전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이 노인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물리적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

건물과 도로, 주택과 조형물, 공원 등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이동성은 물론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adequate infrastructure) 확보는 물론 고령화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design features) 도입과 철저한 계획(sound planning)이 수립되어야 한다(Russell, 2009). 버스정류장, 공원, 산책로 등 공공공간의 안전성과 고령친화성을 점검하고 보도노면에 대한 관리, 횡단보도 설계와 신호체계, 조명 등 거리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영국의 시민단체인 Help the Aged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의 기본요소로 다음과 같이 10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Help the Aged, 2008).

- 적절한 거리 내에 기본 편의시설(은행, 의료시설, 편의점 등)
-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 모든 시민을 위한 현실적인 이동옵션
- 공공휴게장소
- 정보와 조언
- lifetime home
- 노인의 의견 청취
-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 잘 정비된 보도
- 공중화장실

한편,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주택, 도시설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 다양한 노인주거 옵션 개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대상의 주거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무료 및 실비 양로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시설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의 개념으로 공급되어 왔으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이 고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만이 공급되어 왔다.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대부분 일반주택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수준과 지원요구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부분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양식은 현재 노인주거 지원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룹홈이나 지원주택(Assisted Living)과 같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안전한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모델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와 생활지원서비스(예: 가사지원, 이동, 집수리 서비스 등)를 연계하여 Aging-in-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서비스 모델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노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로 고치는 주택개보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주거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사를 할 경우 필요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거나 용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도쿄시의 경우 1993년 5월부터 가령대응형(加齡對應型) 주택의 건설지침과 세부적인 계획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용자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신영, 2002). 이와 같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과 주거모형을 개발, 건설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제5장 결론 및 제언



## 제 5 장

# 결론 및 제언

고령인구가 경제·사회 활동의 중심적인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령사회에 나타날 주요한 문제들은 서울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고령화 문제는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고, 소득수준이나 지원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서울의 특성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0년 후 초고령 사회에 고령자 집단으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현재 노인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활동도 활발한 적극적인 노인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세대에도 양극화가 존재하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고 국민연금이 아직 모든 계층을 커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독거 노인, 여성노인, 저학력, 50대의 미취업자 등이 특히 고위험집단이다.

최근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복지대상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집단 내에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한 중산층을 위한 여가, 문화사업도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이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고령화 대책, 노인복지 정책에서 기본적인 요건은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WHO의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철학적 기반은 활동적 노화, 즉 Active aging에 두고 있다. 그런데 Active aging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건강, 사회참여, 사회보장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으면서 건강하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공적부조에 의존하는 노인도 많이 있다. 그러나 공적소득보장 체계에서 서울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안전망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이 있고, 이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의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등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서울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국가의 소득보장제도가 완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은 감소하고 불균등·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도 노인의 빈곤 문제와 그에 따른 공적보장체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도 중요한 이슈이다. 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공공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제4장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고령자 집단이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앞서, 기초적인 공적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늘어나는 고령자들을 위해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이후에 불필요한 수요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노인세대는 학력이나 경험, 의식과 태도 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계층으로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기도 하다. 고령자가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성장동력이 되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소 측면은 서울이 오히려 유리한 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양질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고령자들의 등장은 세대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노년층으로 접어들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지역문제에 관심이 증가하는 등 정치적,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계층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고령자 집단은 노인복지 정책에 관여하거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노인권익 주장으로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음 세대의 부양부담, 세금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갈등 요소가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자 계층 스스로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정책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대적인 것으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인구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수단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및 예산구조 등에서도 고령화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

- 김기호, 2005,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도희, 2003,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실버타운조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Vol.13 No.2, pp. 49-65
- 김미숙, 2003, 「고령화사회의사회경제적문제와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자 외, 2008, 「서울시 고령친화도 평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종욱·김성근, 2006, 「부산지역 고령친화 제조업 발전전략」, 부산발전연구원
- 김진수 외, 2005, 「고령화시대의 노인의료비 중·장기 추이전망 및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 대한민국정부, 20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새로마지플랜 2010」
- 대한상공회의소, 2005, 「제조업 고령화 원인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태」
- 류건식, 2009,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연금포럼』, 35호
- 문병근·하종원, 2007,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한국지방재정학회
- 문형표 외, 2006,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 고령화사회 대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경제사회연구회
- 박명화 외, 2009, 「2008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 박순일, 2005, “경제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상생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 『한국사회정책』, 12, pp. 7-70
- 박신영, 2002, “고령화 사회의 주택정책 방향”, 『국토: planning and policy』, 254, pp. 20-29
- 산업자원부, 2005,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 서울시·서울대 보건대학원, 2006, 「제3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세계일보, 2009. 6. 18
- 수도권교통본부, 2007,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수도권교통본부
- 신승춘, 2004, “고령화 사회와 복지과학기술정책의 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1), pp.67-90



- 심상완, 2002,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2(2), pp. 145-189
- 양희승, 2004, 『고령화시대의 도전』, LG경제연구원
- 윤주현 · 강미나 · 송하승, 2004,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이견직 외, 200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II)』, 저출산고령사회위원·보건복지부
- 이영성, 2008,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Vol.43 No.7
- 일본 후생노동성, 『2008년도 개호보험 사업상황보고(연보)』, 2010
- 장윤승 · 성태규, 2009,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정경희 외,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호성, 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제130호
- 조선일보, 2008. 5. 9
- 최숙희, 2007, 『지속가능한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 2008. 10,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 275-290
- Atlanta Regional Commission, 2009, Aging in Place: A Toolkit for Local Governments([http://www.atlantaregional.com/File%20Library/Aging/ag\\_aging\\_in\\_place\\_toolkit\\_2\\_23\\_04.pdf](http://www.atlantaregional.com/File%20Library/Aging/ag_aging_in_place_toolkit_2_23_04.pdf))
- Help the Aged, 2008, Towards Common Ground: The Help the Aged manifesto for lifetime neighborhoods
- OECD, 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ing society
- Perrin, Towers, December 2005, “Planning for Tomorrow's Talent Needs in Today's Competitive Environment”, AARP
- Russell K., 2009, Developing a Livable San Antonio Metro Region for All Ages, Workshop Report #9: Community Redesign & The Built Environment, Partners for Livable Communities, Washington DC.
- Scharlack, A. E., 2009, Creating Aging-Friendly Communities: Why America's Cities and Towns must become better place to grow old, GENERATIONS, 33(2)
- Susan. M. M. 2009, Beacon Hill Village, GENERATIONS, 32(2), pp. 85-86

- The Council of the City of New York, 2009, Age Friendly NYC : Enhancing Our City's Livability for Older New Yorkers
- Thomas, W. H. & Blanchard, J. M., 2009, Moving Beyond Place: Aging in Community, GENERATIONS, 33(2)
-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 WHO, 2002, 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
- <http://www.nso.go.kr/> (통계청)
-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청)
- <http://www.icaa.cc/> (International Council on Active Aging)
-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 <http://www.noinjob.or.kr/>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 <http://www.goldenjob.or.kr/> (노인취업훈련센터)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mhlw.go.jp/> (일본 후생노동성)

부  
록



## 부 록 서울시 중·고령자 가구 실태 및 욕구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TNS RI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및 미래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답변은 향후 서울시의 정책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발주기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Tel. 02-2149-1270 (담당 노은이 박사)	조사수행기관	TNS RI Korea Tel. 02-3779-0551 Fax. 02-761-4590 (담당 책임연구원: 서강신 부장) <a href="http://www.tnsglobal.co.kr">http://www.tnsglobal.co.kr</a>
--------	---	--------	---

SQ1. 귀댁의 가구주께서는 현재 연령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가구주는 이 댁의 생활비를 주로 벌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 1. 45세 미만(1966년 포함 이후 출생) → 조사종료
- 2. 45세 이상(1965년을 포함 이전 출생) → 본조사 진행

1) 응답자 성명	가구주			응답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①남자 ②여자	
	출생연도	년	월 (만 세)	년	월 (만 세)

2)주소	구 코드	01. 종로구 02. 중구 03. 용산구 04. 성동구 05. 광진구 06. 동대문구 07. 중랑구 08. 성북구 0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상세주소	서울시 _____ 구 _____ 동																							
	연락처	집전화 _____ 휴대폰 _____																							

3)조사일	2010년	월	일	4)작성시작시간	:	5)작성종료시간	:
-------	-------	---	---	----------	---	----------	---

6)조사원 성명	7)조사원 ID	8)에디팅 확인	9)감독자 확인
10)검증원 확인	11)코딩원 확인		

☐ 이 조사는 이 닥의 가구주가 응답해주시고, 가구주는 이 닥의 생활비를 주로 벌고 있는 분을 말합니다.

A. 먼저 귀 닥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귀 닥의 가구주는 현재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 1. 한다 → [A2(취업자 문항)로]      2. 안 한다 → [A1-1로]

A1-1. (A1에서 2번 응답자만) 귀 닥의 가구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과거에 일하였으나 지금은 은퇴하였다 → [A3(은퇴자 문항)으로]
- 2. 과거에 일하였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있다 → [A4(미취업자 문항)로]
- 3. 평생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없다. → [B로]

**용어해설: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A2. 가구주가 현재 경제활동 참가자 경우(A1 문항에서 1번 응답자)만 응답하십시오.

A2-1. 가구주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구 분	보 기
㉠ 직종	1. 전문관리직                      2. 일반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생산직                      5. 단순노무직
㉡ 고용형태	1. 임금봉급근로자                      → @로 갈 것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로 갈 것 4. 무급가족종사자                      ↙
㉢ 근로시간 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 한달평균 수입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    ]    만원

A2-2. 가구주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생애 주된 일자리입니까?

- 1. 생애 주된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다 → [A5로]
- 2.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용어설명: 생애 주된 일자리란?** 생애 가장 오랜 기간 해온 일을 말합니다.

A2-3. 가구주가 퇴직하기 전에 하던 생애 주된 일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분	보기		
㉠ 직종	1. 전문관리직 4. 기능생산직	2. 일반사무직 5. 단순노무직	3. 판매·서비스직
㉡ 고용형태	1. 임금봉급근로자 → ㉠로 갈 것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3. 고용원을 둔 사업주 → A2-4로 갈 것 4. 무급가족종사자 ↘		
㉢ 근로시간 형태	*임금봉급근로자의 경우(㉠에서 1번 응답자)만 1. 전일제 2. 시간제		

A2-4. 가구주는 그 일을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A2-5. 가구주가 그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1. 정년퇴직
2. 직장 또는 본인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3.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4. 계약기간이 끝나서
5.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안되서)
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7.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8. 적성, 지식, 기능 등에 맞지 않아서
9.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0.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11. 자기(또는 가족) 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12.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 가사 문제로
13.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4. 기타(적을 것 : \_\_\_\_\_)

A2-6. 가구주가 그 일을 그만 둘 때, 퇴직 후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해주십시오.(복수응답)

1. 저축 등 노후생활비 준비
2. 부동산 투자 등 자산관리
3.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
4. 창업준비
5. 재취업 직업교육을 받음
6. 건강관리
7. 취미개발 등 여가생활 준비
8. 기타(적을 것 \_\_\_\_\_)
9.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음 → [A5로]

A2-7. 가구주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나 정보를 **주로**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단수응답)

1. 도움없이 혼자
2. 가족, 친지 등의 도움
3. 회사의 도움
4.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5.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사회단체
6. 기타(적을 것 \_\_\_\_\_)

==> (응답후 A5로)

**A3. 가구주가 현재 은퇴자의 경우 ([A1-1]에서 1번 응답자)만 응답하십시오.**

A3-1. 귀댁의 가구주는 언제 은퇴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A3-2. 가구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1.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바로 은퇴하였다 → [A3-5로]
2.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하였다.

**용어설명: 생애 주된 일자리란?** 생애 가장 오랜 기간 해온 일을 말합니다

A3-3. 가구주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언제 퇴직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A3-4. 가구주가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1. 정년퇴직
2. 직장 또는 본인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3.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4. 계약기간이 끝나서
5.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안되서)
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7.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8. 적성, 지식, 기능 등에 맞지 않아서
9.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0.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11. 자기(또는 가족) 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12.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 가사 문제로
13.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14. 기타(적을 것 : \_\_\_\_\_)

A3-5. 가구주가 은퇴 당시, 은퇴 이후 생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해주십시오.(복수응답)

1. 저축 등 노후생활비 준비
2. 부동산 투자 등 자산관리
3.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
4. 창업준비
5. 재취업 직업교육을 받음
6. 건강관리
7. 취미개발 등 여가생활 준비
8. 기타(적을 것 \_\_\_\_\_)
9.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음 → [B영역으로]

A3-6.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나 정보를 주로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단수응답)

- 1. 도움없이 혼자
- 2. 가족, 친지 등의 도움
- 3. 회사의 도움
- 4.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 5.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사회단체
- 6. 기타(적을 것\_\_\_\_\_)

==> (응답후 B영역으로)

**A4. 가구주가 현재 미취업자의 경우[A1-1]에서 2번 응답자만 응답하십시오**

A4-1. 귀댁의 가구주는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A4-2. 가구주는 언제부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A4-3. 가구주가 가장 마지막까지 하던 일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 1. 정년퇴직 → [A4-4로]
- 2. 직장 또는 본인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
- 3.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 4. 계약기간이 끝나서
- 5.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안되서)
- 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7.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8. 적성, 지식, 기능 등에 맞지 않아서
- 9.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10.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 11. 자기(또는 가족) 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 12. 결혼, 출산, 육아, 가족간병 등 가사 문제로
- 13.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서
- 14. 기타(적을 것 : \_\_\_\_\_)

A4-4. (A4-3에서 1번 응답자만) 가구주가 정년퇴직 당시, 퇴직 후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해주십시오.(복수응답)

- 1. 저축 등 노후생활비 준비
- 2. 부동산 투자 등 자산관리
- 3.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
- 4. 창업준비
- 5. 재취업 직업교육을 받음
- 6. 건강관리
- 7. 취미개발 등 여가생활 준비
- 8. 기타(적을 것\_\_\_\_\_)
- 98.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음 → [A5로]



A4-5. (A4-3에서 1번 응답자만) 가구주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나 정보를 주로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 |                      |                    |
|----------------------|--------------------|
| 1. 도움없이 혼자           | 2. 가족, 친지 등의 도움    |
| 3. 회사의 도움            | 4. 구청,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
| 5.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사회단체 | 6. 기타(적을 것_____)   |

==> (응답후 A5로)

**(취업자/미취업자인 경우 응답)**

A5. 가구주가 계속 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돈을 벌기 위해서         | 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
| 3. 나의 전문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 4.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소일거리로) |
| 5.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 6.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
| 7. 기타(적을 것_____)     |                       |

A6. 가구주는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할 생각입니까? 만\_\_\_\_\_세

**B. 귀댁의 경제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귀댁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가구원의 수입, 이자나 임대료 수입 등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액수를 포함하여 지난 3개월간 한달 평균 액수)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만원

B2. 귀댁의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아래 항목 중에서 귀댁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2. 배우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 3. 기타 가구원 근로 또는 사업소득                     | 4. 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자산소득 |
| 5.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                        |
| 6. 개인연금                                  | 7. 따로 사는 가족·친지의 도움     |
| 8. 정부보조금                                 | 9. 교회, 사회단체 지원금        |
| 10. 기타(적을 것_____)                        |                        |

B3. 위에서 응답한 여러 가지 수입원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1.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2. 배우자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3. 기타 가구원 근로 또는 사업소득
4. 이자, 임대료, 배당금 등 자산소득
5.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6. 개인연금
7. 따로 사는 가족·친지의 도움
8. 정부보조금
9. 교회, 사회단체 지원금
10. 기타(적을 것\_\_\_\_\_)

B4. 귀댁의 수입은 생활하시기에 충분합니까?

1. 매우 충분
2. 충분
3. 보통
4. 부족
5. 매우 부족

B5.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부모
2. 자녀
3. 기타 친인척
4. 친구, 동료
5. 이웃
6. 종교단체
7. 사회복지기관
8. 시민,사회단체
9. 정부
10. 기타(적을 것: \_\_\_\_\_)
98. 도움받을 곳 없음

B6. 귀하와 배우자는 노후 경제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는 이미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1. 현재 살고 있는 집
2.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외의 부동산
3. 저금, 보험 등 금융자산 마련
4. 주식, 채권 등 투자
5.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6. 개인연금
7. 퇴직금
98. 준비한 것 없음 → [B6-1로]

B6-1. (B6에서 98번 응답자만)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 자녀가 부양할 것이기 때문에
3. 아직 노후준비를 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서
4.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5. 기타(적을 것\_\_\_\_\_)

B7. 저축하는 돈을 제외하고, 식비, 교육비, 집세, 각종 세금 등 귀댁에서 지출하는 생활비는 한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휴가비, 관혼상제 등 특별지출은 제외한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지출액)

월 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만원

B8. 귀댁에서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중이 큰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보기	1. 식료품비(외식비 제외) 3. 피복비 5. 교육비 7. 여가, 문화비 9. 통신비 11. 가족들의 용돈 13.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15. 경조사비, 기부금	2. 외식비 4. 주거비(월세, 임대료, 관리비) 6. 의료비 8.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10. 내구재(전자제품, 가구,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구입비 12. 따로 사는 가족의 생활비 보조 14. 부채상환(주택구입 대출비 상환) 16. 기타(적을 것 : _____)
----	---	---

**B9. 가구주가 은퇴자인 경우(A1-1에서 1번 응답자)만 응답하십시오**

B9-1. 은퇴 후, 귀댁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총액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축하는 돈은 제외)

- 1. 은퇴 전보다 줄었다 → [B9-2로]
- 2. 은퇴 전보다 늘었다 -----> [B9-3으로]
- 3. 은퇴 전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 [B9-3으로]

B9-2. (B9-1에서 1번 응답자만) 생활비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단수응답)

- 1. 수입이 줄어들어 의도적으로 절약하고 있다
- 2.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돈 쓸 곳도 자연적으로 줄었다
- 3. 교육비, 연금납입 등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아졌다
- 4. 기타(적을 것 : \_\_\_\_\_)

B9-3. 은퇴 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생활비 항목과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변화한 순서대로 각각 **3가지씩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는 B8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1. 줄어든 지출 항목			
2. 늘어난 지출 항목			

보기	1. 식료품비(외식비 제외) 3. 피복비 5. 교육비 7. 여가, 문화비 9. 통신비 11. 가족들의 용돈 13.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15. 경조사비, 기부금	2. 외식비 4. 주거비(월세, 임대료, 관리비) 6. 의료비 8.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10. 내구재(전자제품, 가구 등) 구입비 12. 따로 사는 가족의 생활비 보조 14. 부채상환(주택구입 대출비 상환) 16. 기타(적을 것 : _____)
----	---	--

**전체 응답**

B10.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귀하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나 귀금속 등 기타자산 등 가구주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총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11.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채는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B12. 가구주와 배우자의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실 생각입니까?

1. 모두 자녀에게 상속하겠다
2. 일부는 자녀에게 상속하고,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겠다
3.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4. 상속하지 않고 생전에 모두 써버릴 것이다.
5. 기타(적을 것 \_\_\_\_\_)





D3.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 1. 담배를 피운 적 없다                      2.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3. 가끔 피운다                                4. 자주 피우는 편이다

D4. 귀하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민간의료보험 예시 : 암보험, 일반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1. 예                      2. 아니오

D5.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1. 자주 사용한다                      2. 가끔 사용한다                      3. 사용하지 않는다

D6.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1. 버스                                      2. 지하철                                      3. 택시
- 4. 자가용(자가운전)                      5. 자가용(다른사람 운전)
- 6.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도보로만                      7. 기타(적을 것\_\_\_\_\_)

D7. 귀하는 평소 자가 운전을 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D8. 귀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반사회, 주민회의, 지역 방범활동이나 청소년선도와 같은 지역활동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9. 귀하는 지난 1년간 기부나 자원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정기적으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했다	하지 않았다
1. 기부	①	②	③
2. 자원봉사	①	②	③

D10. 귀하는 현재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경제적 수준(수입,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사회활동	①	②	③	④	⑤
5.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6. 건강	①	②	③	④	⑤
7. 주거환경	①	②	③	④	⑤
8. 전반적 생활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D11.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단수응답)

1. 경제적 어려움
2. 가장의 실직
3. 건강문제
4. 나이들어 할 일이 없음
5. 가족불화
6. 자녀문제(학업, 취업, 결혼 등)
7. 기타(적을 것 : \_\_\_\_\_)
98. 없음

D12. 귀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고 상의합니까?(단수응답)

1. 배우자
2. 부모
3. 자녀
4. 기타 친인척
5. 친구, 동료
6. 이웃
7. 전문상담가
8. 종교인
9. 기타(적을 것: \_\_\_\_\_)
98. 없음

**E. 노부모 부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귀하와 배우자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E1-1로]
2. 아니요 → [E1-2로]

E1-1. (E1에서 1번 응답자만)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동거
2. 경제적 지원(의료비, 생활비 등)
3. 간병수발
4. 가사일 등 생활지원
5. 기타(적을 것 \_\_\_\_\_)



E1-2. (E1에서 2번 응답자만)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모실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부모님 안 계심

E2.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자녀 없음

E3. 귀하가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을 때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단수응답)

1. 간병인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또는 배우자와 집에서 살고 싶다  
2.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3. 자녀 이외의 형제나 친척과 함께 살겠다  
4. 요양시설, 병원에 들어가겠다  
5. 잘 모르겠다  
6. 기타(적을 것\_\_\_\_\_)

**E4. 가구주가 은퇴자인 경우(A1-1에서 1번 응답자)만 응답하십시오**

E4-1. 귀하와 배우자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1.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받고 있다  
2.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받고 있다  
3. 받지 않는다                      4. 자녀 없음

E4-2. 귀하와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 해주십시오.

1. 경제적 지원                      2. 집안일(가사일)을 도와준다  
3. 손자녀를 돌봐준다                      4. 자녀가 하는 일을(가게, 사업 등) 도와준다  
5. 기타(적을 것\_\_\_\_\_)

6. 자녀 없음                      98. 없음



F3. 이 설문에 응답하신 분은 이 닉의 가구주 입니까?

1. 가구주                      2. 가구주의 배우자

F4. 귀댁의 가구주 및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주만 기록)

구 분	가구주	응답자
㉔ 혼인상태	1. 기혼(유배우)      2. 사별 3. 이혼/별거          4. 미혼	1. 기혼(유배우)      2. 사별 3. 이혼/별거          4. 미혼
㉕ 학력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 졸업        6. 대학 이상 졸업  * 중되는 아래 학력으로 기록 (예: 대학중퇴-->고등학교졸업)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 졸업        6. 대학 이상 졸업  * 중되는 아래 학력으로 기록 (예: 대학중퇴-->고등학교졸업)

# 영문 요약 (Abstract)



# Prospective Changes and Policy Agendas for Super-aged Society, Seoul

Kyung-Hye Kim · Sun-Ja Kim · Eun-Yee Noh · Hyun-Jung Kim

Seoul is aging. The population of adults over age 65 is expected to increase to over 20% by 2030. Older citizens in Seoul will become major actors in the super-aged society. Not only the number of older citizens are increasing but they are also becoming generally healthier, wealthier, better educated and more active than age cohorts of previous generations. Changing demographics are accompanied by the serious social and economic impacts to the society as a whole. These prospective impacts would be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our society. Adequate policy should be prepared in local government level to increase Seoul's responsiveness to the major changes due to the population aging.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secondary analysis of available data, this study examines Seoul's changing demographics and characteristics of aging population. In addition, results from a survey conducted with 1,000 adult citizens over age 45 illustrat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experiences in retirement, social activities, and caregiving experiences of middle-aged and older citizens.

Given changing characteristics of aging popul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major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that our society will be facing. Specific issues are discussed including changes in labor forces, income and wealth status, consuming behaviors and life style among older citizens.

Policy agenda for super-aged Seoul are identified, specifically focusing on three fundamental issues: minimizing negative impacts, utilizing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aging-friendly city environment. First, it is critical to develop strategi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such as elderly poverty, economic recession due to shrinking elderly's consumption and increasing financial demands. At the same time, rigorous strategies to fully utilize opportunities of population aging should be develop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pecifically, older citizens' potential as social capitals and opportunities for aging-friendly industry are reviewed. Finally, Seoul should be redesigned to become an "aging-friendly city". Thorough assessments and evaluations of age-friendliness of this city should be implemented. In addition, aging-friendly community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elderly and community itself to function as social capitals. Aging-friendliness of built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increasing mobility and accessibility of older citizens, implementing universal design for community planning, and promoting various housing options.

## **Table of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1. Study Outline
2. Literature Reviews

### ***Chapter 2 Changes and Outlooks of Population Aging in Seoul***

1. Changing Structure of Aging Population
2.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and Older Citizens

### ***Chapter 3 Social and 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1. Labour Force and Economic Growth
2. Income and Wealth of the Older Citizens
3. Characteristics of Consuming Behavior
4. Attitudes and Lifestyles of the Older Citizens

### ***Chapter 4 Policy Agenda Responding to Population Aging***

1. Strategi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2. Strategies to Utilize the Opportunities
3. Strategies to Develop an Aging-friendly City

### ***Chapter 5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 ***References***

### ***Appendices***

시정연 2010-SR-01

##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

발행인 정문건

발행일 2010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

값 6,000원 ISBN 978-89-8052-738-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